

2012 통권 제6호

인천연구

2012 통권 제6호 인천연구

CONTENTS



기획논단

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기윤환	9
집수리 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손동필	37
인천 마을만들기 정책방향과 과제	이왕기 · 정승현	59

일반연구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비대칭성 검토	임상수	83
----------------------------	-----	----

도시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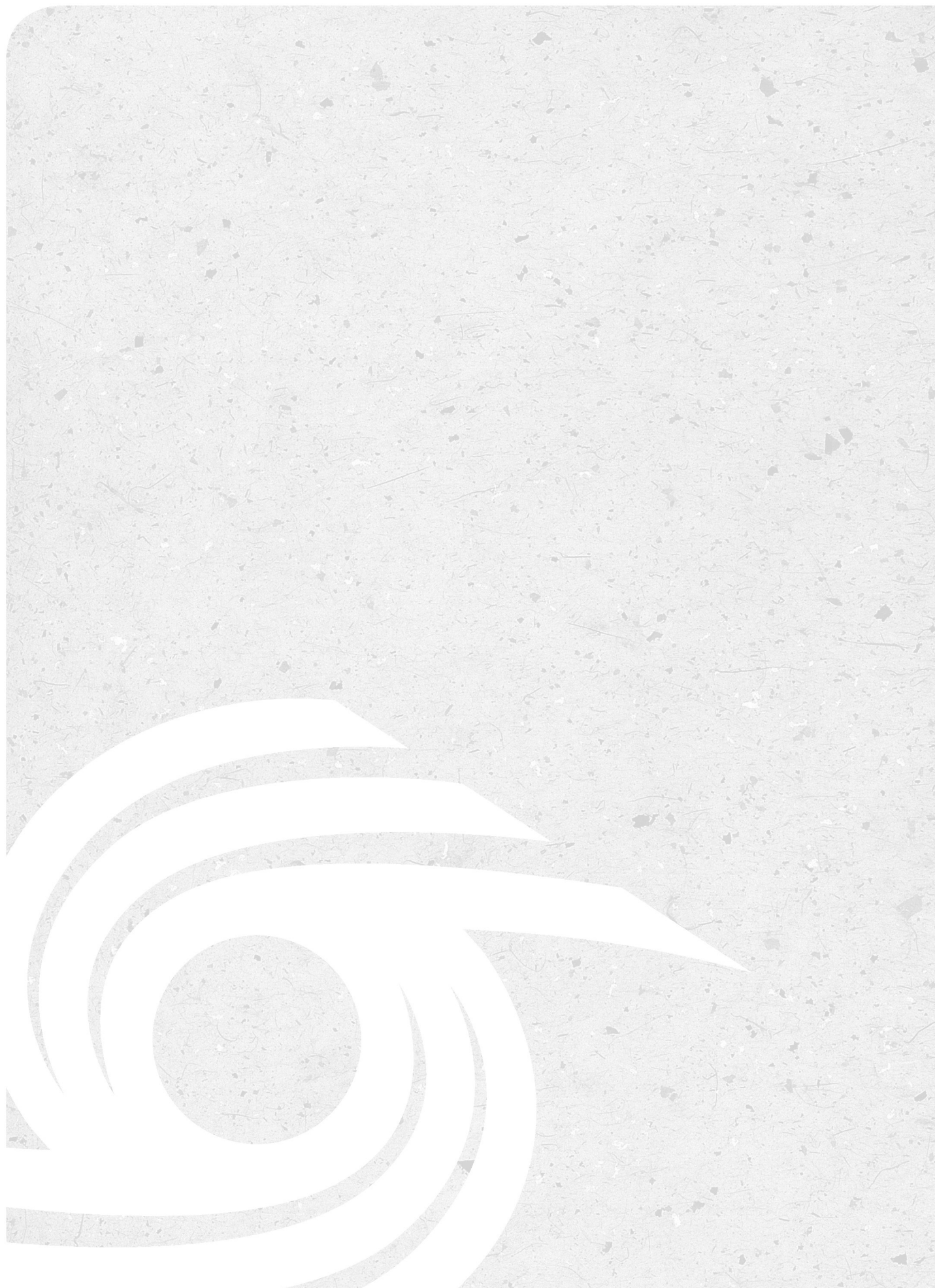
특색있는 문화도시로서 연길의 발전모색	이용식	103
도시재생 시범 지역의 공간 구성과 공간적 특징 - 전주시 노송동 사례 -	한유석	117
지역문화콘텐츠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에 관한 사례연구 - 창작판소리 '왜망실면' 을 중심으로 -	김현갑	139

서 평

서구도시에서 배우는 우리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 마쓰나가 야쓰미쓰, 『도시계획의 신조류』(한울아카데미, 2009)	진영환	165
김석철, 『건축과 도시의 인문학』(돌베개, 2011).....	이종현	175
테오도르 폴 김, 『사고와 진리에서 태어나는 도시』(시대의 창, 2010) ...	박진한	181

학술지 원고 투고 안내

지역연구(자유공모) 원고모집 공고문	188
[인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189
[인천연구] 논문 투고 신청서	192
[인천연구] 논문심사규정	194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 학술지 [인천연구] 연구윤리규정	196
학술지편집위원회 회칙	199



기획논단

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기윤환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집수리 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손동필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인천 마을 만들기 정책방향과 과제

이왕기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정승현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초빙연구위원

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기윤환*

- I. 서론
- II. 이론적 고찰
- III. 분석의 틀 설정
- IV.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추진체계분석
- V. 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

I. 서론

2000년 이후 국내 도시는 양적 성장에 치우친 공급위주의 대규모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점차 정비와 관리 중심의 도시성장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도시의 물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복합적으로 개선하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주민조직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으로 지역커뮤니티 형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확대되어 왔다. 2000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개별부처별로 마을만들기사업이 진행되다가 점차 지자체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¹⁾ 하지만 대부분 마을만들기사업들은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유지·관리할 수 있는 주민조직의 부재, 공공지원부족 등으로 인해 단발적·일시적 형태에 그치고 있다.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인천시의 경우 부평구는 우리마을 가꾸기사업 지원조례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조례를 운영 중이고 인천시는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를 운영 중이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둔 지역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2011년 인천지역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20여개 지역에서 축제, 공부방, 마을공동체학교 등과 같은 시민단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부평문화의 거리, 배다리시민모임, 십정동 해남공부방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규모로 주민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마을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시나 구청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참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초기단계로서 아직까지 참여주체별 역할이 모호하고 주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미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역사례 조사·분석을 통하여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고, 사업주체별 역할과 기능분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의 개념

마을만들기는 1990년대에 국내에 도입되어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시계획기법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지만, 도시만들기, 주민참여도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 유사한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통일된 정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체계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만들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개념 정의 혼재양상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국내에 도입된 마을만들기는 이론적

-
- 1) 마을만들기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은 7개로 행정안전부의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아름마을가꾸기사업·정보화 시범사업,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어촌체험마을,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복원우수마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전원마을·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녹색농촌체험마을·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고 싶은 섬·문화역사마을 등 총 12개 사업이 있으며, 지자체별로는 조례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고 있어 활용 주체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해 볼 때,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공간이나 장소를 만드는 일, 마을의 역사·문화와 전통적 가치들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일, 생활환경에 고통과 불편을 주는 것들을 개선하며 가꾸어 나가는 일, 이웃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일,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과정을 학습하고 체험하여 책임감 있고 건강한 마을 사람을 기르는 일 등 마을환경의 물리적 시설 개선뿐 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활동들을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²⁾

2.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의 참여주체

1) 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업무상 직접적 상관성을 가지는 지역내 행정기관에게 아무런 참여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국내에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행정기관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만큼 일정부분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공적 사업의 성격을 갖고 실제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들의 참여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다만 과거의 경험에서와 같이 사업 전반에 걸쳐 행정집단이 주도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의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는 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이들의 주도적 참여를 지양하고 협력자이자 후원자로서의 역할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2) 전문가 및 시민단체

지역내에는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이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제도화되지 않은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은 통상 지역내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으로 여

2) 도시포탈(<http://www.city.go.kr>).

론주도층(opinion leaders)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른 지역내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이끌어 간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다른 방관적 주민들을 사업 참여로 이끌어 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역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 주도층의 참여는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한 동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주민 및 주민단체

기존의 도시관리 방식은 도시의 관리와 관련한 권리를 관료집단이나 전문가 집단에 담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관료집단이나 전문가집단은 지역이나 마을의 이슈 및 집단에 대한 현장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한 도시관리는 서류상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 소비자이자 수혜자인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사업의 수혜자로서 직접 생활에 영향을 받는 주민을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문제의 확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실행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여기서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사업의 추진단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초기단계에서는 사업에 따른 영향이 없어 이해관계자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진행에 따른 여건변화로 직접영향을 받아 이해관계자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단계 이후에 지역으로 전입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범주로 포함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3.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Targeted mission)를 가지고 있는가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왜 당해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을 통해 어떠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지, 우리 마을에는 실제로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다양한 참여주체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실행계획(Action planning)은 설정된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참여하는 각 주체들은 주체의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셋째, 역량 있고 지역에서 신뢰받는 리더의 존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리더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특정단체나 인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이들이 지역을 떠나거나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의존도의 조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넷째, 마을만들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의 보유나 채용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이러한 역할은 시민단체나 전문가 집단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이 추진을 결정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들을 지역사회 조력자(community mobilizer)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일방적 사업추진체계를 지양하고, 중간 평가를 거쳐 사업내용을 보완하는 환류(feed back)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실행계획의 수준을 높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

Ⅲ. 분석의 틀 설정

1. 분석대상 선정

마을만들기 모집단의 선정은 국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세계도시정보(<http://ubin.krihs.re.kr>)의 국내 도시정보에 있는 국내 마을만들기 사례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기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 사례를 갱신하고 있어 비교적 가장 최근의 사례까지도 취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2월 현재까지 취합된 총 142개 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마을만들기 사례는 주로 주민이나 주민단체가 지역의 도시 및 마을 환경개선에 참

여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아직까지 국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각종 주민참여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어, 다소 광범위한 모집단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사례지역의 전국단위 분포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적 성향이 강한 광역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지역이 57.0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1〉 지역별 마을만들기 사업 사례지역

구 분	사 례 수	구 분	사 례 수
서 울	24	충 북	6
부 산	14	충 남	7
대 구	5	전 북	9
인 천	5	전 남	8
광 주	3	경 북	2
대 전	4	경 남	10
경 기	26	제 주	4
강 원	12	합 계	139

2. 변수 구성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주체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므로, 이들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우선, 모집단 139개 마을만들기 사례의 사업성격에 따라 단독도시주거환경정비, 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원도심정비(재래시장정비포함), 농촌취락재정비, 문화관광특화기능정비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인천광역시도 도농통합형 도시로 5가지 유형의 도시환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바, 모든 유형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 마을만들기 사업성격별 사례수

구 분	사례수 (건)	비율 (%)
단독도시주거환경정비	61	43.0
공동도시주거환경정비	11	7.7
원도심정비	17	12.0
농촌취락정비	26	18.3
문화관광특화기능정비	27	19.0
합 계	142	100.0

주민참여정도는 적극적 참여, 소극적 참여, 참여배제로 구분하였다. 의제설정과 정책설정단계에 모두 주민이나 주민조직의 실제적 행위가 있는 경우는 적극적 참여로 분류하고, 의제설정이나 정책설정단계에서 한쪽에만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는 소극적 참여로, 실질적인 행위로써 참여가 없는 사업은 참여배제로 구분하였다.

협의체 구성여부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정에서 협의체나 공동체 등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사업시작주체는 사업의 의제를 발의하고 구체화시키는 참여주체가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자치단체, 공동협의체 가운데 어디였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사업핵심주체는 사업의 추진과정 및 집행을 주도한 참여주체가 어디였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요 개별사업은 물리적 환경을 직접 개선하는 하드웨어 개선부문과 소프트웨어 지원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하드웨어 개선부문은 주요 사업을 도서관, 갤러리, 벽화조성, 소공원, 건축물 정비 등으로 분류하고 사업의 시행여부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소프트웨어 지원부문은 외부인교육, 생산기능 등을 갖춘 자족사업추진, 보육센터운영, 지역주민교육사업, 공연·축제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사업의 도입여부를 변수로 구성하였다.

〈표 3〉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관련 변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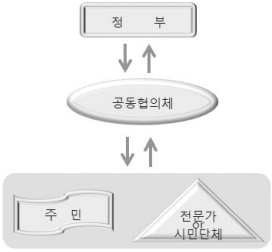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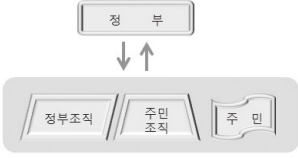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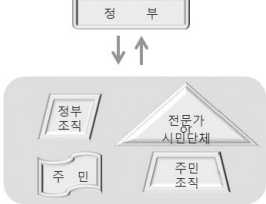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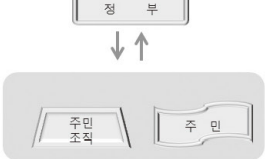
구 분	세부 프로그램
하드웨어	도서관, 갤러리, 벽화조성사업, 소공원조성사업, 노후건축물 정비 등
소프트웨어	외부인교육프로그램 시행, 생산기능을 갖춘 자족사업 추진, 보육센터의 운영, 지역주민교육사업, 공연·축제사업의 추진

3. 추진체계 유형 설정

추진조직체계는 주요 참여주체의 관계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을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정부는 행정기관을 의미하며, 정부조직은 공무원이 포함된 단체로서 의제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 단체를 의미한다. 주민은 지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 개인을 의미하며, 주민조직은 조합, 자치위원회, 부녀회, 청년회 등과 같이 지역주민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공동협의체는 주민 및 주민조직, 행정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의미한다.

TypeⅠ은 공동협의체가 주도하고 정부, 주민,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유형이며, TypeⅡ는 정부조직, 지역주민, 자치위원회·부녀회 등으로 구성된 주민조직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유형이다. TypeⅢ은 공무원이 포함된 단체,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유형이다. TypeⅣ는 공무원이 포함된 정부조직, 지역주민, 자치위원회 등의 주민조직,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사업유형이며, TypeⅤ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체계 유형이다. TypeⅥ은 전문가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유형이며, TypeⅦ는 지역주민과 자치위원회 등과 같은 주민조직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유형이다. TypeⅧ은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유형이며, TypeⅨ는 주민조직과 지역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유형이다. TypeⅩ은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와 주민조직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유형이다.

〈표 4〉 마을만들기 운영체계 유형 구분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Type V〉	 〈Type VI〉
 〈Type VII〉	 〈Type VIII〉
 〈Type IX〉	 〈Type X〉

IV.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분석

1. 사업성격별 특성분석

1) 사업성격별 시작주체특성

단독도시주거환경정비에 있어서는 시민단체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공동도시주거환경정비에 있어서는 주민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단독주거환경정비는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전통적 철거재개발을 지양하고, 보전재개발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정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공동주택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을 조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원도심정비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과 달리 정부주도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이것은 원도심정비사업의 내용이 도심공원조성, 가로정비사업과 같은 공유재산에 대한 정비가 핵심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나 주도 없이는 계획수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촌취락정비와 관련해서는 사업성격과 시작주체간의 특별히 높거나 낮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주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특화기능정비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작주체는 전문가집단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그룹에서 문화관광특화기능의 주제를 선점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육과 협의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여 예산을 지원받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사업시행과정에서 핵심을 이루는 주체로 단독 및 공동주택 도시주거환경정비는 시민단체가, 원도심정비와 문화관광특화기능정비는 전문가가, 농촌위락정비는 주민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시작주체와 큰 차이를 보여지 않는 것인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한 주체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주택지 도시주거환경정비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시작은 주민이 주도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문제 해결과 정부와의 협상능력 부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의 주도권은 시민단체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도심정비사업은 사업의 윤곽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지만, 사업의 세부적인 조율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역할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은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5〉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업단계별 추진주체

구 분	단독주택지 도시주거 환경정비	공동주택지 도시주거 환경정비	원도심정비 (상업가로정비)	농촌취락 정비	문화관광 특화기능정비
시직주체	시민단체*	주민	정부	-	전문가
핵심주체	시민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	전문가

주) * : χ^2 검정 결과, 기대치(expect values)와 실제 빈도 값의 차이가 가장 큰 주체임.

2) 사업성격별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단독주택지 도시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건축물정비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운영 빈도가 높고,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주도가 되어 사업을 시작하지만, 사업의 진행에 따라 주민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 참여에 대한 역량을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 정비와 같은 물리적 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동주택지 도시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소공원조성이나 건축물 정비 등의 물리적 환경개선사업 운영 빈도는 낮은 반면,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의 운영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동주택으로 대표되는 전형적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도하여 운영하면서, 아파트단지를 단위로 하는 보육·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커뮤니티 확대를 위한 공연·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병행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원도심정비와 관련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벽화조성, 건축물정비와 같은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의 운영과 더불어, 상인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원도심정비 마을만들기 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이 이용빈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장방문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빈도가 높다는 점과 공연·축제의 개최 빈도수가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원도심 정비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쇼핑의 용이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과 수요의 확대

생산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확보가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농촌취락정비와 관련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건축물정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공가주택이나 노후주택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정부주도사업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농촌취락정비사업의 특징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생산시설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비율이 높다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외부인의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이를 확대하여 공연·축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주체가 됨에 따라 그들이 가장 우선시 하는 농가소득 확대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사업에 많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문화관광특화기능정비와 관련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미술평조성을 기반으로 한 건축물정비사업의 운영빈도가 높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조성을 기반으로 내·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동참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작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미술관련 전문가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6〉 사업성격별 프로그램의 운영

구 분		단독주택지 도시주거 환경정비	공동주택지 도시주거 환경정비	원도심정비 (상업가로정비)	농촌취락 정비	문화관광 특화기능정비	통계량
물리적 환경 개선사업	도서관	7	2	0	1	4	$\chi^2 = 4.700$ ($p = 0.319$)
	갤러리	6	0	0	3	12	$\chi^2 = 25.108$ ($p = 0.000$)
	벽화 조성	15	5	5	4	5	$\chi^2 = 4.570$ ($p = 0.334$)
	소공원	19	2	3	3	5	$\chi^2 = 4.995$ ($p = 0.288$)
	건축물 정비	29	3	12	14	13	$\chi^2 = 5.494$ ($p = 0.240$)
프로그램 운영	외부인 교육	8	0	5	9	13	$\chi^2 = 17.594$ ($p = 0.001$)
	생산 프로그램	4	1	0	9	2	$\chi^2 = 18.143$ ($p = 0.001$)
	보육센터	6	1	0	0	1	$\chi^2 = 5.030$ ($p = 0.284$)
	주민 교육	35	5	5	10	8	$\chi^2 = 8.472$ ($p = 0.076$)
	공연 축제	22	4	8	7	6	$\chi^2 = 3.682$ ($p = 0.451$)

2.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별 특성분석

1) 추진체계별 적용빈도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를 모두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전체의 69.01%가 유형Ⅴ, Ⅵ, Ⅷ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시민단체, 전문가집단이나 주민조직 등이 주민을 지원하여 정부와 협상하는 형태의 체계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형태는 주민의 직접적 발언권이 시민단체나 전문가집단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유형을 제외하고 다음으로 많은 운영체계 빈도수를 나타내는 것은 유형Ⅰ로써, 이는 주민과 전문가 혹은 시민단체 사이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 협의하는 체계로 14건이 이와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공동협의체의 구성과정이나 내용의 합의도출이 어렵고, 협의체의 결정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어려움이 크지만, 수시로 마을만들기의 참여주체들의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한 측면을 가진다.

〈표 7〉 추진체계 유형별 사례수

유형	합 계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사례수	142	14	6	4	3	40	32	26	5	4	8
비율(%)	100.0	9.9	4.2	2.8	2.1	28.2	22.5	18.3	3.5	2.8	5.6

2) 추진체계별 사업참여특성

주민참여의 정도는 사업체계에 상관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시민단체와 주민이 주도가 되어 정부와 협상하는 유형Ⅴ에서 주민참여의 정도가 적극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의 취지를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시민단체는 행정적 결정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의 전반을 주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주민들 참여의 폭이 그 만큼 확대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업의 시작주체와 핵심주체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전제로 하는 유형Ⅰ에서는 사업의 시작은 정부가 주도하는 반면, 사업의 운영은 공동협의체

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초기에 사업을 이끌어 가다가 공동 협의체가 구성되면, 사업의 주도권을 공동협의체로 넘겨서 사업을 운영함을 의미한다. 초기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유형Ⅱ, Ⅲ, Ⅳ에서는 사업의 시작과 핵심주체를 모두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사실상 지역주민은 형식적 참여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가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형Ⅴ, Ⅵ, Ⅶ은 주민과 함께 시민단체, 전문가 또는 주민조직이 사업을 주도하는 특징을 가지는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참여 주체가 사업의 시작과 운영을 주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만 유형Ⅶ에서는 시작주체가 주민인 경우보다 핵심주체가 주민인 경우가 더 많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주도하는 경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조직을 조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8〉 추진체계 유형별 사업주체의 참여도

구 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통계량
주민참여 정도	불참	1	0	0	0	1	1	3	0	0	1	$\chi^2 = 18.210$ ($p = 0.442$)
	소극	9	6	4	2	32	26	19	4	1	6	
	적극	4	0	0	1	7	5	4	1	3	1	
사업의 시작 주체	정부	6	6	3	1	5	10	5	4	1	1	$\chi^2 = 148.359$ ($p = 0.000$)
	시민단체	3	0	1	1	23	0	1	0	0	5	
	전문가	1	0	0	1	2	17	1	0	0	0	
	주민	2	0	0	0	10	5	19	1	3	2	
	협의체	2	0	0	0	0	0	0	0	0	0	
사업의 핵심주체	정부	0	3	0	0	1	6	1	4	0	0	$\chi^2 = 259.304$ ($p = 0.000$)
	시민단체	0	0	4	1	23	0	0	0	0	3	
	전문가	0	0	0	2	2	18	1	0	0	1	
	주민	2	2	0	0	14	8	23	1	4	4	
	협의체	12	1	0	0	0	0	1	0	0	0	

3) 추진체계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추진체계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업을 주도하는 참여주체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추진체계적 특성상 정부부문의 참여가 비교적 적극적인 유형Ⅰ,Ⅱ,Ⅲ,Ⅳ는 물리적환경개선사업 프로그램 운영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과 주민조직이 주도하는 유형Ⅱ에서는 모든 사례에서 건축물 정비를 포함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유형Ⅱ의 경우 정부에서 사업의 목적을 정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얻는 형태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전통적 주민참여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유형Ⅴ는 주민교육이나 공연·축제 등의 프로그램 운영 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가와 주민조직이 참여하는 유형Ⅵ과 유형Ⅶ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련 있는 외부인 교육 및 생산프로그램의 운영 빈도가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보다는 주민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장기적 동력확보에 보다 관심을 갖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9〉 추진체계 유형별 프로그램의 운영

구 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통계량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도서관	2	0	1	0	2	3	2	1	1	2	$\chi^2 = 7.207$ ($p = 0.616$)
	갤러리	3	0	0	0	4	7	2	3	0	2	$\chi^2 = 15.254$ ($p = 0.084$)
	벽화조성	2	0	3	2	11	12	2	0	1	1	$\chi^2 = 20.768$ ($p = 0.014$)
	소공원	6	0	1	2	14	4	3	0	1	1	$\chi^2 = 17.556$ ($p = 0.041$)
	건축물 정비	6	6	1	1	17	16	16	2	2	4	$\chi^2 = 10.104$ ($p = 0.342$)
프로그램 운영	외부인 교육	3	2	1	0	6	11	10	0	0	2	$\chi^2 = 10.554$ ($p = 0.308$)
	생산 프로그램	2	0	0	0	2	2	8	0	0	2	$\chi^2 = 16.698$ ($p = 0.054$)
	보육센터	3	0	1	0	1	1	2	0	0	0	$\chi^2 = 12.269$ ($p = 0.199$)
	주민교육	9	1	0	1	24	11	9	2	2	4	$\chi^2 = 13.903$ ($p = 0.126$)
	공연축제	6	3	0	0	19	5	10	2	1	1	$\chi^2 = 15.095$ ($p = 0.088$)

3. 사업성격과 추진체계 관계분석

단독주택지 도시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유형V와 공동협의체가 운영하는 유형I 및 전문가가 운영하는 유형Ⅵ의 추진체계 빈도가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반면, 주민조직과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유형Ⅶ과 유형Ⅸ의 추진체계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단독주택지는 주거환경정비 과정에서 공용재산이 없기 때문에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 주민들간의 협의가 필요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초기 단계로 시민단체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수 이루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공동주택지 도시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유형V와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는 유형Ⅸ, 주민조직과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유형Ⅹ의 추진체계 빈도가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동주택지와 관련된 사업은 주로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도심정비와 관련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문가가 개입하는 유형Ⅶ의 추진체계 운영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원도심 정비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높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이러한 요구의 필요성이 전문가 집단에 전달되면서 이들의 참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농촌취락정비와 관련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조직으로 구성된 유형Ⅶ과 전문가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유형Ⅵ의 추진체계 운영빈도는 현저히 높은 반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추진체계 운영빈도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농촌지역은 전통적 시민단체의 활동이 미미한 반면, 지역커뮤니티의 형성과 지역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 특화기능정비와 관련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문가 참여가 이루어지는 유형Ⅵ의 운영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문화관광 특화기능정비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기획단계부터 전문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만 사업의 성공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특화기능의 운영 및 활용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특화기능의 선정단계에서는 주민조직이 보다 폭넓은 참여가 요구된다.

〈표 10〉 사업특성과 추진체계의 관계

구 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통계량
단독주택지 도시주거환경정비	9 (6.0)	1 (2.6)	1 (1.7)	0 (1.3)	29 (17.2)	9 (13.7)	7 (11.2)	3 (2.1)	0 (1.7)	2 (3.4)	$\chi^2 = 78.08$ ($p=0.00$)
공동주택지 도시주거환경정비	0 (1.1)	0 (0.5)	1 (0.3)	0 (0.2)	4 (3.1)	0 (2.5)	2 (2.0)	0 (0.4)	2 (0.3)	2 (0.6)	
원도심정비 (상업가로 정비)	2 (1.7)	3 (0.7)	0 (0.5)	2 (0.4)	2 (4.8)	6 (3.8)	2 (3.1)	0 (0.6)	0 (0.5)	0 (1.0)	
농촌 취락정비	2 (2.6)	1 (1.1)	2 (0.7)	1 (0.5)	1 (7.3)	6 (5.9)	9 (4.8)	1 (0.9)	1 (0.7)	2 (1.5)	
문화관광 특화기능 정비	1 (2.7)	1 (1.1)	0 (0.8)	0 (0.6)	4 (7.6)	11 (6.1)	6 (4.9)	1 (1.0)	1 (0.8)	2 (1.5)	

4. 인천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특성

1) 인천시 마을만들기 사업특성

인천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98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초기에는 부평시장 일대의 부평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서구 불로동의 공동주택지역에 대한 생활공간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된 바 있으며, 2000년대 중반 부평구 십정동 영우물길 프로젝트가 단독주택지 도시주거환경정비 차원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2007년에는 중구의 차이나타운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도된 바 있다.

이들의 개발유형의 경우 십정동 영우물길 프로젝트는 단독주택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불로동 생활공간환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인천차이나타운과 부평문화의 거리사업은 원도심(상업가로) 정비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인천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어온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도농복합형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취락정비나 문화관광특화기능 정비를 위한 농촌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진행은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 분석대상 인천시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

구분	대 상 지	시작연도	사 례 명
1	부평구 십정1동	2002	부평구 십정동 열우물길프로젝트
2	중구 선린동·북성동 일대	2007	한국안에 작은 중국 '인천차이나타운'
3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	1998	부평문화의 거리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자'
4	서구 불로동	1998	생활공간환경개선

이외에 최근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 마을만들기 추진본부에서는 인천마을만들기 네트워크³⁾를 만들어 인천지역 마을만들기 추진주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속한 추진주체들은 청학동마을공동체, 푸른샘·느루, 푸른생활협동조합, 만월산 마을사람들 등의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등의 시민단체형 마을만들기, 가좌2동 주민자치센터,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선화·세화·연수복지관, 인천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만석동 행복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등 민관협력형 마을만들기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20여개의 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개의 지원단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특성

십정동 열우물길 프로젝트의 경우 물리적 프로그램으로는 갤러리 조성사업과 벽화 조성사업이 이루어졌고, 비물적 프로그램으로는 보육센터 운영사업과 주민교육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때 기성 단독주택지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벽화조성사업과 갤러리 조성사업을 병행하고, 이렇게 조성된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보육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큰 보육사업을 커뮤니티에 기반한 주민 주도사업으로 정착시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천 차이나타운에 적용된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상징인 차이나타운에 대해 주민과 함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운영되는

3)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 마을만들기 추진본부 인천마을만들기네트워크(2011), 『2011년 마을, 마을을 만나다』.

프로그램은 건축물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더불어 외부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주도의 축제 운영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주도로 건축물정비가 이루어졌고, 이후 비물적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부평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상업가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주도의 도시설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건축물 정비와 소공원조성 등의 사업위주로 이루어졌다. 비물적 프로그램은 상업공간임을 감안하여 축제가 주민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의 관리는 사업 초기부터 조직된 공동협의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부평문화거리 마을만들기사업은 상업지구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나 갤러리와 같은 상권 주민들의 방문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물리적 프로그램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한계로 보여진다. 다만 이 사업은 진행형이라는 점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블로동 생활공간 환경개선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서관건설과 벽화조성 등의 물리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장소성(a sense of place)을 바탕으로 한 축제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규 아파트단지의 조성은 지역커뮤니티 형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우리 마을 혹은 우리 동네라는 인식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갖지 못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의 자긍심을 높이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새로운 물리적 공간의 장소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3) 인천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상 문제점 도출

지금까지 추진된 인천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현황을 보면, 사업운영경험의 다양성과 주민참여를 독려하려는 의지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1998년부터 마을만들기 성격의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양적 성과는 여전히 기대수준 이하로 평가된다. 그 원인은 다음의 이유에 찾을 수 있다.

첫째, 참여주체로서 정부인 인천시와 자치구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부평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정부부문에 있어 부평구청이 주체로서 참여한 반면, 십정동 열우물길 프로젝트는 인천시 산하의 인천문화재단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인천차이나타운은 인천시와 중구가 동시에 사업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인천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참여주체를 갖지 못한 채 사업별로 그 성격이나 필요에 따라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협상창구 역할을 인천시로 할 것인지, 자치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불명확하고, 사업비를 누가 확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주민과의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내부의 마찰로 사업의 지연을 촉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아직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농어촌지역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 경험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점이다. 인천광역시도 도농복합형 도시의 성격을 가진다. 행정단위로 볼 때 강화군과 옹진군은 도시적 성격보다는 농어촌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지역은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인천시 전체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면적 측면에서는 56.6%를 차지할 정도로 큰 지역이다. 또한 인천의 농어촌지역은 도서지역들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커뮤니티의 형성이 다른 농촌지역들보다 잘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미미한 것은 인천시의 도농간 균형성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셋째, 원도심지역의 상업가로 정비에는 주력하고 있는 반면,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택지에 대한 사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천의 성장과정을 고려할 때, 1970~80년대 급격한 도시성장과정에서 건설된 주택지가 현재 20년이 경과하여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십정동 열우물길 프로젝트나 불로동 생활공간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원도심이나 상업가로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른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참여주체로서 인천시의 노력부재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소극적 정비방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단위로 사업이 완공되면 끝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업의 씨앗은 뿌려주되, 주민들을 중심으로 영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마을만들기 사례는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V. 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

1. 참여주체별 역할

1) 정부(인천시)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 참여주체로서 인천시는 사업 전반을 통제·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이 도시정비사업에서 핵심주체로 참여하도록 하여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도시정비사업의 행정적 책임은 결국 인천시에 있다. 즉, 전통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다. 따라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도 사업의 최종 책임은 정부라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주민 스스로 생산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초기 단계인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사업경비의 마련은 정부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는 인천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에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구는 공동협의체의 주체로 참여하여,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민과의 합의도출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가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인천시에서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 사업 전체를 통제·관리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이는 마을만들기사업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취지가 도시정비의 권한을 실수요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만큼 인천시가 직접 마을만들기 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독립기구로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추진된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 역할을 시민단체나 전문가 집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사업

에 따라 다소 이질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될 경우 향후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제도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 시 차원에서 기본 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교육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험을 지원센터로 집적하여 신규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축된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의 주민들이 신규사업지역의 주민들을 지원센터의 협조 하에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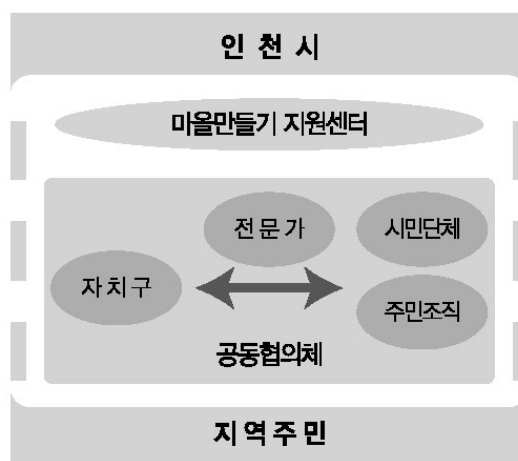
3) 마을만들기 공동협의체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단위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협의체는 주민조직, 시민단체, 전문가, 자치구의 공무원이 참여로 구성된다. 공동협의체 안에서 이들의 역할을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주민조직은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되며, 마을만들기 사업의 의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의제를 발굴하도록 한다. 지역의 실거주자이자, 마을만들기 사업의 수요자이자 수혜자인 만큼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의 정도가 참여주체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단체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의 기본의제 설정과정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조정·정리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더불어 주민조직이나 주민들에 대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셋째, 전문가는 자치구와 주민조직·시민단체의 중간적 입장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제도화적으로 보완하여 지자체와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그림 1〉 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안)

하도록 한다.

넷째, 자치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특히 물리적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자치구 소유의 공유재산 활용을 활용하는데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2. 제도개선방안

1) 중앙정부 차원의 마을만들기 관련 법률 제개정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왔다. 이로 인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 시설사업비 등 재정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관리나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상위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가칭 ‘마을만들기에 관한 법률’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률이나 현재 추진중인 법률내에 마을만들기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신규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다는 현재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추진중인 법률내에 마을만들기 사업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근거를 담아 개정하는 것과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생특별법」 내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야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다.

법률내용은 마을만들기 사업근거, 기금활용이나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정지원근거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인천시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상위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근거 수준에서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즉,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지원센터설치, 공동협의체설치, 위원회설치 등과 같이 광역적 차원에서 기초지자체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으로 가칭 ‘인천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위법이 제정되면 기금활용 등과 같은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마을만들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천시 차원의 조례제정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초기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간섭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간섭이 지나치면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하되어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닌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공동협의체가 형성되는 것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전문가 파견, 공무원 파견, 운영비지원 등과 같이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며, 공동협의체가 만들어진 후에는 공동협의체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가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 보다는 인천시에서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 사업 전체를 통제·관리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이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취지가 도시정비의 권한을 실수요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인천시가 직접 마을만들기 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독립기구로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추진된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 역할을 시민단체나 전문가 집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사업에 따라 다소 이질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될 경우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의 제도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시 차원에서 기본 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교육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험을 지원센터로 집적하여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축된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마을만들기 공동협의체' 구성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단위로 '마을만들기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협의체는 주민조직, 시민단체, 전문가, 자치구의 공무원이 참여로 구성된다. 공동협의체 안에서 이들의 역할을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주민조직은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되며, 마을만들기 사업의 의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의제를 발굴하도록 한다. 지역의 실거주자이자 마을만들기 사업의 수요자이자 수혜자인 만큼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의 정도가 참여주체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단체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의 기본의제 설정과정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조정·정리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더불어 주민조직이나 주민들에 대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셋째, 전문가는 자치구와 주민조직·시민단체의 중간적 입장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제도화적으로 보완하여 지자체와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특히 물리적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자치구 소유의 공유재산 활용을 활용하는데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국토연구원(2007),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Ⅱ)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사례편』.
- 국토연구원(2008),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라운드케이ابل; 시민참여 도시만들기 사업과 공공기관의 역할』.
-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사업단·두리공간환경연구소(2012),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 시범도시 사업의 성과와 과제』, 국토연구원.
- 국토해양부(2010),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사례발표회 자료집.
- 국토해양부(2010),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백서 31권』, 시범마을 인천 부평구.
- 기윤환(2010), 『주민참여형 도시정비기법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김진범·김은란·장은교·이승욱(2008),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 제도 도입 방안』, 국토연구원.
- 민범식·박은관·손동욱·박재길·김형진·와타나베이치(2007),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Ⅱ) :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 박재길·이왕건·김명수·박경현·김지형·이성형(2006),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박재길·김현식·김광익·이왕건·변필성·황승미 외(2005),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부평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2010), 인천도시대학.
- 서태성(2002),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 마을만들기 추진본부 인천마을만들기네트워크(2011), 『2011년 마을, 마을을 만나다』,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
- 조상운(2010), 『인천광역시 주거유형 분석』, 인천발전연구원.
- 진영환·류승한·정윤희·김은란(2008),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 전략편』, 국토연구원.
- 김남두 외(2006),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유형별 특성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추계학술대회.
- 김은정·김윤이·신효진·신중진(2003),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활동내용과 참여주체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신중진(2000), “일본의 마치즈쿠리와 주민참여”, 『국토』, 통권221호, 국토연구원.
- 이영아(2012), “외국의 도시공동체 만들기 : 영국과 일본공동체가 주는 시사점” 『도시문제』 47권 520호, POBA행정공제회.
- 이지혜·이명훈·전병혜(2008),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도에 관한 영향구조 분석 : 광주광역시 북구지역을 대상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전원식·김남두·황희연(2008),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업주제 및 추진주제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9권 4호(통권 제33호), 한국도시설계학회.

- Pecorella, Robert F.(1989), "Community Governance : A Decade of Experience.", *Proceedings of the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Vol.37, No.3.
- William H. Stewart, Jr.(1976),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Alabama : Birmingham Publishing Co.
-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 국토연구원, <http://www.ubin.krihs.re.kr>
- 도시포털, <http://www.city.go.kr>

초 록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주민조직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으로 지역커뮤니티 형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 마을만들기사업들은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유지·관리할 수 있는 주민조직의 부재, 공공지원부족 등으로 인해 단발적·일시적 형태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그 동안 추진된 국내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천시의 특징을 반영하여 인천시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근거법 및 조례마련,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분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사업관리, 공동협의체구성에 의한 사업추진,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사업추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주제어 :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Abstract

The Community Building with People is to work out a local problems oneself making Citizen Autonomy Organization. However, most the Community Building was temporary work, for these reasons lacked a community building understanding, absence of the Citizen Autonomy Organization, shortage of public service, etc.

To solve this problems as follows, it is necessary support a legal basis, sharing of responsibility and role for Incheon metropolitan city between autonomous region, project management of the Community Building Services Center, promoting projects to Joint Consultative Group, etc.

Subject keywords : Community Building, Management System, Citizen Participation

집수리 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손동필*

- I. 서론
- II. 집수리 관련 지원현황
- III. 집수리를 통한 주거지 재생 사례
- IV. 정책제언

I. 서론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위주의 주거환경 개선 방식은 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 획일화를 초래하였고,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등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노후한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전면철거 후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방식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개발 이후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해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악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물리적 주거환경 재생 뿐 아니라 마을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하는 사회적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휴먼타운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시차원의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로 이어졌으며, 구 차원에서도 두꺼비하우스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 역시 팽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기존의 철거형이 아닌 공동체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간 커뮤니티의 자발적 개선 의지 없이 공공주도로 이루어지는 물리적 환경 개선은 단기적 성과 중심의 사업에 그치기 쉽다. 더욱이 공공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없이는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주민의 자발적 개선의지와 공공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물리적 환경 개선과 건강한 주민 커뮤니티 회복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민·관이 협력하여 공공공간을 정비하고 개별 가구의 주택성능을 향상시키는 점진적 주거지 재생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모습이다. 사업비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부분에 있어 공공의 역할과 실질적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주민 참여 등 종합적 관점을 고려한 정비 방안이 정립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집수리를 통하여 인천시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점진적으로 재생하려 한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현행 집수리 지원제도 및 집수리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인천시 집수리 제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을 고찰하고, 이 사업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집수리 관련 지원현황

노후 주택 집수리는 공공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동일 가구에 중복되는 지원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 주체에 따라 국가, 지자체로 분류하여 집수리 관련 지원제도를 파악한다. 물론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그리고 아래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아래의 사항만 분석한다.

1. 국가

1)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 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보조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물급여로 분류되는데, 주거급여를 현금급여로 지급하면 수급자는 이를 생계급여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현물급여로 지급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수급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집수리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표 1〉 2012년 최저생계비, 주거급여한도액 및 현물급여기준액

(단위 : 원 / 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주거급여한도액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368,392
현물급여기준액	26,000	45,000	58,000	71,000	84,000	-	-

주)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4%), 현물급여 기준액은 5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13,000원 추가.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수선비가 상한액을 넘을 경우 본인부담 또는 기타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다. 2010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현물급여에는 20,000가구에 대하여 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되었다.

2) 기획재정부의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난방공사 및 고효율 가전제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사업이다. 2007년부터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을 통한 지원으로 변경되어 지속적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다. 2012년 사업에서는 약 305억 원의 예산으로 약 4만 가구(약 가구당 70~80만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한국에너지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자체와 사회복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대상가구가 결정 되면 사업 시행기관 및 물품, 자재를 정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시행기관과 시공업체는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 후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감리 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정산하여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시행기관과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국토해양부의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은 2009년에 부산시 영도구와 사하구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2010년 기준 415억의 예산을 책정하여 8천가구에 사업계획을 하였다.

주요 개·보수 항목으로는 지붕·처마 등 보수개량 및 벽체 보강 등 주택의 구조개선부터 주택내부의 등기구·콘센트 및 전기시설 수리·교체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 개·보수사업의 대상특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세대구성 측면에서는 고령자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개별 가구당 600만원 한도에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공사(대수선 등)를 수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2. 지자체

1) 서울형 집수리사업(S-Habitat)

서울형 집수리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며 차차상위계층¹⁾ 중에서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가구, 저소득 국가유공자, 1~4급 장애인 포함 가구, 65세 이상 부모 부양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정,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등을 수혜대상으로 인정한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1)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대비 120%의 소득이 있는 계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소유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하며, 차차상위계층은 150% 이하의 소득계층을 말한다.

대상으로 먼저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차상위, 차차상위 계층이 수리 내용은 100만원이 내(시민단체, 공무원이 수리하는 경우 90만원이내, 장애인의 경우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주거에 필요한 13개 표준공정과 기타 경미한 수리를 지원한다. 13개 표준공정은 도배, 장판, 단열(벽), 도어, 방수, 샷시, 처마, 씽크대,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정벽공사, 타일(화장실, 주방), 페인트, 전기이며 보일러 수리 등 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정은 수리내용에서 제외시켰다.

서울형 집수리 사업은 타 기관에서 수행되는 유사 집수리 사업으로 인해 사업 대상자가 점차 감소하여 대상 물량을 축소 조정하였다. 2009년 3,285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시행한 데 이어 2010년 저소득가구, 장애인 가구, 다자녀가구 등 2,111가구의 집수리 사업이 시행되었다. 2011년에는 580가구로 대상가구 규모를 축소하고 지하층, 휴먼타운,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2) 인천시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은 대기업 및 사회봉사단체 등 범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업이다. 사업 시행 이전에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확인하고 적정 사업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2009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총 2,084가구가 집수리 대상 가구로 선정되었고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약 3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기에 소득이 불충분한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의 비율도 18%에 이르고 있다.

〈표 2〉 유형별 대상자 조사 결과

(단위 : 가구, %)

전체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차상위·저소득층	
2,084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737	35.4	481	23.1	256	12.3	234	11.2	376	18.0

전체 대상가구에 대해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집수리를 지원하도록 계획하였다. 2011년까지 계획대로 1,451가구의 집수리가 진행되었고 이는 계획의 약 70%를 달성한 것이다.

참여단체별 결과를 보면 사업의 추진은 인천시에서 하였으나 실질적 사업 시행은

봉사단체 및 민간 기업의 인적, 재정적 참여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단체에서 지정기탁금 형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전문시공업체에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 281가구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시에서는 재료비만 지원하고 민간기업 봉사단이 시공한 사업이 110가구, 집수리에 필요한 재료 구입과 시공까지 민간단체에서 모두 담당한 사업(직접시공)도 60가구 존재한다. 또한 종교 단체와 같은 기타 기관의 참여로 진행된 사업이 186가구로 약 24%를 차지한다. 이처럼 다양한 단체, 기관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표 3〉 참여단체별 실적

구 분	단 체	가 구 수
봉사단체(14%)	우수프로그램지원 ²⁾	101
	롯데백화점 참사랑봉사단	8
	현대제철 다물단	1
직접시공(8%)	대한전문건설협회	30
	포스코건설	16
	현대건설	10
	주택리모델링사업(환경부)	4
지정기탁금(54%)	전문업체 시공	281
	물품 교체	143
기타단체(24%)	—	186
총계(개/가구)	33	780

지원 규모별 결과를 보면 대체로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단순공사 위주로 시행되었다. 100만원 미만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전체 780가구 중 469가구로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200만 원 이상 소요된 사업은 9개 사업에 불과하다. 기업 및 기타 기관의 재정 지원으로 사업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비예산 항목의 사업도 255가구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지원규모별 실적

(단위 : 가구)

총 계	100만원미만	100~150만원	160~200만원	200만원초과	비예산
780	469	33	14	9	255

주) 비예산 내역 : 참사랑봉사단(8), 현대제철 다물단(1), 대한전문건설협회(30), 포스코건설(16), 현대제철(10), 주택리모델링사업(4), 기타단체(186).

3. 시사점

국가지원의 경우,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집수리 관련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재원확보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른 지원절차 등을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사회적기업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하였다. 그러나 개별 사업들은 살펴보면, 집수리 지원사업명에 따라서 가구당 금액의 차이가 4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집수리 사업으로만 특화된 경우도 있었지만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차원에서 여러 지원사업 중 하나로 인식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나 집수리와 관련된 금융지원으로 한정하는 사업들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사업에 따라서는 재정적인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수요자 차원에서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지자체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집수리 사업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사업에서는 대상기준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까지 확대하거나 사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수렴하였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를 배려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들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DB관리 등에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집수리 공사가 비교적 저렴한 단순 수리공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양질의 집수리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부분적으로 재정적 여건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천시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은 2011년까지 계획의 70%를 달성하였고 지원 가구의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아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교적 저렴한 단순 수리 공사 위주로 지원되고 있고 저렴한 자재 사용으로 시공의 질이 그리 높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고비용이 소요되는 복합공사까지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시공의 질적 향상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둘째, 주택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건축, 주택 분야의 전문인력이 운영팀에 보충되어야 한다. 현재 기업 기탁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불안정한 재정 마련 방식과

2) 우수프로그램지원은 집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봉사단체에 인건비 없이 재료비만 지원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배, 장판 시공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봉사과 내 소수 인원이 사업을 전담하는 운영 방식이 개선되어야만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중앙정부는 집수리 관련 지원 사업의 최상위 위치에서 총괄하고 있어야 하나 부처별로 비슷한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거나 실적이 미비한 지원 사업 등이 있었다. 따라서 중복되는 지원 사업으로 인해 중복수혜 및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유형의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단일화하는 등의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보다는 수요자 입장에 한발 다가가 진행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원 내용에 있어 간단한 항목에 한정되어 있고, 비교적 재정적 지원이 중앙정부보다 약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같이 실제 집수리 사업들을 위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중앙정부의 경우 실제 수혜자보다는 지원사업의 총괄적 관리에 있어 중요성과 장기적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등에 힘쓰고 있는 반면, 지자체에서는 수요자 확대 및 실질적 도움을 위한 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사업의 효과와 보완점 및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집수리 지원 사업 주체들의 역할이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었고, 지원 사업의 관리에 있어 부족한 점이 나타나 인천시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구성 및 재원 확보에 있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Ⅲ. 집수리를 통한 주거지 재생 사례

1. 고치며살자

동대문구 이문1동에 대한 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의 ‘고치며 살자’^{*)} 운동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생태아파트(마을)만들기 사회공헌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낡고 오래된 주택의 개·보수를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모색한 사업이다. ‘상식이 대안이다’라는 구호 아래 집이 낡으면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고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라는 기본 방향에 따라 실천적 활동으로 ‘고치며살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림 1〉 고치며살자 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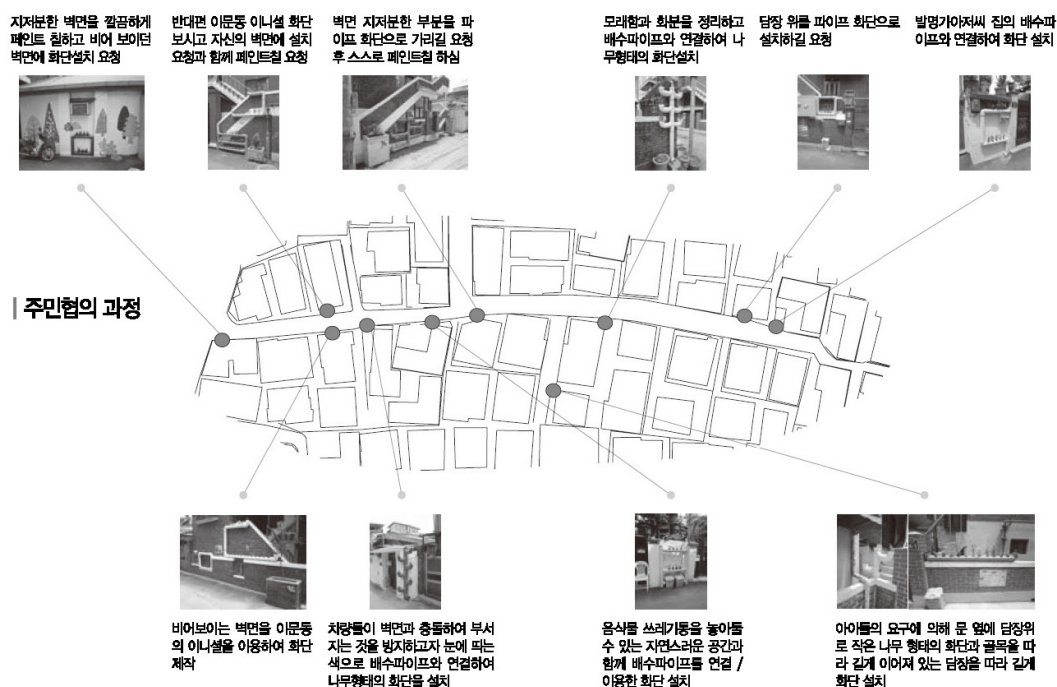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된 통장남대 골목은 309-37번지로 막다른 골목에 면해있는 곳이다. 약 2m 남짓한 폭은 차량 한 대의 주차도 어려운 상태이며, 더욱이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공간으로 늘 어둡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화단을 설치했던 공간은 햇빛이 들지 않게 되자 식물들이 죽게되고 자연스럽게 방치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화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골목길 전체가 낙후되는 현상을 불러일으켜 담벼락의 낙서, 무분별한 쓰레기 투척으로 이어져 골목길의 낙후를 가속화하게 만들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사항들이 결정되었는데, 우선 방치된 화단의 정비를 통해 골목길에 활력을 불러 넣고, 낙서로 얼룩진 담벼락과 개별 세대로 이어지는 녹슨 대문의 개선이었다. 골목길에 돌출된 파이프관을 화단으로 조성하고 색을 칠했으며 또한, 반지하 공간에 대한 고려를 위해 차양에 대한 정비도 포함되었다. 대상지에서 차츰 이러한 추진방향들이 현실화되고, 첫 번째 대상지의 변화과정을 몸소 접한 골목길 주민들의 반응은 의구심에서 관심과 참여의지로 전화되었고, 점차 자기 집 앞의 변화로

- 3) 견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도시연대)는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문화와 역사를 보존, 창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이다. 그동안 인사동 역사문화거리 조성, 한평공원 만들기, 마을만들기 운동 등 실천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도시설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전면철거형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 4)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친환경적 생태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지원하는 주민참여 사업이다(도시연대, 『고치며살자』 보고서, p.17).

이어졌다. 첫 케이스의 성공을 통해 골목길의 변화가 어렵고 힘들지만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화단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담장을 허물고 화단과 벤치를 조성하는 단계까지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였다. 주민의 동의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와 스스로의 협동을 통해 이룩한 것이다. 이웃간에 협력을 하면서 내 집 앞 골목길 변화를 위해 함께 청소하고 페인트칠 하며 변화를 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문동 16가 길의 고치며살자의 진행은 첫 번째 대상지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변화가 이어져 가능한 결과였다.



자료 : 도시연대, 단독다세대 주거지의 지속성을 위한 고치며살자.

〈그림 2〉 고치며살자 골목길의 모습

2. 장수마을—동네목수

장수마을은 서울시 성북구 삼선1가 서울성곽 인근 경사지에 자리하고 있는 저층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이다. 대부분의 주택이 지어진지 40~5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이며 좁은 골목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2004년 삼선4구역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사업비 부담과 더불어 서울 성곽, 삼군부 총무당 등 마을에 인접 문화재로 인해 기존의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마을 정비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경제적 타당성으로 인해 재개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이 추진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이 재정착할 수 없는 문제점 때문에 삼선4구역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중 시민단체, 지역 대학, 주민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을 가꾸는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런 맥락에서 동네목수라는 집수리 관련 사회적 기업이 설립되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그림 3〉 장수마을 위치도

장수마을의 주거지 정비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인력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실질적 정비에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외부로 부터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다. 다행히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공모하게 되면서 집수리와 일자리를 연계한 마을만들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동네목수는 기존에 운영되던 똑딱똑딱 장수마을학교⁵⁾와 집수리 두레반⁶⁾의 개념을 토대로 집수리의 전문성을 접목한 마을기업으로 발전된 형태이다. 2011년 4월 성북구청과 사업지원 협약식을 체결함으로써 마을기업 ‘동네목수’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네목수

5) 2010년 10월~11월까지 4회 진행된 마을학교로 집수리, 텃밭가꾸기, 골목디자인 등을 주제로 실습을 겸해 진행되었다.

6) 2011년 3월 시작되었으며 주민들이 상부상조하여 집수리를 하는 품앗이 조직 개념이었으나 비용 문제로 활동이 저조하였다.

의 기본 방향은 옛날 두레 방식처럼 주민들이 공동으로 서로의 집을 수리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창출된 수익금은 다시 마을에 재투자하여 결과적으로 장수마을 전체의 환경 개선에 사용된다. 기본적인 활동은 집수리, 빈집 리모델링, 목공공방 운영과 커뮤니티 공간 제공, 소식지 발행, 마을벽화사업, 작은 미술관 사업, 골목길 수선, 주민실천단 운영 등 다양하다.

장수마을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으로 구성된 특성으로 인해 자발적인 집수리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집수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도 비용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다. 더욱이 장수마을의 내부여건(좁은 골목길로 인한 운반의 어려움)과 대부분의 집들의 노후도가 심각하여 수리를 시작하게 되면 고쳐야 할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집수리의 시작조차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자연적으로 장수마을의 집수리는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고,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폐자재 혹은 중고용품을 활용한 수리방법이었다. 이는 집수리 비용절감 차원에서 환영받은 동시에 장수마을의 주거지 재생이라는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집수리 항목으로는 화장실의 문고리 하나부터 집 안 내부의 도배, 보일러 고장과 수도배관까지 다양하였으며 집 외부의 경우 지붕기와, 방수공사까지 거주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택의 모든 부분에 해당되었다. 주변지역의 철거현장과 인테리어공사 현장의 버려진 물품들을 활용하여 하나하나 고쳐나가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들을 직접 배우기도 하고 단순한 청소와 운반을 도와주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집수리에 동참하고 있다.

3. 두꺼비하우징

두꺼비하우징은 노후주택의 관리와 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지 정비 사업으로 민선 5기 은평구청장의 주요 공약이었다. 공공인 은평구청의 사업 제안과 민간단체인 (사)나눔과미래, (사)녹색연합, (사)환경정의의 협력으로 2010년 10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민관 사업조직은 추진위원회를 통해 세부 실현방안과 각 주체별 역할을 명시한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2010년 12월), (주)두꺼비하우징을 공식적으로 설립하였다.

두꺼비하우징의 사업은 크게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된다. 수익사업은 일

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관리와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며 공익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목표로 주택 관리와 집수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 공동체 회복 마을만들기 시범사업과 주거 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교육 및 상담도 공익사업의 일부로 두꺼비하우징과 은평구청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수익사업의 시행은 두꺼비하우징과 지역의 집수리 전문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고려하였다.

〈표 5〉 두꺼비하우징 사업 구분

	사업 주체	분류	사업 내용
공익사업	(주)두꺼비하우징 + 은평구청	해피하우스형 주택관리	저소득층 무상 주택관리
		공익형 주택 개·보수	저소득층 무상 집수리
		주거복지지원사업	교육 및 상담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주민참여, 커뮤니티 활성화 등
수익사업	(주)두꺼비하우징 + 지역 소상공인	일반형 주택관리	회원제 유상 주택관리
		시장형 주택개·보수	일반 리모델링, 인테리어

그 중 집수리 관련한 사업은 주택관리와 개보수 사업이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아파트 이외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유지관리 서비스가 미흡하다. 이를 두꺼비하우징이 제공함으로써 저층주거지의 관리 측면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노후주택의 리모델링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록두꺼비라고 불리는 주거개선사업의 서비스는 겨울철 창문 등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과 여름철 실외온도 보다 높은 실내온도로 인해 고생하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벽부터 집안 곳곳에 새는 열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노후주택 리모델링까지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표 6〉 두꺼비하우징 지원 서비스

항 목	내 용
문(창) 부속품	경첩, 도어클로저, 도어록보수 등
양변기	양변기 주위 백시멘트 간단한 보수, 물내림 버튼 보수, 교체 등
수도	수도꼭지 누수시 보수(때킹교환), 세면기 U 트랩 등 부품보수, 교체 등
싱크대	문짝 등 경첩 보수, 교체
배수구	화장실, 다용도실 배수구 막힘 수리
배선기구	스위치 고정(교체), 콘센트 고정(교체), 주택 내부의 전기선 정리, 연결
전등부속품	센서등 센서 불량시 교체
보일러	보일러 작동여부 및 가스누출 점검

자료 : 두꺼비하우징 홈페이지(<http://www.toadhousing.com>).

4. 시사점

집수리를 통한 주거지 재생 사례에서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고치며살자의 경우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마을만들기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골목길을 정비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저층 주거지에 있어서 골목길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의 공간이자 동시에 사적인 공간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 담장의 낙서, 버려진 화단 등은 골목길에 접한 주민에게 있어 집수리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고치며살자에서는 첫 번째 대상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주민들 스스로 내 집 앞 골목길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란 걱정스런 염려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주민협동 및 협의과정의 중요성과 주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였다.

장수마을의 동네목수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집수리의 과정과 이를 통한 마을 전체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장수마을은 위치적으로 문화재에 접해있고, 과도한 사업비 부담으로 기존 사업방식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주민들의 생활형편상 대안적 개발 방식은 불가피한 결정이자 새로운 시각의 대안모색을 가능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주민총회와 소식지를 통한 대안개발(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으로 점진적 주거환경 개선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단계별 진행과정을 통해 주민과 공공의 밀접한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 진행과정을 통해서 마을기업인 ‘동네목수’가 등장하게 되고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마을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

게 된다. 또한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공간과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과 사회적기업을 통한 마을의 변화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노후주택의 기본모델이라 할 수 있는 재개발예정지역의 거주자 정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에서 시작된 두꺼비하우징은 실질적인 내부공간의 집수리와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또한 자원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일정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다시 집수리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주거지 재생과 다른 특성을 보이며 좀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집수리를 통한 주거지 재생사례에서 보인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원주민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이웃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쉽게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연적으로 마을전체의 참여와 협력체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집수리의 경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면 마을전체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의 노력과 희생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지속성 있는 집수리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때 주민뿐만 아니라 공공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속적 지원과 사업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집수리를 통한 저층 주거지 재생은 새로운 대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IV. 정책제언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지원제도 및 사례들을 통해 집수리의 현황들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모여 주민협의 및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을 통해서 중복수혜 등 집수리 전반에 걸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집수리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정책제언에서는 집수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어 조례, 조직 및 운영체계, 및 자원조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조례

주거복지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전주시가 유일하며 인천시를 비롯하여 서울시, 대구시, 원주시, 제주시 등에서 주거복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기 제정된 전주시 주거복지 조례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인천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인천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인천시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현재 초안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주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조례에 담길 내용을 간략하게 제안한다.

먼저 민·관으로 구성된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거실태조사 및 종합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포함시켜 집수리의 필요성과 함께 실효성을 갖게끔 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거복지 전달체제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천시 주거복지 서비스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 사항 중 하나는 주거복지전달체제의 개편을 들 수 있다. 주거복지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총괄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와 관리·수행기관을 시·군(구)·동 단위에 따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복지지원센터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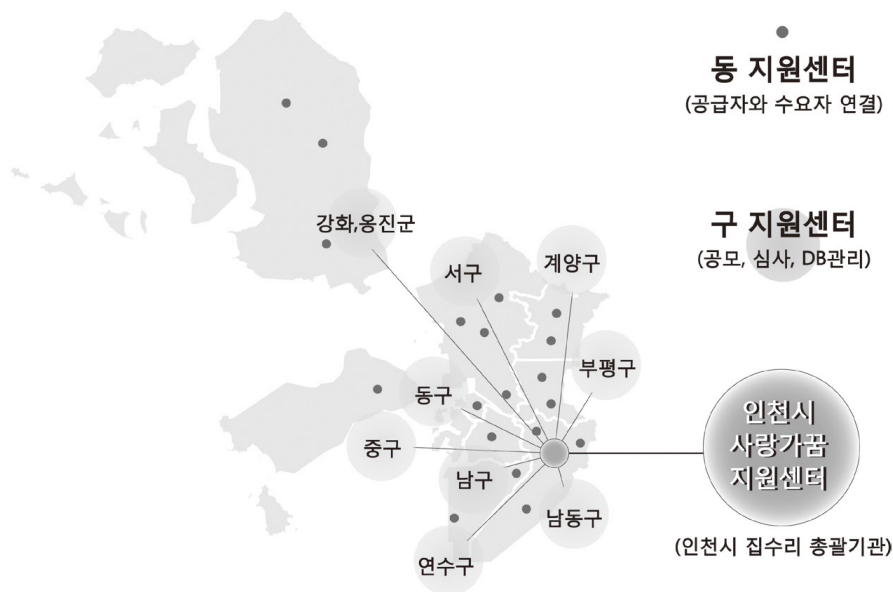
인천시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 범위는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한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집수리를 희망하는 일반 노후 주택 소유주 전체로 점차 확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인천시 노후 저층 주거지의 환경 개선 촉진을 목표로 한 것으로 기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주거복지에서 주거실태를 기준으로 한 주거복지로 대상 범위 설정 방식을 달리 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 진행에 따라 차상위 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최종적으로는 일반 가구 전체로 집수리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장기적인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인천시 주거복지지원 조례에는 집수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집수리 사업의 내용, 운영주체, 예산확보방안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집수리와 함께 주거비에 대한 사항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며,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집수리와 연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조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조직 및 운영체계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의 경우 시 단위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집수리는 거주자의 실 주거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과 함께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시 단위에서의 업무 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집수리 제도의 활성화와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구성이 될 수 있도록 개편이 요구된다. 시 단위에서는 집수리와 관련된 행정 지원 및 조례체계를 총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집수리 방안을 모색하고, 군·구 단위에서는 집수리 공모 및 심사를 담당하고, 관련 DB를 구축하여 시 차원의 총괄관리에 따라 군·구별 상황에 맞는 집수리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또한, 개별 주택의 직접적인 사항인 공급자와 수요자 연결과 세부적인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동(읍, 면, 리)단위에서 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직구성이자, 집수리 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림 4〉 사랑가꿈(인천시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 조직 개념도

인천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의 브랜드명으로 선정될 예정인(가칭) ‘사랑가꿈(사랑+가꿈)’을 지원센터명으로 하고, 인천시청 사회복지봉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이

관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랑가꿈 센터는 시단위의 업무를 추진하는 본부와 군·구 단위에서의 연계방안 검토, 동단위의 지역센터로 구분되며 본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군구별 지원센터는 사업 공모 및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동단위의 지원센터는 집수리 서비스 공급자(시민단체, 사회적 기업)와 집수리 수요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활용이 예상된다.

3. 재원확보 방안

집수리에 필요한 재원의 경우, 중앙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기본적으로는 인천시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인천시 재정으로는 부족하기에, 두꺼비 하우스와 같이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공익사업의 경우 공공지원을 통해, 또한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재투자하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 외 활용할 수 있는 재원 및 인력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현재 민간단체의 주체로 지원하고 있는 집수리 지원 사업에는 기업의 기부금이 운영 재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 지원 기업의 지속적 참여와 신규 지원 기업 확대를 위하여 참여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참여 홍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공공장소의 홍보 공간 제공, 세제 혜택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고려할 수 있다.

2) 민·관 우수리 활동 참여

현재 인천시 공무원은 급여의 천원 미만 우수리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집수리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급여우수리 활동을 인천시 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점차 확대하여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급여우수리 활동은 기부금 모금 활동과 달리 개인적으로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종교단체의 참여와 인적자원

종교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종교단체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한다. 각 종교단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주택 개·보수에는 비교적 큰 비용이 소요되므로 종교단체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재원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현재까지는 인천시 집수리 사업에 대한 종교단체의 참여가 미비하였으나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종교단체의 경우 인적자원이 풍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

4) 학교 및 단체의 재능 기부

학계에서의 도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의 전공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재능 기부를 통해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 건축 및 토목 등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현장학습 등으로 재능기부를 통한 학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고재정(2010),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그린홈 보급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국토연구원(2011),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 사회적 기업을 이용한 주거지재생』.
- 기윤환(2011), 『인천시차상위계층 주거복지정책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김혜승(2004), 『주거복지지원 및 전달체계구축방안연구』, 국토연구원.
- 남철관(2011),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사업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제92호.
- 남철관(2012), 『지역에서 바라본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사)나눔과미래.
- 도시연대(2011), 『견고싶은도시』, 2011년 3월호.
- 도시연대(2011), 『단독다세대 주거지의 지속성을 위한 고치며살자』.
- 목정훈(2006),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박은철 외(2009),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012),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011), 『2011년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서수정 외(2010), 『단독주택지 재생을 위한 주택관리 및 정비 지원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손동필(2011), 『집수리 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12), 그린홈 안내가이드.
- 장남중 외(2011), 『정비구역내 소형·저렴주택 공급확대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장수마을소식지(2012), 『삼선4구역 장수마을이야기』 2012년 4월호, 대안개발연구모임·주민협의회.
- 장윤배(2009), 『경기도 노후불량주택 기준개선방향』, 경기개발연구원.

초 록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위주의 주거환경 개선 방식은 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 획일화를 초래하였고,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이마저도 잘 진행되지 않자,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악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뿐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고치며 살자, 두꺼비하우징, 동네목수 등의 사례는 기존의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 대해 점진적 주거지 재생을 목적으로 집수리 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및 사회적 기업 등 관련 주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체계성, 지속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었다.

주제어 : 재개발, 집수리, 노후 주거지

Abstract

We usually improve old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the rapid redevelopment project. It makes the area to standardize the housing type in apartment dwelling and it evicts the native people of old housing area. But from last years, that redevelopment projects have not gone on because of the economic depression.

Recently different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deployed for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for example, "Live with repairing", "Toad Housing", and "Neighborhood Carpenters". It emphasizes the community rebuilding rather than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This study reviews the housing repair supporting systems for the slow revitalization of old housing area without eviction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housing repair system should be complemented thorough the proper role division between municipal government and civic society and through the permanent subsidy program.

Subject keywords: Redevelopment, House repair, Old residential area

인천 마을만들기 정책방향과 과제

이왕기* · 정승현**

- I. 서론 : 마을만들기의 의미와 필요성
- II. 국내 마을만들기의 유형과 특성
- III. 사례연구
- IV. 인천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 V. 추진과제

I. 서론 : 마을만들기의 의미와 필요성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는 일본의 마치즈くり(まちづくり)에서 비롯되었으며, 장소만들기, 지역만들기, 도시만들기 등의 명칭과 혼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로 통일되고 있는 추세이나, ‘마을공동체’라는 용어의 사용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환경개선과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포괄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의 경우 물리적 환경개선 부문을 제외한 공동체 활동 중심으로 의미를 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마을만들기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 공간, 과정,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의가 가능하다. 田村明(1987)⁹⁾은 마을만들기를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지탱하며 편리하게 하고, 보다 인간답게 생활할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초빙연구위원

수 있도록 공동의 장을 만들어 가는 방법 및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문승국(1998)²⁾은 도시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흐름을 일컬어 마을만들기라 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정비 및 이를 가능케 하는 각종 제도와 틀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였다. 정석(1999)³⁾은 마을만들기를 생활환경을 가꾸고, 주민조직을 이루고, 주민을 기르는 일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정의하였으며, 홍인옥(2001)⁴⁾은 각종 노력과 운동, 제도 및 틀의 형성, 과정 등으로 마을만들기를 광의적 의미로 정의하였다.

〈표 1〉 마을과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의

연구자	정의
田村明(1987)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지탱하며 편리하게 하고, 보다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의 장을 만들어 가는 방법 및 과정
문승국(1998)	지역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흐름을 일컬어 마을만들기라 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정비 및 이를 가능케 하는 각종 제도와 틀로 정의
정석(1999)	마을의 삶터(생활환경)를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가꾸어 가는 일이며, 마을공동체(주민조직)를 이루는 일이며, 책임감 있고 자격 있는 건강한 마을사람(주민)을 기르는 일
홍인옥(2001)	각각의 지역이나 도시에서 살기 좋고, 활력 있는 환경을 형성함을 목적으로 이를 추진해나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각종의 노력과 운동, 환경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틀의 형성, 다양한 물적·사회적 환경을 건설하거나 정비하는 과정 및 이들을 유지·활용해가기 위한 노력이나 운동
광주광역시 북구 (1994) ⁵⁾	마을 : 일상 생활환경을 뜻하며, 협의로는 동네에 있는 거주지 또는 거리를 의미함. 광의로는 '동' 과 '구' 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총칭 마을만들기 :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간에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
경기도 안산시 (2007) ⁶⁾	마을 : 일상 생활환경을 뜻하는 것으로서 협의로는 동네 및 동·구·시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말함 좋은 마을 : 고품격 환경과 문화가 고루 갖추어져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의 정주의식이 높은 마을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
경기도 수원시 (2010) ⁷⁾	마을 :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 좋은 마을만들기 :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서울특별시 (2012) ⁸⁾	마을 :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마을공동체 :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응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1) 田村明(1987), まちづくりの發想, 岩波新書. (도시연대(2000), 「마을만들기 2000」에서 재인용).
- 2) 문승국(1999), “일본의 주민참여형 도시정비수법에 관한 연구—마찌즈꾸리의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법제도 부문, 특히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조례에서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범위와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를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에 대한 의미에 더불어 사회문화적 개념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하는 사례도 있다.

이상의 연구와 법제도 등을 종합해보면 마을은 구성원인 주민들(사람)이 있어야 하며, 주민에 의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의미하며, 마을만들기는 공통된 관심을 기초로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전개하고, 살아가는 공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은 전통적인 마을공간에 대한 개념과 의식이 도시화로 인해 쇠퇴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마을은 사람들이 공동체 활동을 영위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도시화에 의해 이러한 전통적인 마을개념이 변화하게 되었다. 기성시가지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도시의 공동체적 활동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거주환경의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신시가지는 물리적 공간이 새롭게 조성되었기 때문에 마을 공간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주민들로 구성되어 공동체 의식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신시가지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과밀과 개인주의 경향은 공동체 의식 악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마을 개념을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이 같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을만들기’는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공동체 회복과 지역 애(愛)를 고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정책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세대간·계층 간 함께 살기를 통해 고령자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마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를 통한

3) 정석(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4) 홍인옥(2001), “주민참여형 도시개발 방안으로서 마을 만들기”, 대한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91-95.

5) 광주광역시 북구(1994),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제2조.

6) 경기도 안산시(2007),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제2조.

7) 경기도 수원시(2010),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제2조.

8) 서울특별시(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주거지 재생이 가능하다. 또한 주민 스스로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마을만들기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중점과제의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마을만들기에 대한 유형과 특성분석 그리고 인천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천 마을만들기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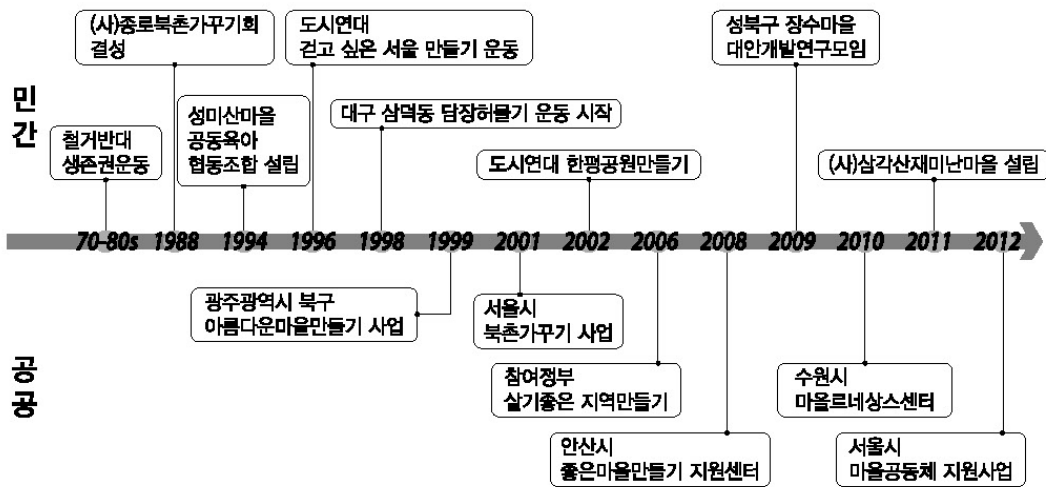
Ⅱ. 국내 마을만들기의 유형과 특성

1. 국내 마을만들기의 변화

국내 마을만들기는 사례는 민간부문의 1970년대 개발사업에 의한 철거반대와 생존권 운동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후 1988년에는 서울 종로에서 북촌가꾸기회가 결성되어, 주민들이 서울시 한옥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정책 시행을 요구하는 등 주민참여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성미산마을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자생적인 주민모임이 전개되었으며, 1998년 대구 삼덕동에서는 한 개인의 담장허물기에서 시작하여 공동체 활동 등 주민주도 주거환경개선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2년 도시연대의 한평공원만들기 사업, 2009년의 서울시 성북구 장수마을 대안개발연구모임 활동 등 시민단체의 마을만들기 참여가 가시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의 성미산 마을과사람, 삼각산재미난마을 등 법인설립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공공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중앙정부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이르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마을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1999년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으로, 2001년 서울시 북촌가꾸기 사업, 2006년 건설교통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2008년 경기도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0년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그리고 2012년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2000년대에 들어 최근까지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 국내 마을만들기 연혁

2. 민간 마을공동체 활동의 특성

첫째, 민간 마을공동체 활동은 초기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와 같은 특정 개인 또는 공동체적 필요와 관심에서 출발하였으나, 차츰 방과 후 교실과 마을 축제 등 공익적 관점의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특정 공동체적 관점의 활동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공익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등이 상호 연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하나의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 시작하여 점차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활동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경우, 초창기 공동육아를 위한 공동체 활동 이후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공동체 활동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어린이집운영, 대안학교 설립과 같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과 마을식당, 학부모 모임 활성화를 계기로 형성된 동아리 활동, 마을축제 등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간 네트워크와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공동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삼덕동 마을공동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담장허물기에서 시작하여 허물어진 담장주변에서 꾸러기그림대회를 개최하고, 재활용을 위한 녹색가게를 만들고 이와 관련하여 병뚜껑 벽화를 만드는 등 마을공동체 활동의 확산과 재생산이 진행되었다.

셋째, 마을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과 단체의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서울 장수마을에서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안개발계획 활동은 공동체 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으며, 마을리더가 주도한 마을기업 동네목수의 설립과 그를 통한 집수리와 마을환경 개선은 마을공동체의 지속성을 마련할 수 있었다. 삼덕동의 경우에도, 한 개인의 담장허물기에서 출발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마당에서 공간, 마을, 도시전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공동체의 운영방식이 점차 협동조합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공동육아를 위한 협동조합, 유기농 농산물 판매와 유통을 위한 협동조합, 마을식당이나 반찬가게 등 작은 마을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공동 출자를 통한 협동조합 개념의 공동체 활동이 발생하고 있다. 공동출자에 의한 협동조합 운영방식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자원마련 측면에서 경제적 자립과 함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2012년에는 협동조합설립 조건이 완화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향후 마을공동체 활동의 전개는 다양한 공동체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운영방식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3. 공공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특성

공공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첫째, 조례 제정, 지원센터 설립, 사업공모, 교육 및 홍보의 종합지원 정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조례에는 지원센터의 설립과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공모, 교육, 홍보 등 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마을만들기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공공의 행·재정적 지원 하에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 전담조직은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관련부서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과 지원센터는 시민단체, 전문가, 대학기관 등과 연계를 통해 마을만들기사업이 일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원센터의 설립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원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기획, 공모,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 지원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공모에 의한 사업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모제는 공동체 프로그램과 시설 및 공간 조성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중앙부처에서부터 서울, 안산, 수원, 고양, 광주북구 및 인천의 기초자치단체에까지 대부분의 공공 마을만들기 정책은 공모방식을 취하고 있다. 회기년도와의 일치를 위해 대부분 1년 단위로 마을만들기 지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일정규모의 사업비를 공동체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모과정에서 일반주민들과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내실과 지속성을 도모하고 있다.

넷째, 서울의 휴먼타운과 수원의 마을(도시)르네상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체 활동 지원과 주거지 재생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공동체 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기존의 휴먼타운 사업을 개정된 도정법에 맞게 확대한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다. 부산시에서도 공동체와 관련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과 물리적 환경의 도시재생정책인 커뮤니티 뉴딜을 구분하여 추진 중이며, 수원 마을르네상스의 경우에도, 마을공동체 단위의 마을르네상스와는 별도의 도시규모의 재생사업인 도시르네상스를 구분하고 있다.

다섯째, 물리적 환경개선, 공동체의식 제고, 사회복지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에 의한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 마을만들기 참여주체에 있어서도 주민, 공공,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거, 복지, 경제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마을공동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표 2〉 공공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례

구 분	주요 내용
대전 무지개프로젝트 ⁹⁾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빈곤지역 재생사업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우수 모델 - 기존의 물리적 환경개선 정책 외에 사회복지정책을 결합한 동네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취약동네를 재생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시도
안산 좋은마을만들기 ¹⁰⁾	- 공공과 민간시민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설립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 마을만들기를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 - 지원센터와 시민단체, 전문가, 대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일상적인 마을만들기 활동 자원이 가능한 자원 체계를 구축
수원 마을르네상스 ¹¹⁾	-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마을만들기 전담행정조직인 마을만들기 추진단을 설치하여 행정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마을만들기를 추진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한 공모사업을 수행하되, 사업의 적용대상과 규모에 따라 마을르네상스와 도시르네상스로 구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부산 창조도시사업 ¹²⁾ (행복마을 만들기/ 커뮤니티뉴딜사업)	- 공동체 중심의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재생정책인 커뮤니티 뉴딜을 구분하여 추진 중 - 사업성이 있는 곳은 전면 철거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 사업성이 없을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자력수복형 모델을 적용 - 경제적 재생부문에 비중을 높게 두고 마을만들기를 추진
서울 마을만들기 관련사업 ¹³⁾ (휴먼타운/ 마을공동체지원사업)	- 강동구 서원마을의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계획 수립과정은 주민협정과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법정계획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 물리적 주거환경개선 위주의 휴먼타운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병행 추진 - 새로운 시장의 적극적 의지에 따라 전담조직 구성 및 조례 제정을 조기에 추진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차원의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

9) 대전광역시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은 두리공간환경연구소(2010) '도시형 커뮤니티의 녹색 활동' 을 참고하였음.

10)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사례는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2011)에서 작성한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활동소개 자료' 를 참고하였음.

11)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에 관한 내용은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http://www.maeulcenter.or.kr>)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12) 부산시의 창조도시사업에 대한 내용은 부산시청 창조도시본부 웹사이트와 부산시커뮤니티뉴딜 기본계획안(2012)을 참고하였음.

13) 서울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은 도시정보 2011년 9월호, 「주거지 재생 : 뉴타운, 그리고 휴먼타운」과 서울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자료집(2012)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Ⅲ. 사례연구

1. 인천의 공동체 활동 연혁

7-80년대부터 인천은 산업시설이 입지하여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자치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의료생활협동조합 사례로 거론되는 인천 평화의료생협이 1996년 부평에서 창립되는 등 마을공동체 활동이 인천시 도처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수인천 철도노선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문제를 계기로 형성된 청학동 마을공동체, 부평구 창천동 일대의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 놀자’ 등 본격적인 마을공동체 활동들이 2000년 초를 시작으로 전개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사단법인 형태의 마을공동체 활동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마을공동체간 연계를 위한 인천의제 21 산하 ‘인천마을만들기네트워크’가 2010년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마을공동체에서 나아가 ‘리폼맘스’와 ‘사람사이’와 같은 마을기업들이 창립되는 등 마을공동체 활동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

공공측면에서는 부평구의 인천도시대학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연수구, 남구, 동구, 부평구 등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치구 차원의 지원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2. 공동체 활동 특성

인천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는 주민조직, 모임, 단체가 있으나 인천지역 공동체 활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천의제21 인천마을만들기네트워크에 참여중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장방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공동체 활동 현황을 통해 주요 특성을 도출하였다.

〈표 3〉 인천지역 마을만들기네트워크 참여단체 현황

지역	단체명
부평구(5)	평화의료생협(일신동), 부평문화의거리 추진위원회(부평동),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 놀자(청천동), 해남공부방(십정동), 삼산복지관(삼산동)
연수구(5)	마을과 이웃(청학동), 동춘동마을학교(동춘동), 선학복지관(선학동), 연수복지관(연수2동), 세화복지관(연수3동)
동구(2)	배다리시민모임(창영동 등 배다리 일대), 민들레공부방(송현동)
서구(4)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가좌3동), 가좌2동 주민자치센터(가좌2동), 마을@사람(가좌2동),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연희동)
남동구(3)	장수동새동네(장수동), 공세알도서관(만수동), 만월산 마을사람들(만수3동)
강화군(1)	강화환경농민회(강화)
지원단체(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인천의제21 마을만들기추진본부,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페 인천지부, 인천권 도시대학(부평의제)

자료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마을만들기추진본부(2011), 2011년 마을, 마을을 만나다.

1) 민간중심의 공동체 활동

인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대부분은 민간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인천지역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에 참여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원단체를 제외한 20개 공동체들은 주민자치센터, 시민단체, 복지관, 생협 등을 포함할 경우 모두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동은 공공에서 제공한 공간과 지원체계 하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례로, 가좌 2동과 같이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활동사례와 주민자치센터 활동에서 발전된 형태인 어린이도서관과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등을 설립한 ‘마을@사람’이 대표적 사례다.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사례는 선학, 연수, 세화복지관이 있으며, ‘만월산 마을사람들’은 지역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의 주도로 시작한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다. 생협은 민간의 공동출자와 민간의 운영에 의한 순수 민간중심의 공동체 활동이며,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과 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설립목적으로 한 단체구성을 통해 추진되는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도 있다.

이러한 민간 부문에서의 마을만들기 움직임은 타 지역에서의 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 마을기업 활동, 협동조합조직 등의 마을공동체 흐름과 맞물려 최근에 와서 일부 구청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공익적 마을공동체 활동 중심

인천시 관내 마을공동체들의 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목적 또는 공동체 중심의 활동,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동체 활동, 공간환경 개선 중심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 공동체의 경우 의료생협과 소비자생협 등의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와 최근의 우각로 문화마을과 같은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사례가 있다. 그리고 배다리시민모임, 부평문화의 거리, 장수동 새동네와 같은 공동체들은 공간환경 개선과 관련된 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러나 공동체 중심과 공간환경 개선 중심의 활동의 경우에도 공익적 성격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인천평화의료생협의 경우, 노인복지와 관련된 동아리활동지원, 주민보건증진 프로그램 등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한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각로 문화마을과 같은 특정 목적을 가진 공동체의 경우에도, 예술인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마을벽화그리기, 장수사진(영정)촬영, 마을축제 등의 공익적 활동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소수의 초기단계, 성장 노력

아직 초기단계의 공동체이지만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다. 푸른샘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한 주민활동이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를 설립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후 마을기업 ‘사람사이’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느루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도서관의 공간디자인을 비롯한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모든 도서관 설립과 관련된 기금이 지역사회 내부에서 제공되었다. 이후 도서관 설립에 참여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기업인 북카페 ‘사람사이’를 만드는데 있어서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만든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의 자원순환을 통한 선순환 경제구조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청천·산곡동 마을공동체인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 놀자의 경우에도 초기 마을축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서 최근 버려지는 의류를 활용하는 리폼교실 운영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용 의류를 이용하여 생활용품 등을 만드는 마을기업 ‘리폼맘스’를

창립하였다. 인천평화의료생협의 경우에도, 초기 평화의원에서 시작하여 평화한의원, 평화치과 등 의료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의료생협에서 지역화폐운동에 기반을 둔 마을 기업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였다.

4) 공동체 운영주체인 마을리더와 사람의 중요성

공동체 운영 주체인 마을 리더와 사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청학동 ‘마을과 이웃’은 1991년부터 시작된 청학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과중한 청산금 문제에 대해 ‘청학동주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합법적인 항의운동을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의 체비지와 청산비용 일부를 제공받았다. 체비지에 2001년 ‘나눔의 집’ 건립하여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학동마을공동체학교를 운영하고 마을축제를 개최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동체 사업 초기의 마을리더가 11년 이상 리더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속 운영되고 있으나, 새로운 리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대공원 인근의 40여 가구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한 장수동 새동네 프로젝트의 경우도 마을리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장수동에서는 2008년 6월부터 마을주민 1인의 주도로 마을주민들의 뜻을 모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를 위한 ‘마을 가꾸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마을 주위 정돈, 공터나 담장 밑 화단 조성, 각 집에 맞는 간판 제작 및 설치, 담장 벽화를 통한 마을 미관 증진, 마을축제, 동네문화예술교육, 연극공연 등의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단독주택들의 정원들이 다수 사라졌으며, 장수동 새동네 프로젝트 추진단장의 이주로 인해 현재 마을가꾸기 활동 동력이 침체된 상황이다.

‘만월산 사람들’은 지역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시작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지역사회나눔가게 사업, 연극교육, 기자학교, 주민 워크숍, 동네신문 창간 등 다양한 마을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마을활동을 이끌던 사회복지사의 전근으로 인해 새로운 마을리더의 필요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3. 공공에 대한 요구사항

인천지역 마을공동체 현장 인터뷰를 통해 공공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 공간, 교육, 자원, 공공지원에 대한 요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우선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공간이용 제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주민이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간을 대여하는데 있어서 상시 이용의 불편함, 대여여부의 불투명 등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타 지역의 활동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공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은 마을의 여건과 맞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기업운영 경험이 부족한 마을주민들이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부딪히는 행정적·제도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세 번째는 재정지원에 관한 요구다. 현재 대부분의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모금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원문제는 대부분의 공동체에 상존하는 문제다. 따라서 공동체 성격에 따라 적정 사업비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마을리더나 활동가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마지막 공공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은 공공개입의 최소화다. 행정위주의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적 제약이 많고, 사업비 지원과 사용 후 정산과 정에서 각종 감사를 대비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공동체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음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이 지원하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IV. 인천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인천시 마을만들기 정책의 추진대상은 마을사람, 마을공동체, 마을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을사람 육성, 마을공동체 지원, 마을공간 재생을 병행하되, 마을사람 육성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공간 재생을 주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1. 마을사람 육성

마을사람에 대한 육성은 마을사람과 리더에 대한 교육과 지원방안마련, 마을사람

간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추진한다. 마을사람 교육은 마을만들기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목표로 기초적인 마을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에는 타 지역에 대한 답사도 포함할 수 있으며, 기존의 인천시 교육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다. 마을리더 지원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리더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의미한다. 특히 공동체들의 공공에 대한 요구사항 조사에서 나타난 마을리더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 마을사람 교류 증진은 마을과 마을사람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인천시 차원의 축제와 워크숍 등의 행사를 통해 지원가능하다.

〈표 4〉 마을사람 육성 프로그램

마을사람 육성 프로그램	대 상	주요내용	비 고
마을단위 맞춤형 교육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 주민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획과 실제	전문가 파견과 연계
마을리더 교육	마을공동체 주민 활동가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동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교육	—
마을주민 교육	마을주민	마을만들기 전반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방법에 대한 교육	—
실무자 교육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마을만들기 지원 정책 마을만들기 지원 실무	—

2. 마을공동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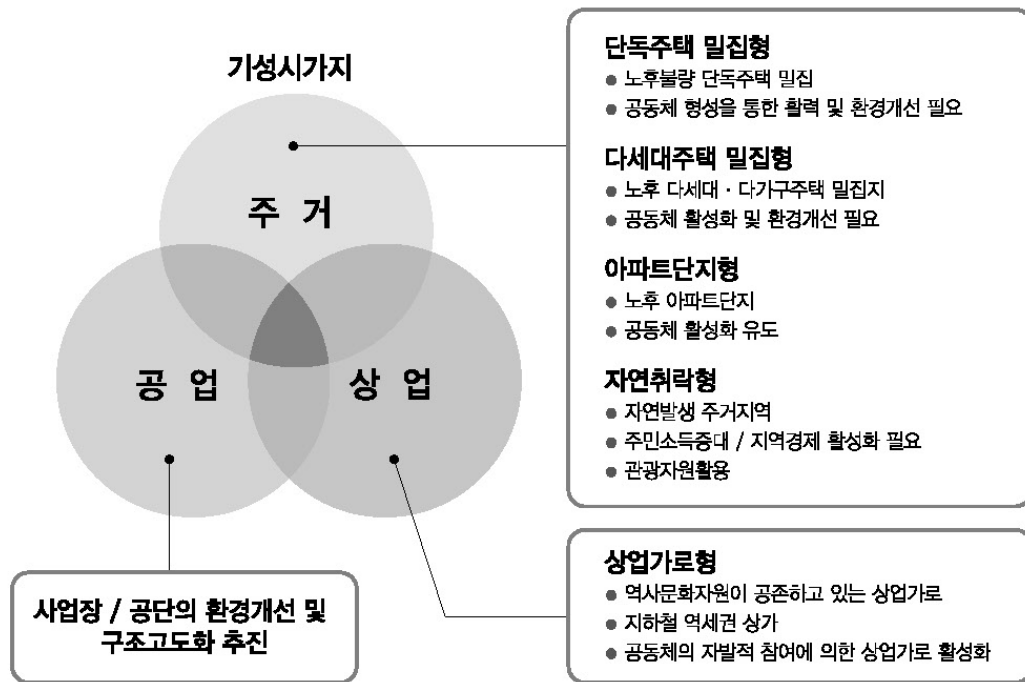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기존 공동체 활성화, 새로운 공동체 발굴, 공동체간 연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기존 공동체 활성화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연계한 전문가 파견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원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인접공공시설과 연계한 활동공간의 제공과 사업유형별 적정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발굴은 인천시 내의 마을공동화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신규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공동체간 연계

를 위한 기존 마을만들기 인천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지역 내 유사 공동체간에는 연합 모임과 합동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강화·옹진군의 생산기능을 매개로 한 공동체와 도시지역의 소비공동체를 연계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의 기반이 되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같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마련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한다.

3. 마을공간 재생

마을공간 재생은 물리적 측면의 마을환경개선을 의미하는데,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상업 등 모든 용도를 포함한다. 마을공간 재생은 유형별 시범구역 선정,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및 실행, 경관협정/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실현 수단 마련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마을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기성시 가지를 주거, 상업, 공업으로 구분하였을 때 마을공간에 대한 고려는 주로 주거지역에 집중되는데, 주거지역은 다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자연취락의 주거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마을공간 재생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나, 상가번영회와 같은 자영업 활동을 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며, 공업지역은 개별 사업장과 공단의 환경개선사업 및 구조도고화 등의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을공간 재생사업은 주민이 참여하여 주도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또한 마을공간 재생과 관련된 계획들은 경관협정과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림 2〉 기성시가지 유형화

V. 추진과제

1.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마을만들기 조례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및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최초의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인 광주광역시 북구의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조례를 비롯하여 경기도 안산시와 수원시, 서울시의 조례 등 각급 지자체별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인천시 관내에서도 각 자치구 단위에서 마을만들기 조례안을 제정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기 추진 또는 제정된 조례와 인천광역시의 마을만들기 조례와의 정책연계와 함께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기 제정된 각 마을만들기 조례안은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칙,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위원회 구성, 지원센터 설립, 사업지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 마을만들기 조례 포함 내용

지 역	단 체 명
총칙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을 명시 • 마을만들기의 정의 • 마을만들기 주체별 책무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 전담부서 • 행정지원협의체 구성 • 교육지원과 관련된 사항
마을만들기 위원회	•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의 위촉과 해제에 관한 사항 • 회의 및 관계부서 협조 사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마을만들기 사업을 직접 지원하고 관리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설치근거와 기능, 관리 및 운영체제 •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 방식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 대상과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 • 추진주체 구성 • 지원대상 • 지원신청 및 결정 절차

2.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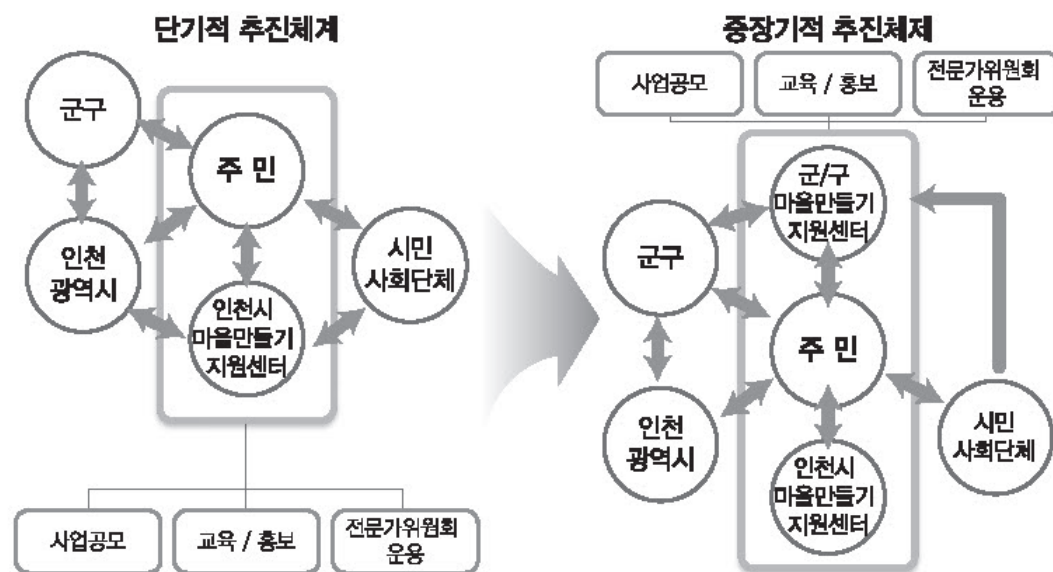
마을만들기 참여주체는 크게 민간, 공공, 그리고 민간과 공공의 중간성격을 가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로 다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은 인천시와 각 군구가 역할을 맡아 인천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천시와 군구의 지원센터로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의 마을만들기는 단기적으로 광역시 차원의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전담조직 구성에서부터 시작한다. 인천시에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센터에서 사업공모, 교육 및 홍보, 전문가 위원회 운용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군구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중장기적 차원의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를 확립해 가야한다.

〈표 6〉 마을만들기 참여주체별 성격과 역할

성 격	마을만들기 참여주체	역 할
민간	주민	•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주체로 사업유형을 결정하고 사업을 주도
	시민사회단체	• 주민 공동체 형성에 조력 •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형성
공공	인천광역시	•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 마을만들기 지원 전달조직 구성
	각 구군	•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 마을만들기 전달조직 구성
민간 + 공공	인천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인천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 도시공간 재생 규모의 사업 지원 및 관리
	군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마을 규모 공동체 사업 지원 및 관리 • 일상적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데는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인 군구 단위에서의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 군구차원에서는 기 제정된 조례를 보완하거나 새롭게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인천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사업공모, 교육 및 홍보, 전문가위원회 운용 등의 업무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군구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이관될 필요성이 높다.



〈그림 3〉 단기 및 중장기적 추진체계

3. 전담조직 및 지원센터 설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조직구성은 센터장과 사무국장 체계이며, 사무국장 하위에 운영위원회,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관리 및 홍보, 사업지원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례를 참고하여 각 팀별 적정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5~20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인천시와 각 구·군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광역시 단위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인천시 전체 마을만들기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군구 단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협력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반면, 군구 단위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주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을 수행하는데, 관할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요구사항과 개선방안을 수집하여 향후 마을만들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상적인 마을만들기가 이뤄져야 한다.

단기적으로 신규 조직 신설이 어렵다면 여러 분야의 총괄이 가능한 기존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시장 직속의 전담부서 설치가 바람직하다. 해당 부서 또는 조직에서는 도시계획·건축·마을기업·복지·여성·환경 등을 총괄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조직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사업의 지속성과 운영경험 축적을 위해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4. 사업운용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운용 방식에서 마을사람 육성은 상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마을리더와 마을만들기 실무자들에게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마을공동체 지원은 사전에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공고기간은 정기공모와 수시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사업기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마을공간 재생의 경우,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기획에 의한 사업선정과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공공의 재정지원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업당 5백만원에서 5천만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소규모 시설조성, 중규모 이상의 도시공간 조성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사업성격과 내용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공공지원은 최대한 최소화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원은 마을기업 등을 통해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여건 마련에 역점을 뒀다 한다.

〈표 7〉 마을만들기 재정지원 사례

마을만들기 지원사례	지원금액	지원총액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마을만들기	30백만원	297.8백만원 (2012년 예산기준)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5백만원(주민공동체형성 및 복원사업) 30백만원(생활공간 개선사업)	140백만원 (2012년 사업기준)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5백만원(공동체 활성화) / 20백만원(소규모 시설조성) / 40백만원(공간조성) / 50백만원(도시르네상스)	1,000백만원 (2012년 사업기준)
인천광역시 서구	8백만원	80백만원 (2012년 사업기준)
경기도 고양시 자치공동체사업	20백만원(마을단위) / 50백만원(동·권역별)	300백만원 (2012년 사업기준)
서울시 휴먼타운	3,630백만원(단독주택지 강동구 서원마을) 6,000백만원(다세대주택지 마포구 연남동)	-

참 고 문 헌

- 도시연대(2000), 『마을만들기 2000』,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두리공간환경연구소(2010), 『도시형 커뮤니티의 녹색활동』,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사업단.
- 문승국(1999), “일본의 주민참여형 도시정비수법에 관한 연구—마찌즈꾸리의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용규·서수정·여춘동·유나경·이창호·이동현·임희지·장운배·정종대·조준호·최창규(2011), “주거지 재생: 뉴타운, 그리고 휴먼타운”, 『도시정보』 2011년 9월호.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마을만들기추진본부(2011) 『2011년 마을, 마을을 만나다』.
- 田村明(1987), 『まちづくりの發想』, 岩波新書. (도시연대(2000), 『마을만들기 2000』에서 재인용).
- 정석(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홍인옥(2001), “주민참여형 도시개발 방안으로서 마을 만들기”, 『대한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91-95.
- (사)사람과마을 마을안내팀 ‘길눈이’ 성미산마을 공동체 활동소개 자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세미나 제3차 발표자료, “장수마을(삼선4구역) 소개 자료”.
- 부산광역시(2012), 부산시커뮤니티뉴딜기본계획안. 슬라이드 자료
- 서울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자료집(2012)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2011),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활동소개 자료』.
- 경기도 수원시(2010)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 경기도 안산시(2007)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1994),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 서울특별시(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센터 웹사이트 <http://www.maeulcenter.or.kr>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http://www.happyansan.or.k>

초 록

민간부문에서 추진되어 오던 인천지역의 마을공동체 활동과 함께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인천을 포함한 국내 마을만들기 사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마을만들기 정책수립을 위한 방향과 향후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중점과제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시 마을만들기 정책은 마을사람 육성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공간 재생을 주도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인천시 차원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전담조직 및 지원센터의 설립, 마을만들기 지원체계의 정립과 재정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마을만들기 정책, 마을만들기 지원 체계

Abstract

Some municipal governments of Incheon city are trying to activate neighborhood-making project which has been promoting in private sector.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present issues and policy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policy-making on neighborhood-making project of Incheon city based on the review of cases. Neighborhood-making project should be carried out by encouraging community activities, educating residents, and then enticing revitalization of space town by themselves in the long-term. In order to achieve these, enacting neighborhood-making support ordinance, establishing supporting system including support centers and organizations, and funding are needed.

Subjects keywords : Neighborhood-making project, Support system

일반연구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비대칭성 검토

임상수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비대칭성 검정

임상수*

I. 서론

II. 본문

1. 인천아파트 시장 현황
2. 인천아파트 매매가격의 구조변화 검정
3. 인천아파트 매매가격의 비대칭성 검정

III. 결론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인천은 아시안 게임 개최와 지하철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과도한 지출 탓도 있겠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세입 기반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쾅쾅 얼어붙어 지방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취득등록세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송도, 청라, 영종도의 3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많은 수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향후 인천 경제에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시장의 거래 약화는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전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세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매매가격과의 격차가 좁혀질 경우, 전세수요는 매매수요로 전환되어 매매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택 거래는 부진한 반면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주택 구입에 따르는 기대 수익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대기 매매수요 증가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매매가격 하락에 따르는 역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 최소화와 건설사들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 현 시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더욱이 과거 정부들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점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지금과 같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향후 아파트 수익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는지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이는 최근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되었던 2009년 1월을 전후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에 대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또는 정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아파트시장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간 관계를 분석한 것이 일반적이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간 일방적인 관계임을 밝힌 선행연구로는 임재만(2004), 조주현·임정호(2004) 등이 있다. 임재만(2004)은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간의 동조성을 그랜저 인과성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검정 결과, 서울시 전체의 경우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의 그랜저 원인으로, 반면 서울 강북지역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상호간 그랜저 원인으로, 그리고 강남에서는 그랜저 원인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조주현·임정호(2004)는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등재 이론을 설명했고, 반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용자 비용이론으로 설명했다. 특히 분석 결과 매매가격은 전세가격, 전세가격은 월세가격에 인과관계를 가지며, 매매가격은 월세가격과 전세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간 쌍방 인과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로는 김정호·이명재(1989) 등이 있다. 김정호·이명재(1989)는 주택의 보유에 따른 수익이 임대료와 자본이득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료를 대표하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자본이득의 매매가격에 대한 비율 간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양자 간에는 음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특히 아파트 면적이 크고 8학군 지역일수록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 보증금의 비율이 낮아짐을 보였다.

박동국·천인호(2006), 임규채·기석도(2006) 등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간 관계는 주택 유형별, 지역별 등에 따라 일방 인과관계, 쌍방 인과관계, 독립관계가 혼재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박동국·천인호(2006)는 주택의 내재가치는 주거서비스 사용료인 임대가격이며 임대시장은 독립된 가격 체제를 가지므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원인이 된다는 가격환원설과 매매시장은 임대시장의 상급재이기 때문에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의 원인이라는 제약선택설을 이론적 배경으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간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과 강남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대해 일방적인 그랜저 인과관계가 성립한 반면 강북지역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간 쌍방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했다. 이광택(1995)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주택관련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매매가격의 상승이 전세가격을 유도하는지,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매매가격이 인상되는지, 신규아파트의 미분양상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임규채·기석도(2006)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의 주택 유형별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간 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랜저 인과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아파트의 경우 시차를 1로 했을 때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간에는 상호 인과 관계가 성립했지만, 시차를 늘리면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시차를 1로 했을 때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의 그랜저 인과관계가 성립했다. 연립주

택의 경우 어떠한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았다.

매매가격과 임대가격과의 관계를 분석한 외국 선행연구로는 Mercè·Oscar·Yuri(2004), Stein(1995) 등이 있다. Mercè·Oscar and Yuri(2004)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 바르셀로나의 주택 매매가격과 임대가격 간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두 가격 간에는 장기적인 관계가 성립했으나, 매매가격대비 임대가격 비율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음을 보였다. Stein(1995)은 주택 매매가격과 임대가격 간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주택을 구입 시 최소한의 주택구입증거금(minimum down payment)이 필요하는데 주목했다. 매매가격은 주택구입증거금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쳐 결국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쌍방 인과관계를 설명했다.

지역 간 매매가격에 대한 인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는 이상경(2003), 임상수(2008) 등이 있다. 이상경(2003)은 강남지역으로부터 수원시와 부산시로의 가격 및 변동성 이전 효과를 분석했으며 가격 하락 시보다 상승 시에 변동성이 컸으며, 지방 대도시의 주택가격 예측에 서울시 주택가격을 선행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임상수(2008)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방 광역시와 도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II. 본문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결과 중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간 인과관계와 강남지역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과 지방 아파트 가격 간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비대칭성을 검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주택 가격 함수를 추정하는데 있어 전세가격 등과 같은 지역 내와 타지역 가격 등과 같은 지역 외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 내와 지역 외의 정보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호재(Good News)와 악재(Bad News)에 반응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호재와 악재에 대한 가격 비대칭성 관련 연구는 소매, 도매, 산지 가격 간 비대칭성과 대규모 개방경제국가의 주가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의 주가 간 비대칭성이 일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내 정보인 과거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1원 상승할 때(호재)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폭과 1원 하락할 때

(악재)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 폭이 같은지 여부를 검증한다. 또한 지역 외 정보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원 상승할 때(호재)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폭과 1원 하락할 때(악재)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 폭이 같은지 여부를 검증한다. 이를 통해 과거 인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이 이러한 비대칭성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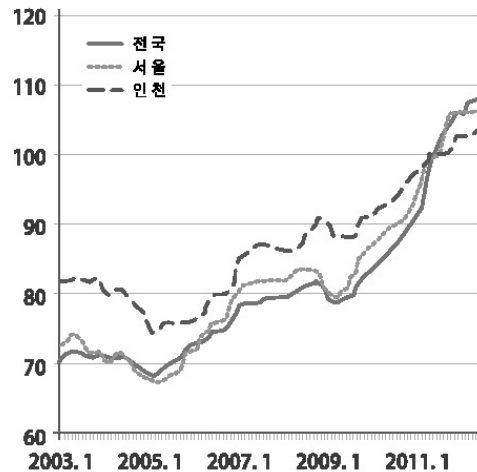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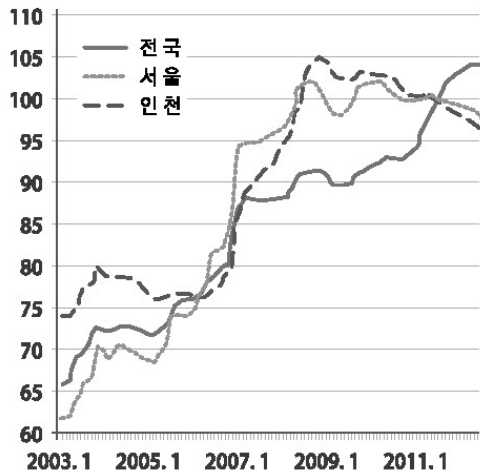
1. 인천 아파트 시장 현황

본 연구는 국민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정체를 보이다가 2008년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인 2009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급격한 가격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3년부터 2006년 중반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반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인 2009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에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격 변동성을 알 수 있는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서울의 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은 서울보다는 낮았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기간인 2003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표준편차는 14를 기록했고, 인천은 11.3 그리고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의 표준편차는 10.7을 기록했다. 2005년과 2006년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하락하다 2005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하락하다 2005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하락하다 2005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된 것은 인천 및 전국과 유사하지만,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전세가격의 변동 폭을 살펴보기 위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산출했다. 그 결과 서울 전세가격지수는 40.1을 기록하여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은 39.2 그리고 인천은 28.9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가격 변동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서울의 표준편차가 11.3으로 가장 컸으며, 인천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표준편차 11.1보다도 낮은 8.2를 기록했다. 이는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성은 서울과 전국보다 작음을 의미한다.



자료 :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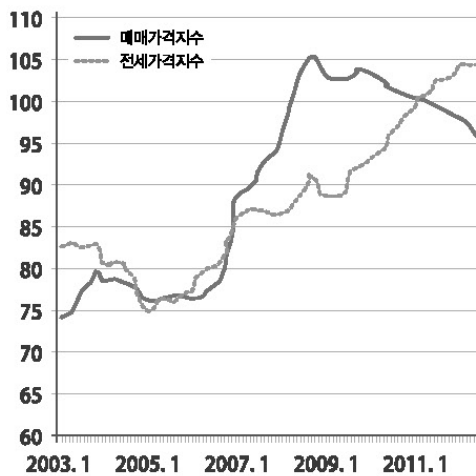
〈그림 1〉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그림 2〉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추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를 살펴보면, 2009년 이전까지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 이후에는 반대 방향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이전까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간 상관계수와 2009년 이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서울과 인천은 부호가 다르게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상관계수는 2003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0.96,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0으로 최근 들어 상관관계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상관계수는 2003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0.93으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 반면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음의 상관관계로 전환된 -0.81 을 기록했다. 반면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상관계수는 2003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0.91로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 반면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0.96 로 음의 상관관계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상관관계 정도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0년 1월부터 구조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주택 거래 동(호)수를 살펴보면 추세는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 동(호)수의 경우 월별로 편차는 있지만 2009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고 편차 역시 줄어들었다. 실제로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인천의 월평균 주택거래 동(호)수는 9,094였으나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5,983으로 급감했다. 변동성을 나타내는 표준편차 역시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609.4를 기록한 반면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1,517.5로 급락했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과 주택 거래 건수와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0.28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0.09로 양의 상관관계 정도는 약화되었다.



자료 :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온나라 부동산포털.

〈그림 3〉 인천 아파트 가격지수 동향



〈그림 4〉 인천 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

2.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구조변화 검정

앞서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9년 1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따라서 2009년 1월 이후를 구조변화 시점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비대칭성을 검정하기 위해 앞서 구조변화 여부를 검정하고자 한다. 또한 앞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함수를 추정하는데 있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

격과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을 활용한다.

이처럼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2003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시계열 데이터이다. 시계열 데이터는 정상성(Stationarity)을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시계열 데이터가 정상성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가성적 회귀현상(Spurious regression)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상성 검정을 위해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며, 단위근 검정에는 Said·Dickey(1984)가 제시한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과 Phillips·Peron(1988)이 제시한 PP 검정이 일반적이다. 또한 단위근 검정에 앞서 각 변수들에 로그를 취한다. 이는 시계열 데이터의 이분산성을 방지한다는 점과 만약 단위근이 있어 차분을 할 경우 〈수식 1〉과 같이 전월대비 증가율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식 1〉

$$x_t = \log X_t - \log X_{t-1} = (X_t - X_{t-1}) / X_{t-1}$$

$$y_t = \log Y_t - \log Y_{t-1} = (Y_t - Y_{t-1}) / Y_{t-1}$$

$$z_t = \log Z_t - \log Z_{t-1} = (Z_t - Z_{t-1}) / Z_{t-1}$$

X_t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Y_t :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x_t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월대비증가율

y_t :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월대비증가율

z_t :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의 전월대비증가율

원데이터에 로그를 취한 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 모두 귀무가설인 ‘시계열에 위근이 존재한다’를 기각할 수 없었다. 이는 로그를 취한 변수들이 모두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1차 차분 후 즉 전월대비증가율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수행한 결과, 귀무가설인 ‘단위근이 존재한다’를 신뢰수준 95%에서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대비증가율은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데이터에 로그를 취한 변수에 대한 차분 데이터 즉 전월대비증가율을 시계열 데이터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 매매 및 전세 가격지수 단위근 검정 결과

		원데이터		1차 차분 데이터	
		ADF 검정	PP 검정	ADF 검정	PP 검정
인천	매매가격	-1.30(2)	-1.32	-4.36*(1)	-3.20**
	전세가격	0.70(2)	0.84	-5.31*(1)	-3.81*
서울	매매가격	-2.26(2)	-2.31	-5.36*(1)	-4.07*

주1) SBC 통계량을 이용한 ADF 모형의 적정 시차.

주2) * : 99% 신뢰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

주3) ** : 95% 신뢰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

단위근이 존재하는 시계열에 대해서는 공적분 검정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두 시계열이 선형 결합을 통해 안정된 시계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계열 간 공적분 관계는 장기적인 균형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공적분 관계를 검정하는 것으로 Johansen(1988)이 제시한 방법이 있다. 만약 두 시계열 간 공적분 관계가 성립한다면 Engle and Granger(1987)가 제시한 오차수정모형(ECM : Error Correction Model)으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적분 검정 결과, 인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그리고 인천 매매가격과 서울 매매가격 간에는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공적분 검정 결과

구분	차수	Hypothesized No. of CE	Trace Statistic	Max-Eigen Statistic
인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공적분	2	None	4.65	4.48
		At most 1	0.17	0.17
인천 매매가격과 서울 매매가격 간 공적분	3	None	16.79*	12.57
		At most 1	4.22*	4.22*

주) * : 99% 신뢰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

다음으로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한 검정을 수행한다. 선행연구들은 바탕으로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을 했지만 이에 대한 검정을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과성 검정은 Granger(1969)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분석 변수들이 단위근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전월대비증가율을 바탕으로 인과성 검정을 수행한

다. 인과성 검정 결과 인천 전세가격 증가율과 매매가격 증가율 간에는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 매매가격 증가율은 인천 매매가격 증가율의 Granger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월대비증가율과 변수 간 인과성 검정

귀무가설	F 통계량		
	시차 1	시차 2	시차 3
인천 전세가격 증가율이 인천 매매가격 증가율의 Granger cause가 아니다	0.12	0.70	0.68
인천 매매가격 증가율이 인천 전세가격 증가율의 Granger cause가 아니다	0.07	0.00	0.06
서울 매매가격 증가율이 인천 매매가격 증가율의 Granger cause가 아니다	6.21**	11.37*	6.56*
인천 매매가격 증가율이 서울 매매가격 증가율의 Granger cause가 아니다	2.19	0.73	0.25

주) * : 99% 신뢰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

공적분 검정과 인과성 검정 결과를 반영하고, 매매가격의 비대칭성을 검정하기 위해 설명변수를 양과 음으로 구분할 경우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함수는 〈수식 2〉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비대칭성을 검정하기 위해 설명변수를 양과 음으로 구분하여 〈표 4〉는 〈수식 2〉의 추정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구조 변화 검정을 위해 전기간, 2003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구분하여 추정한 것이다. 시차 p와 q는 SBC(Schwartz Bayesian Criteria) 통계량과 유의수준을 바탕으로 적정 시차를 결정했다. 구조변화를 검정하기 위해 Chow(1960)가 제시한 방법을 활용한다. Chow(1960)는 구조변화 검정을 위해 〈수식 3〉과 같은 구조변화 검정을 제시했다. 구조변화 검정 결과 Chow 통계량은 0.46이었으며, 이는 귀무가설 ‘추정식은 구조변화가 없다’를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식 2〉

$$y_t = \alpha_0 + \sum_{i=1}^p \alpha_i^+ y_{t-i}^+ + \sum_{i=1}^p \alpha_i^- y_{t-i}^- + \sum_{j=0}^q \beta_j^+ x_{t-j}^+ + \sum_{j=0}^q \beta_j^- x_{t-j}^- + \epsilon_t$$

$$x_t^+ = \text{Max}(x_t, 0), \quad x_t^- = \text{Min}(x_t, 0), \quad y_t^+ = \text{Max}(y_t, 0), \quad y_t^- = \text{Min}(y_t, 0)$$

〈수식 3〉

$$Chow = \frac{(RSS_T - RSS)/(n+1)}{RSS/(N-2(n+1))}$$

n : 절편을 포함한 설명변수의 개수

N : 관측치의 개수(2003년 1월 ~ 2012년 6월)

RSS_t : 2003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전기간 데이터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오차에 대한 제곱의 합

RSS_1 :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데이터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오차에 대한 제곱의 합

RSS_2 :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데이터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오차에 대한 제곱의 합

RSS : RSS_1 과 RSS_2 의 합

〈표 4〉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대비증가율 추정 결과

	전기간	2003년 1월 ~ 2009년 12월	2010년 1월 ~ 2012년 6월
α_0	-0.000020 (-0.11)	0.000129 (0.44)	-0.000556* (-3.27)
α_1^+	0.849698* (14.82)	0.844071* (11.60)	0.108885 (0.35)
α_1^-	0.654488* (3.12)	0.871921** (2.12)	0.146227 (0.82)
β_0^+	0.413781* (10.29)	0.400469* (7.60)	0.213205*** (1.87)
β_0^-	0.650765* (4.24)	0.749050* (3.09)	0.693797* (3.59)
β_1^+	-0.102897*** (-1.83)	-0.094047 (-1.30)	0.171894 (1.24)
β_1^-	-0.427614*** (-1.85)	-0.658382 (-1.34)	-0.257000 *** (-1.73)
β_2^+	-0.202303* (-4.88)	-0.215563* (-3.99)	0.187512 (1.62)
β_2^-	0.149097 (0.93)	0.115945 (0.34)	0.174536*** (1.78)

주1) 괄호 ()는 t 통계량을 의미함.

주2) *** : 1%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나타냄.

주3) ** : 5%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나타냄.

3.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비대칭성 검정

앞서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함수는 구조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지는 않고 있지만, 비대칭성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와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나누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한 비대칭성을 검정한다.

먼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기 매매가격에 대한 비대칭성을 살펴보면,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와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모두 하락기에 가격 증가율의 하락폭보다 상승기에 가격 증가율의 상승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락기 가격 증가율의 하락폭과 상승기 가격 증가율 상승폭 간 격차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한 비대칭성을 살펴보면, 동기에는 상승기 가격 상승폭보다 하락기 가격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기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친 영향과 같이 하락기 가격 증가율의 하락폭과 상승기 가격 증가율 상승폭 간 격차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과 같이 가격 하락기에는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추정치의 크기로 판단한 것으로 통계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 통계적으로 비대칭성을 검정하기 위해 Wald 검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인천 과거 매매가격과 서울 매매가격이 인천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류된다. 먼저 인천 전기 매매가격이 1% 상승 또는 하락할 때, 인천 매매가격 증가율의 상승폭과 하락폭이 같은지 여부를 <수식 4>를 통해 검정한다. 다음으로 서울 동기 매매가격이 1% 상승 또는 하락할 때, 인천 매매가격 증가율의 상승폭과 하락폭이 같은지 여부와 서울 과거 매매가격이 1% 상승 또는 하락할 때, 인천 매매가격 증가율의 상승폭과 하락폭이 같은지 여부를 <수식 5>, <수식 6>, <수식 7>을 통해 검정한다. <수식 4>부터 <수식 7>은 일반적으로 각 시차별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에 대한 비대칭성을 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기와 전기에 관계없이 서울 매매가격이 1% 상승 또는 하락할 때, 인천 매매가격 증가율의 상승폭과 하락폭이 같은지 여부를 <수식 8>을 통해 검정한다. <수식 8>은 반응속도에 대한 비대칭성과 구분하기 위해 반응 크기에 대한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비대칭성 검정을 위해 <표 4>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t 검정을 수행한다.

$$\langle \text{수식 4} \rangle \quad H_0 : \alpha_1^+ = \alpha_1^-$$

$$\langle \text{수식 5} \rangle \quad H_0 : \beta_0^+ = \beta_0^-$$

$$\langle \text{수식 6} \rangle \quad H_0 : \beta_1^+ = \beta_1^-$$

$$\langle \text{수식 6} \rangle \quad H_0 : \beta_1^+ = \beta_1^-$$

$$\langle \text{수식 7} \rangle \quad H_0 : \beta_0^+ + \beta_1^+ = \beta_0^- + \beta_1^-$$

비대칭성 검증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5>이다. 전기간 추정의 경우 2개월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에 대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추정의 경우 동기와 1개월 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에 대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4>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1개월 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개월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에 대한 비대칭성 역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볼 때, 2010년 이후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비대칭성 존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추정 결과인 <표 5>를 살펴볼 경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때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할 때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률이 더 컸으며, 이는 최근과 같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할 때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을 더욱 빠르게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반면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에는 비대칭성을 검정한 결과, 비대칭성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비대칭성 검정을 위한 t-value

	전기간	2003. 1 ~ 2008. 12	2009. 1 ~ 2012. 6
$\alpha_0^+ = \alpha_1^-$	0.87	-0.07	-0.11
$\beta_0^+ = \beta_0^-$	-1.41	-1.33	-1.95***
$\beta_1^+ = \beta_1^-$	1.32	1.11	2.10**
$\beta_2^+ = \beta_2^-$	-2.04**	-0.92	0.09
$\beta_0^+ + \beta_1^+ + \beta_2^+ = \beta_0^- + \beta_1^- + \beta_2^-$	-1.34	-0.27	-0.17

주1) **: 5%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나타냄.

주2) ***: 10%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나타냄.

III. 결론

본 연구는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함수 추정을 통해 2010년 이후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기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과 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경우, 여타 요인에 변화가 없는 한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전기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동기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상승보다 하락할 때 더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과 같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할 때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에는 영향을 받지도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최근과 같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낼 경우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하락세를 보인다.

셋째, 최근 들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 상승할 때 상승률보다 1% 하락할 때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표 4>를 바탕으로 비대칭성을 검정한 결과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할 때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속도는 $0.213205(\beta_0^*)$ 였으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할 때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속도는 $0.693797(\beta_0^*)$ 였다. 이는 최근과 같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할 때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더욱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인천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사라져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지금과 같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 아파트 시장에 대한 악재(Bad News) 즉 가격 하락세가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려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우선되거나 또는 인천 아파트 시장에 대한 호재(Good News)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 리스크로 인해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서울을 잇는 고속철도 건립 등은 인천 아파트 시장에 대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인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인천 아파트 시장에 대한 호재(Good News) 신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원도심 재생 정책 등과 같이 인천시 자체적인 호재(Good News)를 통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비대칭성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외에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 사용자 비용, 교육, 지리적 입지 조건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는 점을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며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 고 문 헌

- 김정호 · 이명재(1989), “자산시장개념을 이용한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및 매매가격간의 관계분석”, 『지역연구』, 제5권, 제1호, 한국지역학회, pp. 13-26.
- 박동국 · 천인호(2006),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를 이용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의 상관관계”, 『한일정상논집』, 제35권, 한일정상학회, pp. 149-174.
- 이광택(1995), “주택가격과 전세가격과의 관계에 관한 서설적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권, 제1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pp. 91-104.
- 이상경(2003), “서울 주택시장으로부터 지방 주택시장으로의 가격 및 변동성 이전 효과 연구”, 『국토계획』, 제38권, 제7호, 대한국토계획학회, pp. 81-90.
- 임규채 · 기석도(2006), “주택시장의 전세가격과 매매가격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산업경제학회, pp. 1203-1223.
- 임상수(2010),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관계”, 『경영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부산대경영경제연구소, pp. 1-17.
- 임재만(2004),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부동산연구원, pp. 163-177.
- 조주현 · 임정호(2004),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및 월세가격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pp. 17-29.
- Chow, G.C., “Tests of Equality between sets of coefficients in two linear regression,” *Econometrica*, Vol. 28, No. 3, 1960, 591-605.
- C.W.J. Granger, “Investigating causal relations by econometric models and cross-spectral methods,” *Econometrica*, Vol. 37, No.3, 1969, 424-438.
- Engel, R.F. and Granger, C.W.J., 1987,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 *Econometrica*, Vol. 55, pp. 251-276
- Johansen, S.(1988). “Statistical Analysis of Cointegrating Vector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12: 231-254.
- Mercè Carreras-i-Solanas, Oscar Mascarilla-i-Miró, and Yuri Yegorov, 2004, “The Evolution and the Relationship of House Price and Rents in Barcelona, 1970-2002,” *European Journal of Housing Policy* 4(1), 19-56.
- Said, S. and Dickey, D.A.(1984). “Testing for Unit Roots in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Models with Unknown order,” *Biometrika*, 71: 599-607.
- Phillips, P.C.B and P. Perron (1988), “Testing for a Unit Root in Time Series Regression”, *Biometrika*, 75, 335-346
- Stein, Jernmy C.(1995), “Prices and Trading Volume in the Housing Market : A Model with Down-Payment Effec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0, pp. 379-406.

초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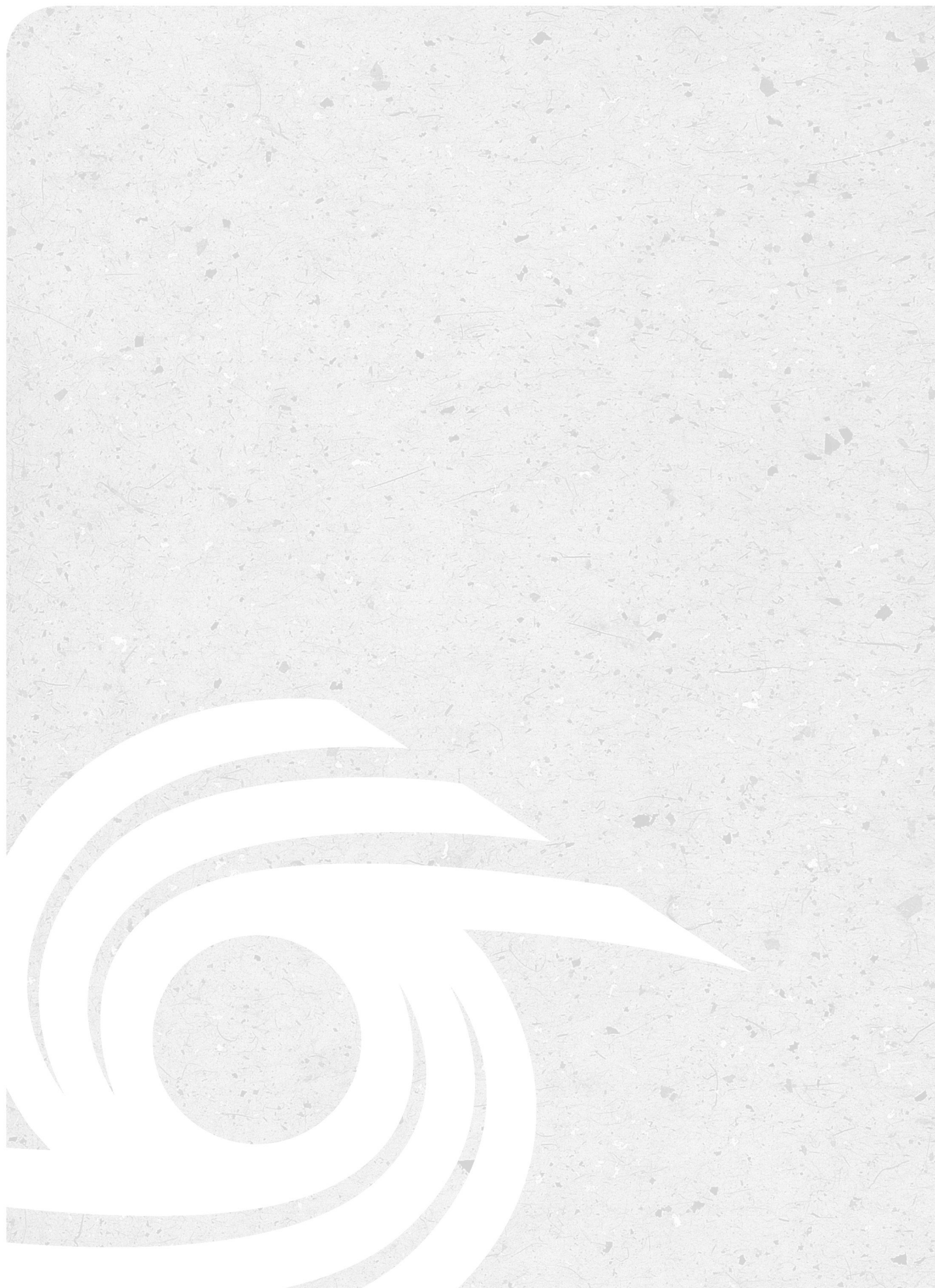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ranger Causality 검정으로 통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기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을 글로벌 경기 침체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추정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기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한 비대칭성을 검정하여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원인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한 비대칭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가격 비대칭성, 공적분 검정, 구조변화 검정, 그랜저 인과성 검정

Abstract

This paper is trying to explain why the apartment sale price decreases nowadays in Incheon. The Granger Causality test shows that the prior apartment sale price of Incheon and the apartment sale price of Seoul affected the apartment sale price of Incheon. And the function of the apartment sale price of Incheon is estimated to test that the apartment sale price of Incheon responds to prior Incheon price and Seoul price asymmetrically. The studied period is divided into two sub-periods: the first covers the period 2003-2008, the second covers the period 2009-2012. The result explains that the asymmetry of Incheon price response to Seoul price change makes Incheon price decrease.

Keyword : Chow test, Cointegration test, Granger Causality test, Price Asymmetry



도시리포트

특색있는 문화도시로서 연길의 발전모색

이용식 |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 역사학부 교수

도시재생 시범 지역의 공간 구성과 공간적 특징

— 전주시 노송동 사례 —

한유석 |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 박사과정

지역문화콘텐츠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에 관한 사례연구

— 창작판소리 ‘왜망실던’ 을 중심으로 —

김현갑 | 인후문화의집 관장

특색있는 문화도시로서 연길의 발전모색

이용식*

- I. 머리말
- II. 연길의 도시특성
- III. 도시화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보완대책
- IV. 맺는말

I. 머리말

연길은 중국길림성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백두산맥의 북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수부로서 이 지역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도시면적은 1,350평방키로메터이며 6개의 가두와 3개의 진을 관할하고 있다. 인구는 39.89만명으로 조선족, 한족, 만족, 회족등 20여개의 민족이 살고 있다.

연길시의 경제발전과 함께 도시화 진척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특히 농촌의 도시화 진척을 발전시켜 도시의 경제와 사회사업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그리하여 전성41개현(시)가운데서 경제종합실력이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0년에는 전국 경제사회종합실력 백강(현)시의 항열에 들었다. 2002년에 전국 문명도시사업 선진도시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선후하여 전국 민족단결진보 모범시, 전국 사회문화선진시등 일련의 국가급 영예를 거두었다.

*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 역사학부 교수

현재 연길은 두만강유역개발의 한계 중추로서 그 발전템포가 굉장히 빠르다. 국가적인 차원의 두만강지역개발정책하에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각종 기초시설 건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춘-연길-훈춘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내지와의 물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제항선의 개통과 많은 국내항선의 개통으로 연길에서 국내외로의 교류는 아주 편리하게 되었다. 또한 한창 건설되고 있는 장춘-연길-훈춘간의 고속철의 개통도 멀지 않아 연길의 교통시설은 굉장히 편리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연 룡도(연길-용정-도문)일체화 건설을 계획 추진하고 있어 연길의 도시화건설은 굉장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발전계획과 과정에 있어 연길로서의 특색과 우세를 이용한 합리한 발전모색이 아주 필요하다. 물론 정부의 여러가지 방안과 정책적인 측면도 있으나 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그 해결방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이자 목적이다. 특히 연길의 문화자원과 그 문화적우세를 발휘하는 것이 특색도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연길 자체가 갖고 있는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낙후한 도시 경제를 역동적으로 전환시키려는 전략이 필요하고 본다. 지금까지 여타 도시가 추진해 왔던 도시개발 정책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도시의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여기에다 국내외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이러한 개발은 필연적으로 지방의 재정위기를 초래하기 일쑤이며 환경과 문화, 공동체와 같은 사회적 자원의 훼손을 감수해야 했다. 개발주의 도시정책에 입각한 ‘도시발전’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발전모색이다. 도시의 내적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동기화하는 전략이 기존의 도시발전론과 구별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장점은 문화와 인문자원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시민생활과 경제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기획이라는 점이다. 이는 자원 소모적이고 재정적 위험도가 높은 개발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일정한 컨센스만 형성하면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아래에 연길시가 갖고 있는 우세, 극복해야 할 문제점과 그 보완대책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전개해보고 저 한다.

II. 연길의 도시특성

1. 지역적 우세

연길시는 길림성 동부의 중심도시로서 공업, 상업무역, 여행업을 위주로 한 민족 특색을 지닌 변강개방도시이다. 러시아, 조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가까이 한 두만강유역 “동북아 금삼각지역의 한 주축”으로 불린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는 200키로, 조선의 청진시와는 180키로, 한반도 동해와는 80키로 떨어져 있다. 연길의 교통은 매우 편리하다. 이미 공로, 철로, 항공, 항운이 구전한 교통운수망을 형성하였다. 연길을 경과한 장춘-훈춘고속도로는 개통되었으며 철로 역시 국내의 장춘, 심양, 대련, 할빈, 북경등지로 직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과 러시아로 통하는 국제철로선이 있다. 연길공항에서는 북경, 대련, 심양, 장춘, 상해등지로 통하는 국내항선과 한국 인천공항으로 통하는 국제항선이 있다. 이번해 7월에는 평양으로 통하는 국제항선을 신설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파사터항, 자루비노항과 조선의 라진항을 경과하여 국내의 화물이 해운으로 러시아 조선, 한국, 일본 등 국가에 직운송되고 있다.

2. 자원우세

연길의 자연자원은 아주 풍부하다. 700평방키로의 삼림과 초원을 갖고 있으며 야생동물자원도 종류가 매우 많다. 인삼, 영지, 황기, 천마, 오미자등 약용식물 800여 종이 있다. 또한 매화사슴, 검은곰등 십여종의 진귀한 야생동물이 있다. 그리고 지하에는 매장량이 풍부하고 품질이 좋은 석탄, 석유, 대리석, 맥반석, 규회석등 광산자원이 있다. 연길의 여행자원은 나름의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다. 많은 전통적 조선민족 민속습관과 민속문화를 보존하고 있으면서 독특한 이역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시가지의 여행, 복무시설은 비교적 건전하다. 연길 해란호민속여행관광구골프장과 썰매장이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다. 또한 연길의 북쪽에 수려한 경박호가 있고 남쪽에 웅위로운 기세를 자랑하는 백두산이 있으며 동쪽엔 “낮에는 3국경을 볼 수 있고 저녁에는 타국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중·조·러 3국국경지역인 방천이 있다. 중·조, 중·러변경의 국경을 넘나드는 여행은 많은 국내외 여행객들이 마음껏 이국풍정을 향수 할 수 있게 한다.

3. 정책우세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동북지구에서 유일하게 국가 서부대개발 우혜정책을 향수하는 지구이다. 또한 연길은 길림성의 대외개방 창구이며 중국두만강지역개발 중심지이고 장길도개발¹⁾의 전연지역이다. 연길시 정부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도시의 투자 우혜정책을 제정하였다. 국내외 투자기업이 토지징용, 세수, 행정사업성비용, 도시추가비 및 개발구에 입주하는 고신기술형, 출구형기업이 개발구내의 공장건물을 차용할 시에 일정정도의 우혜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 투자기업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정부에서는 전문적으로 항목심사비준대청을 설립하여 소유의 국내외기업에 모두 “한개의 창구”를 통하여 “한곳만”을 통하여 심사비준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내외상인의 기업투자 후 복무관리위원회에서 여러 투자자들을 협조방조하여 투자경영중에 봉착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있다.

4. 문화적 우세

풍부한 문화유산과 다원문화지역으로서의 우세 :

연길에는 많은 고대문화유적이 있다. 1985년의 조사에서만 63곳의 고대문화유적을 발견하였다. 수집한 역사문물만 하여도 수천건에 달한다. 방원90여키로밖에 안되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연길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주요하게는 오래동안 북방 여러민족들이 이곳에 살면서 이룩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²⁾ 그러나 역사문헌에는 연길시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다. 현재에 출토된 문물로 연길시의 역사발전 맥락을 짚어 볼 뿐이다. 비록 연길에 있는 신석기시대 발굴은 미흡하지만 신석기시대 후기에 이미 연길에 인류가 생활했다는 점에서는 단정하고 있다. 연길시 흥안향 동흥2대 서천의 대돈대 우에 반지혈식 거주지가 발견되었고 이 거주지에서 출토된 도자기 파편에 빗살무늬와 빗

1) 장길도개발은 장춘, 길림, 도문을 개발개방선도구로한 중국 두만강지역 합작개발 전망계획이다. 이 개발계획요강이 2009년에 국무원의 비준을 받음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적 개방 대개발이 이뤄지고 있다(중공연변주위발간, “주장 리룡희의 정부사업보고”, 『지부생활』2, 2010, p.6).

2) 吉林省文物志编委会主编(1986), 『延吉市文物志』, 延边新华印刷厂印刷, pp.1-2.

점무늬가 있는데 도안에 갈지자와 사람인자와 뇌문문식이 있다. 이러한 무늬의 도자기는 신석기시대 후기의 문물로서 신석기시대 후기(원시사회말기)에 연길시에 인류가 생존하고 활동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유적지가 연길에서 모두 5곳³⁾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유적지가 말해주다 싶어 연길지역에 오래전부터 인류문명이 존재하였고 발전하여 왔다.

또한 시가지안에 위치한 연길공원안에 소돈대유적이 있는데⁴⁾ 이는 연길시에 원시사회유적이 있음을 입증해주는 주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 연길시에 옥저인의 유적이 매우 많이 있다. 옥저인은 동북고대민족 예맥족계통으로 철기시대의 주요한 거주민이다. 연길의 소영향 제일 동쪽 소영촌으로부터 제일 서쪽에 있는 민주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연길 부르하통하 남쪽의 장백향 동농촌으로부터 제일 동쪽 하룡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산간대지에 옥저인의 원시촌락유적이 있다. 물론 남북으로 흐르는 연집하유역에도 여러 곳의 유적과 무덤이 발견되었다. 이는 2000여년전에 연길에 촌락이 밀집해있었고 인구도 상당히 많았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게다가 발해시기의 유적도 상당히 많이 있다. 연길시 연집향남계4대의 유적지, 남계1대의 유적지, 태암유적지, 금성유적지, 연하6대유적지, 용연유적지가 발견되었고 장백향에 있는 모아산정유적지, 용하유적지, 용하촌남산유적지, 인평유적지, 신평6대유적지가 있으며 소영향에서는 공농1대유적지, 소영자유적지가 있다. 발해성유적지도 여러곳이 발견되었는데 연집향에 태암고성, 홍안향에 북대고성, 장백향에 하룡고성등이 있다. 그리고 여러곳에서 발해무덤이 발견되었다.⁵⁾ 특히 주목되는 바는 연길시 북쪽에 있는 북고성(북대고성이라고도 함)이다. 출토된 옥색유와(옥색 유약을 칠하여서 구운 기와나 벽돌)는 연변지역의 훈춘팔련성(발해동경유적), 화룡서고성(발해중경유적),

3) 5곳으로는 연길시 홍안향 동흥2대 서편의 대둔대 우쪽, 장백향 장동촌1대 남쪽의 대지위, 장백향하룡촌, 동풍촌과 연변건축재료공장 물탱크부근이다(吉林省文物志编委会主编(1986), 『延吉市文物志』, 延边新华印刷厂印刷, p.2).

4) 소돈대유적은 연변조선족자치주문화유물단위로 주급문물보호단위에 속한다. 비문은 1961년 1월 8일에 공포하여 연길시정부에서 세웠다. 비문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년전에 우리나라 한나라 시기를 전후하여 이곳에서 살았던 옥저인들의 마을의 하나이다. 유적에서는 일찍 많은 유물이 나왔는데 동칼, 돌자귀, 그루손잡이질단지, 그루손잡이굽접시등이다. 당시 이곳은 원시사회말기 계단에 처해있었다. 이 폐말을 기준으로 동, 서로 각기 400미터, 북으로 300미터, 남으로 100미터이내를 중점보호구역으로 한다.”고 써 있다.

5) 吉林省文物志编委会主编(1986), 『延吉市文物志』, 延边新华印刷厂印刷, p.5.

개별적인 발해사원묘지에서 발견된 외 다른 발해유적지나 성유적지에서 보기 드문 것이다. 그리고 북대고성주변에 분포된 군사시설로부터 볼 때 남쪽에 모아산산정의 봉화대, 서쪽에 소돈대, 동북쪽에 대돈대가 있어 서로 기각을 이루면서 군사통신연락체계를 형성하였는바 북대고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연길의 서, 북, 동쪽에 이르는 고대 “장성”⁶⁾이 있으니 연길의 방어체계가 비교적 완벽함을 알 수 있고 연길이 갖고 있는 지리적, 군사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하겠다. 그리고 훗날 요금시기 유적도 발견되고 있다. 현재 보존이 잘 된 또 하나의 고대유적으로는 연길동쪽에 있는 성자산성⁷⁾이다.

명나라시기의 문물은 아직 발견된바가 없다. 이 시기 이 지역에서 활동한 여진족은 올랑합부였다. 청나라이후의 문물유적은 140여곳이 있다. 청나라군대가 산해관以南으로 진입한 후 백두산을 “용흥지지”로 하여 봉금정책을 실시하였는 바 연길지역은 200여년간 인가가 없는 삼림지역으로 변하였다. 19세기중반에 들어와서 한반도에서 대량이민이 연변지역에 들어오면서 연길지역도 개척되었다. 1881년에 연길에도 초간국을 설립하였으며 주로는 관내한족을 이민시켜 개발하려고 하였다. 허나 지리적여건으로 말미암아 관내한족의 연변지역으로의 이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⁸⁾ 1885년에 연변지역에 한인전간구를 설치하면서 대량의 한인들이 연변에 들어오게 되고 봉금

6) 연길북쪽의 장성에 관해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고구려시기 장성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고구려가 북부의 읍루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축하였다고 하였다. 장성부근에 많은 발해유적이 있는 정황을 참작하면 발해시기에 건축했을 수 있다. 장성은 남쪽의 화룡시 팔가자서부의 산마루부터 시작하여 용정시 로투구를 거쳐 연길시 북편의 평봉산을 지나 연길동북부의 청다관에 이르면 동남으로 마반산까지 이르는데 길이가 200여리에 달한다. 연길시경내에 비교적 보존이 잘된 곳이 두곳 있는데 한 곳은 연집향 평봉산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연하촌 북고산봉에 이르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연집향을 건너 연집향 소재지 동산에 있는 14리에 달하는 장성구간이다. 이곳에 모두 4개의 봉화대가 있다 (吉林省文物志編委會主編(1986), 『延吉市文物志』 참조).

7) 성자산성은 금나시기 요동선무사 포선만도가 요양에서 대진국을 세운후 후에 남경 즉 성자산산성에 도움을 청하면서 동하국이라고 국호를 바꿨다. 동하국도 마지막에 성자산성에서 몽고에 의해 멸망되었다. 성자산성에는 궁전터가 남아있으며 주변의 성벽도 일부 비교적 완정하게 남아있다.

8) 관내이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는 교통이 불편한 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장춘, 길림지방에서 다시 두만강유역으로 오려면 할바령, 장광재령, 로령등 세개의 산맥이 가로 막혀 있다. 더우기 길림지방의 넓은 평야가 개간되지 않았기에 그곳에 정착하여 더 이상 동쪽으로 이주하려고 하지 않았다(이용식(2012), “연변지역 다원문화의 형성과 특성”, 『디아스포라연구』 제6권 제1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2012, p.64).

정책도 철폐되게 되었다. 1892년에 훈춘초간국을 연길(당시 남강이라고 불렸다)⁹⁾에 옮겨왔으며 연길지역은 이로써 이민에 의해 개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연길에 관청을 설치하고 연변지역의 행정사무를 관할하게 되면서 연길은 연변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되었다.¹⁰⁾ 위만주국시기에도 연길시는 지역중심도시로 되었고 광복후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성립되면서 자치주수부로 되었다.¹¹⁾

연길은 조선족, 한족, 만족, 회족등 여러민족들이 함께 모여살면서 다문화특색을 형성하고 있다. 조선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연길시는 우리민족의 교육, 예술, 민속을 보존발전시켜 가면서 자치지역으로서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연길시가 갖고 있는 민족특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족, 만족등 20여개민족이 함께 살면서 다민족 다원구성을 이루어 여러지역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데 있어 유리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고 더우기 조선, 러시아와 인접하고 한국, 일본과 가까이하고 있어 다국가적인 경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색은 연길이 갖고 있는 지역적 우세와 역사문화우세¹²⁾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9) 연길지명은 본래 연집강이라고 불렸고 또 남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연길” 지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부동한 설이 있다. 명나라시기에 호엽길랑등위의 지역이었는데 “엽길”의 음변으로 연길로 되었다거나 청나라시기에 남강(남황 두 글자의 음변), 또는 연길로 되었다고 하였다. “연길”은 만족어로 산양의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개발초년에 이 지역에서 늘 연기가 자욱하고 안개가 덮였기에 연집강이라고 불렸고 연길은 연집의 음변으로 불리어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연길은 길림의 연장이라는 의미라기도 한다. 청말에 이르러 국자가라고도 불리었는데 관아의 소재지의미이다. 민국시기에 보통 국자라고 불렸으며 연길이라고도 불렸다(연길시인민정부편(1987), 『연길시지명지』, 연변신화인쇄공장에서 인쇄, p.11).

10) 1902년에 연길청을 설치하였고 1910년에 길림성동남로병비도태공서를 설립하였으며 같은해에는 연길청을 연길부로 승격시켰다. 1913년에는 길림성동남로병비도태공서를 길림성동남로관찰서로 고쳤다. 1914년에는 연길도윤공서로 고쳤다. 1929년에는 연길도윤공서를 연길교섭서로 고쳤고 같은 해 9월에는 연길시정주비처로 고쳐 설립하였다.

11) 1934년에 간도성이 성립되었고 1943년 4월1일에는 연길가가 “간도시”로 승격하였다. 1945년 8월 20일에는 “간도임시정부”가 성립되었으며 같은해 11월20일에는 연변행정독찰전원공서가 “간도임시정부”를 대신하였다. 그리하여 “간도시”를 연길가로 다시 고쳤으며 1946년에 다시 연길가를 연길시로 고쳤다. 1952년에 연변조선족자치구인민정부를 성립하고 연길시는 자치구에 직속관할을 받았으며 자치구의 수부로 되었다. 1955년 12월에 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변조선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고치고 연길시는 자치주의 수부로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길은 지역적, 정책적, 자원적, 문화적 우세를 갖고 있으며 그 도시발전도 여타도시에 비하여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도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문제점도 적지 않다.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병” 외에도 문화자원에 대한 중시가 아직 크지 않은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아래에 연길의 도시화 과정에 있어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저한다.

Ⅲ. 도시화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보완대책

현재 중국은 6억에 달하는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도심재개발과 도시의 확장 즉 신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발확장으로 대표되는 도시정책은 도시민의 ‘정주’와 ‘정착’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외적 성장과 개발 이익의 창출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환경 및 생태주의적 가치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를 훼손하고 개발성고가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의 생활 문화와 역사성, 장소성을 훼손하는 개발현장은 신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등 시민들한테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물론 도시는 인간과 환경 그리고 문화에 주의를 기울여 대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시점에 처해있다. 위에서 살펴본 우세에 비해 실질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개발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
- 12) 연변지역의 문화우세에 대해 주정부 당위서기였던 등개는 “우리주는 소수민족지역일뿐만아니라 로 혁명기지로써 중화민족의 전통문화, 중국조선족문화와 혁명투쟁에서 나타난 홍색문화도 가지고 있어 선명한 문화우세를 가지고 있다.” 고 하였다(중공연변주위발간(2011), “연변문화의 발전과 번영을 추진하기에 노력해야”, 『지부생활』2, 연변주위지부생활잡지사, p.9). 그러면서 아래에 민족문화발전의 보호와 계승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였고 인재배양과 문화의 작용,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발전, 그리고 문예가와 문화사업인들에 대한지지 등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자원에 대한 보호와 정리연구 작업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지역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연길 도시확대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병”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로 도시인구의 팽창문제이다. 연길시에서는 지금 지역규모를 확대하고 인구규모를 확대시키는것을 도시발전의 첫째 목표로 삼고 있다.¹³⁾ 그리하여 외지인들에게 농촌호구를 도시호구로 옮기고 도시로 들어오는 기준을 낮추는 등 방법으로 도시인구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연룡도 핵심도시로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작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싶이 도시의 수용능력에는 도시자원 수용능력, 도시환경 수용능력, 도시생태계통 수용능력 및 도시기초시설 수용능력, 도시산업 수용능력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한 도시의 발전규모를 통제하게 된다.¹⁴⁾ 그 중 도시수용능력에서 물자원의 제약이 제일 우선시 된다. 연길의 물자원은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듯 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팽창하게 되면 필연코 물자원의 제약을 받게 된다. 부르하통하와 연집하의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결코 홀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이다. 또한 취업자리의 제약도 중요한 부분인바 이미 연길시에서 취업양성 새 기제와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하여 외지인들과 농촌 잉여노동력의 도시에서의 취업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취업난이 이미 연길시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부상한만큼¹⁵⁾ 앞으로 농촌인구의 도시진출로 말미암아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가 도시수용능력의 한계 고비가 될 것이다. 둘째로 도시발전에 있어 환경악화이다. 이는 연길도시확장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문제이다. 공업발전속도가 빨라지고 건설현장이 많아지며 자동차의 수가 신속하게 증가됨에 따라 연기, 먼지와 배기가스가 도시대기오염의 주요인소로 되고 있는 것이다. 연길시에서는 매년 만대 이상의 자가용 자동차가 증가되고 있는데 제한된 도시구역내에서 매일 많은 자동차들이 가스를 내보내게 되면 시민들의 건강에 아주 해로운 영향의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쓰레기 오염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연길에서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산골짜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또다른 생태환경파괴를 조성하게 된다. 교통체증

13) 중공연변주위발간(2010), 『지부생활』4, 연변주위지부생활잡지사, p.5.

14) 대중과학편집부(2012), 『대중과학』7, 연변인민출판사, p.6.

15)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의 리룡회주장 “정부사업고”에서 도시등록실업률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2011년에 도시 등록실업률은 3.7%이내로 통제되었다고 하였으나 2012년 주요목표에서는 도시등록실업률을 4.5%이내로 통제한다고 하였다(중공연변주위발간(2012), 『지부생활』2, 연변주위지부생활잡지사, p.11). 이는 도시확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취업난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라 하겠다.

문제도 점차 연길도시화발전에 있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되고 있다. 자동차의 보유량과 사용량이 이미 도로교통체통의 공급능력을 능가하여 출퇴근 시간이나 명절날에는 교통체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민들에게 물질적 또는 시간적으로 손해를 입히게 하는 것이다. 교통체증과 더불어 주차장문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시내에 주차공간이 적어 도로주변에 주차하는 상황이 날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 이것은 알심들여 도시를 설계하고 토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도시병”은 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통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방책에 있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도시에 완전한 녹색생태계통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즉 과학적도시발전에 있어 생태환경보호가 주요한 해결방책으로 된다. 다시말하면 환경오염을 다스리는 문제에 있어 녹화의 작용에 중시를 돌려 도시 곳곳에 녹지를 만들어 도시속에 “녹색심장”을 건설하게 하는 것이다. 연길시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겼는데 매개 단지 사이에는 반드시 녹지와 휴식공간을 만들고 수역, 녹색격리대등 부분이 있게 하여 단지내의 기능을 구전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환경과 도시가 융합되어 호흡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또한 집중과 분산이 결합되게 하는 “조합단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조합단지”내에서 취업, 의료, 교육 등 자원을 완미하게 배치함으로 단지내에서 전부의 생산활동을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업과 생태 환경이 개선되고 교통체증상황도 경감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대화한 쓰레기 처리장시설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특히 도시물자원과 도시토지자원에 대한 그 한계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합리한 기획이 따라야 도시확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두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문화자원에 대한 보호와 이용의 문제이다. 앞에서 문화자원우세에서 보았듯이 연길에는 풍부한 문화자원이 있다. 고대유적이 전 도시 지역에 널리 있고 근현대 유적지도 상당히 많이 있으며 민족특색이 짙은 점은 연길시가 갖고 있는 자원이자 비전의 토대가 된다. 연길시에서도 문물관리와 보호¹⁶⁾가 일찍 시

16) 연길시 구역내의 문물관리사업은 191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당시 일본 鳥居박사와 内藤虎次郎은 성자산성과 부근의 지구에 대해 고고학 발굴을 하면서 석기와 도자기파편등 일부 원시사회유물을 채집하였다. 이로부터 이 지방의 문물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1961년1월에 연길시에는 처음으로 되는 문물보호단위-연변주급문물보호단위2개(소둔대유적, 연길위자위단부무기탈취유적)이 있게 되었다. 1981년에는 연길시에 성급문물보호단위1개(왕우구 항일유적대근거지)가 있게 되었다(길림성연길시지방지편찬위원회편(2003), 「연길시지」(1986~2000), 중화서국, p.693).

작되었다. 그러나 현재 고대유적에 대한 보호가 잘 되지 못하여 보존상태가 낙후하다. 대부분의 유적이 파괴되었거나 도굴되어 현재 남아 있는 유적이 몇 곳 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적재부가 인간으로서 회억하고 반성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시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 도시문화공간을 어떻게 재창조해야 할지 의문된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유적에 대한 보호와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크게는 동쪽에 산성, 서, 북쪽에 장성, 남쪽에 봉화대로 연길도시주변을 고대문화유적의 “장성”과 성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곳에 지역 역사를 설명하는 장소를 만들어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들놀이와 더불어 지역의 역사문화를 향수 할 수 있는 문화의 장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가지에 널려있는 근현대 문물유적에 대해서도 시급한 난개발을 피하고 보존하고 수전함으로 그 곳을 인문체험, 인문강좌, 인문행사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의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 등 인문학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으로써 비인간적인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삶의 가치’ 회복을 도모하는 인문공동체를 형성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제시기유적¹⁷⁾에 대해서도 정리와 연구를 통해 보호조치와 함께 식민지시기 역사를 반성하고 새일대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여기에 주의를 돌리고 있으나¹⁸⁾ 아직 그 현장을 활용하는 면에서 인문화적인 투입이 결여하다고 본다. 웅당 도시의 인문적 환경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하여 거기에 맞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낡은 도시구역에 생명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도시의 인문환경, 특히 고유한 문화적 특성(문화 정체성)을 살피 문화 지도를 만드

17) 일제시기 유적으로 일제가 설립한 기구들의 유적 즉 위만 “간도성”공서 유적(연길시하남가, 현 연길시인민정부사무청사, 1984년2월에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의 비준으로 주급문물보호단위로 되었다.), 일본관동군간도헌병대부유적 등이 있을 뿐 아니라 혁명문물도 있으니 즉 왕우구항일유적대근거지, 삼도구항일유적대근거지 등이 있다.

18) 1987년 9월, 전주문물간부들을 조직하여 주공안부문과 회동하여 성급중점문물보호단위 용정간도총영사관 옛터, 주급중점문물보호단위 위간도성공서 옛터, 연길변무독판공서등, “네가지가 있게”하는 건설정황과 문물안전에 대해 연합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전원설비가 낙후하고 석유액화가스 통으로 물을 끓이는 등 불안전인소들을 발견하였다. 연합검사조는 당장에서 유관부문의 책임을 묻고 낡아질 정하여 전원을 수리하고 전원설비를 건물밖에 안장하도록 하였으며 문물보호에 불안전한 인소를 배제하였다(연변조선족자치주지방지편찬위원회편(1996), 「연변조선족자치주지」하권 제 26편, 중화서국, p. 1592).

는 작업과 시민들의 일상문화와 새로운 창조적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에 인문학의 제분과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선족문화특색을 갖춘 도시형상을 수립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개혁개방 이래 도시화라는 명목하에 많은 민족문화유산이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허다한 조선족문화특색의 건축이 “구도시개조”의 기치아래 경제효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조”되어 버렸고 사라져 버렸다. “건설성파괴”를 조성한 것이다. 맹목적으로 구시가 지역에 고층건물을 건축하여 조선족문화유산과 역사고적이 엄청난 파괴를 받았다.¹⁹⁾ 심지어 문화유산을 도시건설의 장애와 부담으로 보고 민족특색을 홀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에서 제창하는 민족문화대발전, 대변영을 촉진할데 관한 정책방침에도 어긋나는 바 반드시 도시건설중에서 민족문화의 보호와 계승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족자치주수부로서의 자기의 풍격과 개성을 갖추어 여행도시로서 문화도시로서의 특색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IV. 맺는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는 난개발과 고층화, 자동차 도시, 반생태 도시라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난개발의 원인은 도시개발과 도시기획이 도시인들의 요구에 맞는 생태환경, 문화의 유기적 공존을 목표로 하지 않고 개발업자들의 이익과 도시의 빠른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물론 개발과정에서의 비리와 부패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도시환경의 파괴를 가져온다. 초고층화는 그 자체가 난개발의 표상이다. 토지이용률을 높여 최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개발업자의 목표다. 따라서 건물이 초고층화 과밀화하는 과정에서 도시는 필연적으로 자연과 역사가 대대적으로

19) 그리고 농촌에서도 조선족거주민특점을 보기 어려운바 조선족거주민특색의 농가를 “신농촌” 건설 중에서 모두 밀어버리고 획일화된 통일적 기와집으로 새롭게 건설하여 조선족특색이 사라지게 하였다. “신농촌” 건설을 “새마을” 건설로 틀리게 이해하였기에 조선족특색의 농가를 “민속촌”으로 전람하는 곳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다. 조선족특색의 건축은 도시에서 더욱 보기 어렵게 되었다(이흥국등 주편(2010), 『중국조선족문화 및 그 특색연구』, 연변인민출판사, p.262).

파괴되고 '공원'이라는 '인공 정원'이나 '도시 브랜드'와 같은 스토리로 대체된다. 또한 고층화는 도시의 열섬현상을 발생시키고 개발과정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장소적 가치마저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하기에 우리는 인문도시라는 도시발전모색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즉 다시말하면 첫째, 인문도시는 도시가 간직한 문화자원을 보존, 발굴,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 가치를 창조한 도시이다. 둘째, 인문도시는 도시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여러 민족의 도시인이 저마다의 특색을 향유할 수 있는 다원문화공간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인문도시는 도시민 각 계층이 참여하여 개발된 도시여야 한다.

연길이 급속한 도시확장과 함께 큰 도시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봉착하게 될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도시발전 효익보다 더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다. 하기에 생태환경도시, 문화도시, 인문도시라는 잠재적인 재부를 발굴 이용하여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모색을 갖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자면 도시 문제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학술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상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여러분야의 학자들이 자주되는 토론과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도시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살기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면 도시는 인간, 환경, 문화의 유기적 공존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지나친 효율성과 기능주의 관점을 극복하고 도시개발에 있어 도시인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기획발전을 해야 한다.

현재 연길시의 발전에 있어 지역의 고유성과 특성을 활용하여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연길의 문화적 특색과 우세를 몇가지로 짚어보면 첫째, 자연문화풍격이 독특하다. 중·러·조 3국의 국경을 인접한 곳으로 한반도 동해를 마주하여 한국과 일본을 가까이 하고 있는 동북아의 금삼각지에 위치해 있다. 또한 풍광이 수려한 백두산과 백두삼림은 여름철 피서여행의 명승으로 꼽힌다. 이러한 자연우세는 연길시가 여행문화도시로 발전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원문화지역으로서의 다양한 민족풍속, 다양한 건축문화특색등이 선명하다. 조선족, 만족, 회족 등 20여개민족이 함께 모여사는 다민족, 다원문화형태를 구성하였기에 각자 풍부한 민족문화습속으로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다양한 문화들을 느낄 수 있다. 셋째, 역사문화가 유구하고 북방여러민족들의 다양한 문화유적은 깊은 문화정취를 느낄수 있게 한다. 넷째, 조선족자치주수부로서의 민족특색이 돌출하다. 때문

에 조선족문화가 연결시 문화건설에서의 전략적 지위를 확립하고 자체의 민족문화특색을 지닌 도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문화가 없는 도시는 영혼이 없는 도시이다. 세계상의 도시는 천차만별하지만 근본적인 차별은 바로 도시문화의 부동함에 있다. 도시문화는 한개 도시의 역사적 축적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체현인 것이다.²⁰⁾ 하기에 특색도시를 건설함에 반드시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자원을 보호, 연구하고 도시민이 함께 하는 공동의 문화재창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 이흥국등 주편(2010), 『중국조선족문화 및 그 특색연구』, 연변인민출판사, p.259.

참 고 문 헌

- 중공연변주위발간(2010), 『지부생활』2, 연변주위지부생활잡지사.
- 중공연변주위발간(2010), 『지부생활』4, 연변주위지부생활잡지사.
- 중공연변주위발간(2011), 『지부생활』2, 연변주위지부생활잡지사.
- 중공연변주위발간(2012), 『지부생활』2, 연변주위지부생활잡지사.
- 대중과학편집부(2012), 『대중과학』7, 연변인민출판사.
- 吉林省文物志编委会主编(1986), 『延吉市文物志』, 延边新华印刷厂印刷.
- 연길시인민정부편(1987), 『연길시지명지』, 연변신화인쇄공장인쇄.
- 연변조선족자치주지방지편찬위원회편(1996), 『연변조선족자치주지』하권, 중화서국.
- 길림성연길시지방지편찬위원회편(2003), 『연길시지』(1986~2000), 중화서국.
- 이흥국등 주편(2010), 『중국조선족문화 및 그 특색연구』, 연변인민출판사.
- 이용식(2012), “연변지역 다원문화의 형성과 특성”, 『디아스포라연구』제6권 제1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도시재생 시범 지역의 공간 구성과 공간적 특징 - 전주시 노송동 사례 -

한유석**

- I. 들어가며(개발에서 재생으로)
- II. 전주시 노송동 TB지역 개관
- III. 각 공간의 특징과 시간에 따른 공간 구성 변화
- IV. 나오며

I. 들어가며(개발에서 재생으로)

앤디 메리필드(2005)가 이야기하듯 현대 도시는 사회적 삶이 강화되는 곳이라기보다 사회 그 자체가 분열되는 곳인지도 모른다. 근대적 시공간 압축 과정에서 개발과 재개발을 통해 도시화가 진행되고, 모던한 양식의 네모반듯한 건물들과 격자형 도로망이 도시를 관통하면서 도시는 더욱 획일화된 형태로 변모해왔다. 그 속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도시라는 섬 안에 갇혀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그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갈 뿐이다.

한국의 도시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도시들은 도

* 본고는 <TB지역 역사문화자원조사>의 일환으로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수행된 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 연구의 대상지역인 노송동 일대를 방문하여 추가조사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정 및 재구성하였다.

**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 박사과정

시개발 과정에서 팔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개발이라는 가시적 성과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역사도시로서의 가치가 훼손된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전면 철거에 의한 재개발은 기존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상당 부분 파괴하였고,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도시의 외관을 모던한 양식의 도시로 변모시켰다. 이는 도시의 지형을 가독성 있는 공간으로 획일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제임스 C. 스콧, 2010).

현재 한국의 도시 경관은 '하이 모더니티(High Modernity)'라는 용어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근현대 시기 도시정책 입안자들의 여러 대응과 노력의 결과로서 20세기의 급격한 변화의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했던, 지난 시기의 역사적 자산이면서 동시에 그 의미와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여러모로 되돌아보아야 할 역사적 실체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앙리 르페브르' (2011)가 코르뷔지에적(Corbusierian) '주거용 기계들'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던 것처럼, 20세기의 시간 속 한국의 도시공간은 한국판 '브라질리아'이자, 한국판 '찬디가르'의 형태로 변모해왔고, 어느 정도 '르 코르뷔지에'의 유토피아(?)에 근접한 형태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한국의 도시계획 양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전면 철거와 획일적인 공간 구획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대대적 수정을 통해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개발을 시행하려 노력하는 중이다. 이는 역사성을 지닌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과 새로운 주거 유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한국의 도시계획에 반영된 한 사례로 전주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전주시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노송동과 노송천 일대를 주요 무대로 진행 중이다.¹⁾

1)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명에 의하면, 전주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비전은 "그린 & 휴먼시티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 도심창출"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 첫째, '노송천 일대의 중앙시장 문화재생', 둘째, '노송천 복원 & 그린 인프라 구축', 마지막으로 본고의 조사지역인 노송동 노인주거지역과 관련된 '지속가능 주민친화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천사마을 경제 재생'이 그것이다. 이 중 세 번째 목표는 커뮤니티를 활용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것으로 그 추진방향은 첫째, 주민 주도 주거재생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둘째,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경제적 재생 도모, 셋째, 자연자원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그린 시티 구축이다(<http://jeonju.kourc.or.kr> 사이트를 참고).

전주시의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이하 TB) 지역인 전주시 노송동 지역(집창촌이 위치한 지역)과 노송천 일대에 전면 철거에 의한 재개발 방식이 아닌 도시재생적 관점에서 지역의 형태를 보존하고, 기존 역사적 형태를 복원하려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인 제이콥스가 그토록 열망했던 도시공간의 다양성과 창조성, 일상성을 회복(Jane Jacobs, 1992)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여겨진다.²⁾

전술하였듯이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³⁾가 진행되는 지역의 공간 구성과 공간적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 지역의 공간성과 지역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노송동과 같은 도시재생 시범지역은 거대한 도시계획에 따라 구획된 공간이 아니라, 시대적 층위를 형성하며 조금씩 조금씩 덧대어가며 지어져 있는 여러 가옥들이 하나의 군을 이루며 나름의 역사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시대적 층위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 스토리는 결국 지역의 특성으로 귀결되기에 올바른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가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공간성과 지역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다.⁴⁾

2) 변은주(2012)에 의하면, 제인 제이콥스가 주장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 인간의 활동이다. 대도시에서 낮은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과 활기를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쁜 길을 재촉하는 사람들, 눈요기를 하며 상점가를 거니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동네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활동들로 도시 근란을 채우는 것이 바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다.

3)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에 그 의미를 규정짓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최근에 발간된 도시재생사업단(2012)에서 엮은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에서 구분한 일례를 참고하면, 세계 각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역사 지역·지구를 활용한 도시재생, 둘째,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도시재생, 셋째, 커뮤니티를 활용한 도시재생, 넷째, 지역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 중 이 연구의 조사지역인 전주시 노송동 노인주거지역은 커뮤니티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형태이다.

4) 도시재생 프로젝트 지역의 공간성과 지역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만큼 지역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재생 방식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실제적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의 본래적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는 공간성과 지역성에 초점을 둔 연구이기에 지역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된 부분은 간접적인 분석 대상 자료로서 일반서술 안에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전주시 노송동 TB지역 개관

1. 지리적 위치와 지형

후삼국 시대 견훤이 전주에 도읍을 정할 당시, 노송동 일대가 견훤성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노송동은 역사의 수면 위로 등장한다. 따라서 노송동에 이미 오래 전부터 기린봉 자락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규남·이길재).

오래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던 노송동은 기린봉의 산사면 아래, 전주시의 구도심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조사지역인 TB지역 내 노인주거지역은 급하고 완만한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로를 경계로 '선미촌'⁵⁾과 마주보고 있다. 노인주거지역은 1층과 2층으로 된 주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새로 지은 원룸들이 들어 서 있다. 상권의 쇠퇴로 인해 노인주거지역 내 근린상가는 거의 쇠퇴한 상황이며, 남북로 도로변에 선미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린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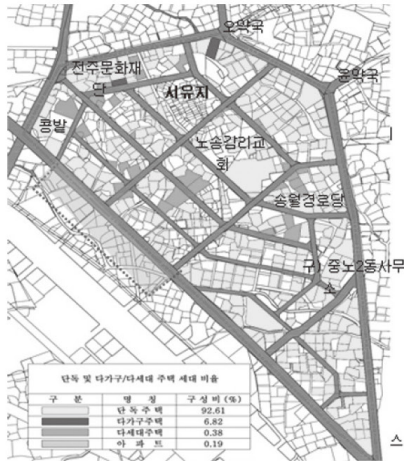
노인주거지역 주변에는 2개의 재래시장과 2005년에 개장한 대형마트가 들어 서 있는데, 이러한 대형마트의 입점은 근린상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남북로에서 구 KBS 방향으로 가다가 우회전하면 모래내 시장이 위치해 있고, 기린로를 지나 팔달로 안쪽으로 중앙시장이 위치해 있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전주고등학교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데 노인주거지역에서 가장 거리가 가깝다.

전술하였듯이, 노송동 노인주거지역은 견훤성터에 인접해 있었으며 이후 전주부성의 근교에 위치해 있었기에 이른 시기부터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던 지대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지형의 마을 구조가 형성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이다. 전쟁 이후 피난민촌으로 형성된 것이 주요 계기가 되었는데, 1954년 진북동에 있던 제2피난민수용소 난민 320세대 1,600여명이 구 형무소 옆(현 노송동)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피난민촌이 형성되었다. 당시 언덕 경사면에 판자촌이 형성되었고, 이후 무허가 판자집들이 벽돌이나 콘크리트 형태의 구조물로 바뀌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북로를 사이로 노인주거지역과 마주보고 있는 선미촌은 한국전쟁 이후 성매매 여성들이 전주역 근처로 모여들면서 형성된 것이다. 역 주변에 형성된 싸구려 여인숙

5) 전주시청 건너편에 있는 집창촌을 '선미촌'이라 부른다.

과 매매촌 업소들이 점차 확대되면서 한때는 80개 업소가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현재는 대략 40여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며, 집창촌의 존재는 건너편에 위치한 노인거주지역에 젊은 인구의 유입을 막는 주요 요인이다.



자료 : 국토해양부 외 2처.

〈그림 1〉 조사지역 범위 표시와 조사지역 전경사진

2. 근대적 공간으로의 재편과 그에 따른 경관 변화

1) 근대적 공간으로 재편된 노송동

노송동이라는 지명은 일제시대 지명인 ‘노송리’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송’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명칭은 늙은 소나무가 많았던 것에서 기인한다. 노송동 지명과 관련해 노송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는 설명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노송동 명칭 변화

1914. 10. 1	전주면을 설치, 동정리, 신동리, 삼리 일부와 용전면 기봉리, 부동면의 오계리·육계리 병합하여 이동면 노송리 편입
1915. 12. 6	이동면 노송리에서 전주면 노송정 변경
1940.1 1. 1	이동면 인봉리가 전주부 인봉정으로 전주부 편입
1946. 7. 10	전주시 노송동으로 변경
1957. 12. 12	전주시 중노송동, 남노송동, 서노송동 분동
1970. 7. 1	중노송동을 중노송 1가동, 중노송동 2가동으로 분동
1994. 8. 8	중노송 1가동, 중노송동 2가동을 중노송1동, 중노송2동으로 명칭변경
2005. 8. 1	중노송1동, 중노송2동, 남노송동, 서노송동을 노송동으로 통합

그렇다면 노송동이 전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는 근대라는 시공간 속에서 전주라는 도시가 개발되는 과정과 연관된다. 후백제 전 현이 터를 정하고 산성을 쌓은 이후 자연 취락으로서 존재하던 노송동은 근대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전주의 주요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1907년 호남선 완공 이후 호남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식량 수탈을 위해 일제는 전주와 호남선을 연결하는 경편철도를 건설하였다. 1914년부터 1927년까지 사적 자본이 운영하던 경편철도는 1927년 철도국에 매수되면서 국유철도가 되었고, 이는 경성과 전주를 잇는 경전북부선이 개통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1929년 고사동에 있던 전주역사가 노송동 현 시청사 자리로 이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부근이 활성화되지 못하자 중심 시가지와의 원활한 연계에 의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문에서 역에 이르는 386m의 도로를 폭원 22m로 개설·포장했다(김현숙 2004). 이에 따라 북문을 중심으로 역전통이 형성되어 북문 밖장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1930년대 이후 번성하였다.

노송동이 전주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된 또 다른 이유는 노송동 일대에 여러 공립학교들이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노송동 인근에 위치해 있던 학교의 현황⁹⁾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940년 노송동 인근 학교현황

학교명	위치	개교일	현 학교명
	주요 연혁		
전주남공립중학교	노송정 180번지	1937년 4월	전주남중학교 전주제일고등학교
	전주공립중학교로 개교, 51년 남중학교 및 전주상업고등학교 분리, 남중학교는 92년 이전		
전주북공립중학교	노송정 488번지	1919년 8월	전주북중학교(폐교)
	전주고등보통학교 개교, 51년 전주고등학교 개칭, 1970년 폐교		
전주공립농업학교	노송정 518번지	1910년 5월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전주농림학교 개교, 51년 전주농업고등학교 개칭, 06년 개칭		
전주공립고등여학교	노송정 10번지	1924년 4월	폐교
	24년~32년까지 전북공립고등여학교와 교장이 같음		
전북공립고등여학교	노송정 98번지	1926년 5월	전주여고등학교
	전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개교, 37년 기전여학교 수용, 51년 개칭		
전주풍남공립소학교	풍남정 102번지	1919년 11월	전주풍남초등학교
	전주여자공립보통학교 개교, 41년 전주풍남국민학교 개칭		
전주상생공립국민학교	태평동 64번지	1897년 7월	전주초등학교
	전라북도 공립소학교(양사제)개교, 19년 여자부 전주여자공립보통학교로 분리, 25년 이전, 50년 개칭, 61년 진북국민학교 분리, 71년 화산국민학교 분리		

이처럼 당시 대부분의 학교들이 노송동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많은 학교들이 위치함으로써 노송동은 교육의 중심 지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이유는 일본인들과 지역 유지들과의 힘겨루기에서 기인하였다. 일본인들이 현재의 풍남동과 교동 일대에 자신들의 마을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당시 향교를 중심으로 많은 한옥들이 들어서 있던 이 일대의 땅을 지역 유지들이 일본인들에게 팔지 않았다. 이에 일본인들은 교동에 들어가기 위해 노송동 일대에 공립학교를 건립하여 교동 일대 주민들을 노송동으로 이주시키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송동 일대에 많은 학교들이 건립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이후 노송동은 교통의 중심지이자 교육의 중심지로서 전주의 주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전주역 주변에 형성된 집창촌,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상대적 소외 등으로 인해 현재는 ‘낙후된’ 공간이자 ‘오래된’, ‘노후화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상징적 건축물의 이전과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노송동의 경관 변화

도시 공간 속 역사적 건축물들은 인공 경관을 형성하고 그 공간을 특징짓는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징적 건축물들을 통해 과거를 떠올리고 그 경관을 통해 기억하는 방식을 습득한다. 이-푸 투안(2011)은 “어떤 대상들(건축물)은 영겁의 시간동안 장소로서 지속되며 특정 문화보다 오래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도시 공간의 건축물은 기억을 매개하는 이정표이자 연결 통로로서 기능한다.

한편 노송동은 전주의 행정동 중 하나로서 주택가와 근린 상가로 구성된 평범한 지역이다. 단순한 도시 근린 공간으로서 주택가와 상가, 여러 건물로 이루어진 별 특색 없는 공간이다. 그러나 구 전주역의 현 전주역으로의 이전과 홈플러스라는 대형마트의 입점 등 여러 의미 있는 건축물의 유입과 이전은 노송동의 경관을 변화시켜 왔다. 또한 도로 개통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경관이 변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가시화된 시간으로서의 장소, 즉 지나간 시간의 기념물로서의 장소가 특정 세대(구세대)에게는 여전히 기억의 매개물로 존재함을 의미하며, 특정 세대(신세대)에게는 구세대를 통해 전수된 예전 노송동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6) 아래 표는 「전주부사」의 내용들을 토대로 편집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송동의 상징적 건축물의 이전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도시 경관이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의 기억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구 전주역의 이전에 따른 시청의 현 위치로의 이전, 상수도 개설 및 소방도로 건설, 홈플러스의 입점과 관련된 도시 경관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구 전주역의 우아동으로의 이전과 시청의 현 위치로의 이전

고사동에 있던 전주역사가 1929년에 노송동 현 시청사 자리로 이전한 이후 현 시청 자리는 사람과 물품이 나고 드는 역전통으로서 기능하였다. 이후 1970년대에 전주역 이전 계획이 세워지고 1978년에 우아동으로의 이전 계획이 발표된 후 1981년 우아동에 새 역사가 신축되기에 이른다. 김현숙(2004)에 의하면 “전주역사의 이전은 교통 계획 측면에서 기존의 전라선 철도가 도심을 관통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문제의 완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역사를 시의 동측 경계부 가까이로 이전하고, 이곳에서 팔달로에 연결되는 광로 백제로를 계획하였으며, 역전 광로변에 상업지역을 배분하는 효과를 냈다”고 한다. 또한 전주역사의 이전이 도시구조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철도역을 경계로 북서방향으로만 성장해 가던 도시발전축을 동서방향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제로변에 업무지구를 지정하여 공공업무기능 유치를 의도함으로써 동서발전축의 개발가능성을 한층 높인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주역이 이전하기 전의 풍경은 어떠했을까? 김규남·이길재의 『지명으로 보는 전주 백년』에서 당시 전주역 부근의 풍경을 확인할 수 있다.

전주역사 앞에서 서노송동으로 넘어가는 길은 현 코아백화점에서 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 건널목과 조그만 다리를 건너 지금의 서노송동 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전주역에서 남노송동에서 내려오는 천변을 따라 올라가다 건널목을 건너 전주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그 사이는 전주역 건물과 전라선이 가로 막혀 있었고, 기찻길 너머로는 개천이 흐르고 있어서 두 지역은 서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전주역 뒤로 선미촌이 자리잡게 된 까닭도 전주역과 기찻길을 경계로 이 지역이 시내 중심부와 차단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이곳에 뚝너머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도 기찻길이 두 지역을 가로막는 독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전주역 주변은 넓은 광장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전주역 북쪽 기찻길 주변에는 연탄 공장이 길게 자리잡고 있었고, 전

주역 역사 부근에는 대한통운 건물과 창고가 있었다. (중략) 전라선과 전주역이 지금의 위치로 옮겨가 전라선 자리에 기린로가 개설되고, 전주역에 전주시청 청사가 조형미를 갖추고 세워지게 된 후, 기린로 주변과 전주시청 주변에는 빌딩들이 속속 들어서게 된다. 또한 전주역 앞으로 흐르던 개천도 구 역사 앞 뿐만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모두 복개된 데다가, 중앙시장과 팔달로 사이에 코아백화점이 들어서면서는 전주 제일의 백화점으로 자리잡는다.

(김규남·이길재 2001)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전주역의 이전으로 선로가 변경되면서 그 자리에 기린로가 개설된다. 기존 전주역 건물과 전라선, 개천 등에 의해 서노송동사무소(현 전주문화재단) 방면과 전주고등학교 방면이 차단되어 있었는데, 기린로가 개설되고 똑이 허물어지면서 선미촌도 도로변에 위치하게 된다. 이후 시청이 들어오면서 일대에 여러 빌딩들이 건축되었고, 현재와 같이 대로변 양옆으로 빌딩 숲을 이루는 경관으로 변모하였다.

전주역이 있을 당시에 주변의 경관은 숙박을 위한 허름한 여관과 선미촌으로 대표되었다. 역을 끼고 숙박업소와 집창촌이 발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시청이 들어선 현재까지 여전히 비슷한 경관을 유지하고 있음이 놀라울 따름이다. 기린로변을 따라 여전히 선미촌 성매매 업소들이 밤이면 불을 밝히고 있고, 미담교회 근처 언덕부터 구 KBS로 올라가는 언덕 전 사거리까지 여전히 여관들이 남아 있어 예전에 이 일대가 역 근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시청이라는 행정기관의 이전으로 인해 집창촌이 폐쇄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될 거라 여겼던 지역민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물론 시의회를 비롯해 몇몇 행정기관과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선미촌의 존재는 지역 이미지에 큰 손상을 끼치고 있다. 선미촌을 지칭하던 ‘뚝너머’가 시청의 현 위치로의 이전 이후 ‘시청뒤’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시청뒤’라는 단어는 시청이라는 행정기관과는 전혀 무관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며, ‘시청뒤’에서 사람들은 ‘시청’이라는 이미지보다 ‘뒤’라는 말에 방점을 두고 선미촌을 떠올린다.

그렇지만, 시청의 이전은 분명히 주변 인공경관을 바꿔 놓았다. 현재는 제방길과 철로로 기억되던 전주역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넓은 기린로변을 따라 여러 빌딩들이 늘어선 경관으로 변모했다. 전주로 찾아들고, 전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로 붐비던 공간이 이제는 전주에 사는 사람들이 민원을 보거나 근처에 일을 보기 위

해 오는 일상의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전주 시청의 현 위치로의 이전은 다른 행정 기관들의 유입을 가져왔고, 이는 이 지역이 도심 내 행정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이 역이 있던 곳에서 행정기관이 위치한 곳으로 변화하였다. 여기에 2005년 까르푸(현 홈플러스)가 근처에 들어서면서 대형유통마트를 찾는 사람들과 차량들의 모습이 도시 경관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 상수도 개설 및 소방도로 건설

동네 공동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 먹고 함께 빨래를 하던 풍경은 이제는 사진 속에서나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노송동에도 공동우물의 터가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1960년대 경 상수도가 개설되고 이후 전면적으로 수도가 보급되면서 우물가에 모인 아낙들의 풍경은 사라진 과거의 풍경이 되었다. 상수도 개설은 여러 면에서 여성들의 삶을 바꿔 놓았으며 이는 세탁기의 등장 이후 가속화되었다.

상수도 개설과 소방도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확충은 한 지역의 지형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 앞에서 이야기한 상수도 개설이 여성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다면, 소방도로 건설은 지역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 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들과 도시 하층민들이 정착해 살던 지역이다. 비탈진 경사면에 계획에 의한 구획 없이 그저 길나는 방향으로 판자집들을 지어 살던 곳으로 그 외형이 현재도 남아 있다. 상수도가 개설된 시기는 오래되었지만 이 일대에 전반적으로 수도가 보급된 것은 전주의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였고, 상수도 보급 이후에도 오랜 기간 우물이 사용되었다.

소방도로는 기존 덧대어 지은 집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형태의 기존 지형 때문에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건설되었다. 노인주거지역과 선미촌 일대에 소방도로가 들어선 것은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판자촌으로 덧대어 지은 집들이 대부분인 작은 골목길로 얹혀 있던 노인주거지역에 소방도로가 건설되면서 소방도로를 지나는 길에 위치한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또한 소방도로 건설은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주를 이루던 지역을 격자형의 형태로 바꾸어 놓았으며, 도로가 난 길가에 있는 일부 건축물들은 그 형태를 도로에 맞게 개조하게 되었다.

(3) 홈플러스 입점

대형유통마트의 노송동 입점은 노송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오랜 기간 ‘효림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던 자리에 보습학원이 들어섰고, 학원 상권의 신도심 이전으로 인해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더니 2005년 8월 11일 대형유통마트 ‘까르푸’가 들어섰다. 이후 ‘홈에버’로, 다시 ‘홈플러스’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홈플러스가 효림롤러스케이트장이었을 당시 이 공간은 청소년들의 장이었다. 학생들의 미팅 장소였으며, 당시 유행하던 최신 가요를 들으며 롤러를 탈 수 있는 최적의 놀이터였다. 또한 비행 청소년들의 운집소였는데 이로 인해 청소년들 간 크고 작은 싸움들이 발생하던 터였다.

현재 홈플러스 일대는 시내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대형유통마트가 들어서 있는 덕분에 많은 사람들과 차량들이 몰리는 노송동에서 가장 활성화된 공간이다.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대형마트 이용객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차를 몰고 와서 장을 보고 다시 차를 타고 떠나는 패턴의 이용객들은 홈플러스를 노송동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홈플러스의 위치와 관련해 ‘노송동 홈플러스’라는 말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기린로에 위치한 홈플러스’, ‘시청 근처 홈플러스’, ‘전주고 옆 홈플러스’라는 말로 홈플러스의 위치를 설명한다. 이는 동명이 아닌 도로나 주변 건축물과 연관시켜 홈플러스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송동의 위치를 물을 때 ‘홈플러스 근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홈플러스의 입점은 사람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대형유통마트의 존재가 사람들의 공간 인식 지형을 바꿔 놓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더불어 홈플러스라는 대형유통마트의 입점은 동네 근린상가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Ⅲ. 각 공간의 특징과 시간에 따른 공간 구성 변화

1. 각 공간의 특징

이 장에서는 노송동의 여러 공간들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각 공간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후 시간지리학적 관점에서 시간에 따른 공간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송동 내 TB 지역 근린에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형성된 여러 공간들이 존재

한다. 이 중 특징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첫째, 노인주거지역과 근린상가, 둘째, 선미촌(집창촌) 일대, 셋째, 학교와 경로당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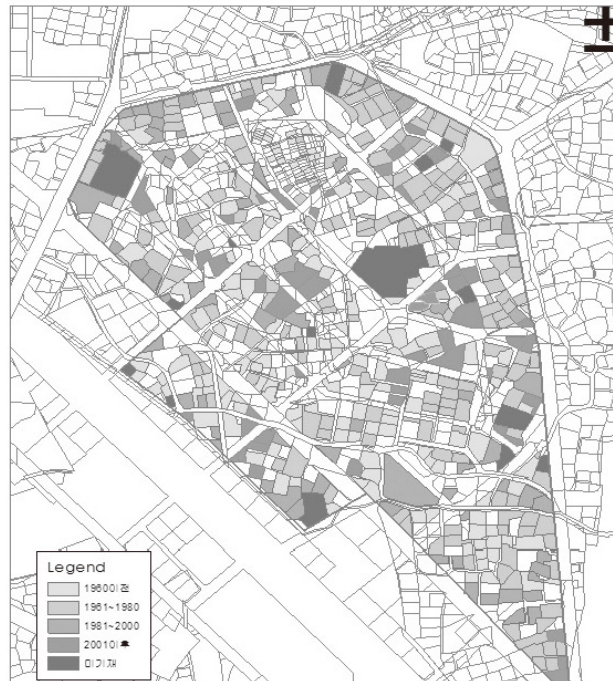
1) 노인주거지역과 근린상가

TB 지역 내 노인주거지역은 1950년대 판자촌으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저층 주거지와 경사지가 그대로 남아 골목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구도심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구 전주역과 현 시청 근처였던 점, 가까운 거리에 중앙시장과 모래내 시장이 있어 장을 보기 편리한 점, 인근에 많은 학교들이 있었던 점은 이 지역이 과거 전주 서민들의 주요한 삶의 터전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미촌의 존재는 삶의 터전으로 이 지역을 선택하지 않게끔 하는 주요 원인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전주의 외곽지역에 신도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송동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며 이는 노송동 인구의 연령대별 노령화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노송동의 노인주거지역은 노인 인구가 대다수를 이루는 지역으로서 낙후된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더불어 도시계획에 의해 공간이 구획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작은 골목과 계단들로 연결된 형태로 달동네와 같은 인상을 풍긴다. 작은 골목들은 소방도로와 소방도로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도로 개통으로 격자형 도로망이 형성되기 이전 이 지역이 촘촘하게 골목과 골목으로 연결된 미로와 같은 지형이었음을 가늠하게 해 준다.



〈그림 2〉 업종변경에도 바꾸지 않고 내버려 둔 간판



자료 : 국토해양부 외 2처.

〈그림 3〉 건축물 년도 현황

노인 인구가 절대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 지역에 근린상가가 발달하기는 쉽지 않다. 소비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고 저소비를 추구하는 노인 인구가 많은 점은 근린상권의 쇠퇴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주택가 내부에 있는 폐점한 상점들을 통해 확인된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예전에는 주택가 내부에도 근린상가가 꽤 있었다고 하나, 1998년 아중택지지구조성사업 이후 젊은 세대가 대거 빠져 나가면서 근린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가까운 인근에 큰 재래시장들이 있는 점, 2005년 대형유통마트가 들어선 점 등이 근린상권의 쇠퇴에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물론 현재도 노송동 TB 지역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물왕말이나 보문촌 일대에 어느 정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거대 재래시장과 홈플러스가 근처에 있기에 이들 상권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근린상권의 쇠퇴는 이 일대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가와 임대료의 하락 등에 영향을 끼쳤다. 이는 결국 지역 경제의 쇠퇴로 인한 정체 현상으로 귀결되었다.

위의 〈건축물 년도 현황〉을 보면, 노인주거지역 내 주택들의 대다수가 1960년에서 1980년 사이에 건축된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층 및 2층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주택을 제외한 대다수의 주택들이 노후화된 상태로 개량 및 재정비를 요하는 상태다.

노인주거지역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폐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주택가의 경관미를 해치는 주요인이다. 폐가는 탈선 청소년들의 집합터가 되기도 하며, 유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사회적 문제와 직결되므로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송동 거주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예전에는 주변 군단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세를 얻어 사는 경우가 많았다.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신혼부부에게도 나름 인기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지역에 세를 얻어 들어오는 신규 세입자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두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 첫째, 선미촌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이 지역으로의 이주를 꺼린다는 점이다. 둘째, 임대아파트나 원룸 등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의 낡은 주택들이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다는 점이다.

2) 선미촌(집창촌) 일대

홍성철(2007)은 일제시대 전주의 유곽과 권번이 해방 이후 미 주둔군을 위한 위안소로 잠시 변모했다가 한국전쟁 이후 성매매 여성들이 구 전주역 너머 서노송동 선미촌으로, 일부는 완산구 다가동 선화촌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한다. 선미촌은 속칭 ‘뚝너머’라 불렸는데, 당시 전주역 건너편에 뚝이 있었고 이 뚝 너머에 있다고 해서 서노송동 유리방을 ‘뚝너머’로 부른 듯하다. 구 전주역 뒤편에 있던 선미촌이 확대된 것은 1960년대 초쯤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기찻길 뒤편으로 여관이 늘어나고 막차를 놓친 사람들을 상대로 호객행위가 늘어나면서 번창했다고 한다.

시청이 옮겨 오기 이전 그리고 기린로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전주역사 앞에서 서노송동으로 넘어가는 길은 현 코아백화점에서 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 건널목과 조그만 다리를 건너 지금의 서노송동 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전주역에서 남노송동에서 내려오는 천변을 따라 올라가다 건널목을 건너 전주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그 사이는 전주역 건물과 전라선이 가로 막혀 있었고, 기찻길 너머로는 개천이 흐르고 있어서 두 지역은 서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전주역 뒤로 선미촌이 자리 잡게 된 까닭도 전주역과 기찻길을 경계로 이 지역이 시내 중심부와 차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김규남·이길재 2001).

언젠가부터 선미촌은 ‘뚝너머’가 아닌 ‘시청 뒤편’라 불리기 시작했다. 이는 전주역이 현 위치로 이전해 가고, 시청이 이전해 온 것과 관련된다. 주변에 시청이 이전해 오면서 시청과 관련된 명칭으로 바뀐 것이다. 번영기에는 80여개 업소에 달할 정도였으

나 현재는 40여개 업소만 남아 있으며,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성매매여성의 대부분은 선미촌 내 영업소에 거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인근 원룸이나 방을 얻어서 생활한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선미촌은 주변 지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간이었다. 선미촌이 번영할수록 지역 경제는 활성화되었고, 반대로 선미촌이 쇠락하면서 선미촌 주변의 근린 상가와 지역 경제가 함께 쇠퇴하였다. 선미촌이 번성하던 시기에 주변 미용실과 의상실은 아가씨들로 북적였고, 근처 슈퍼 및 잡화점의 수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상가들이 과거처럼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집창촌 집중 단속으로 선미촌은 급격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집창촌이 아닌 대체성매매 형태의 신종 매매촌 형태의 가게들이 생겨났는데 이는 선미촌과 부대 상권의 쇠락을 가속화시켰다. 이와 같이 선미촌은 그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9년에 전주시에서 선미촌을 폐쇄하고 그 자리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선미촌 처리 문제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선미촌을 폐쇄하려는 시 당국의 입장과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는 포주들 간 입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미촌 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 한 자녀를 둔 젊은 인구의 유입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불건전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지역이미지 개선이 어렵기에 도시재생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다.

3) 학교와 경로당

노송동에는 예전부터 많은 학교들이 위치해 있었다. 전주고등학교와 현 전주제일고등학교(예전 전주상업고등학교), 화제로 사라진 북중학교, 풍남초등학교, 동초등학교 등이 있었다. 전주의 도심이 확장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이전했지만, 조사지역인 노인주거지역에 한정하더라도 여전히 동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전주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1957년 풍남초등학교에서 분리 개교한 동초등학교는 한때 13개 반을 운영할 정도로 많은 학생 수를 자랑하였다. 이는 당시 이 지역의 세대수를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러나 신시가지 개발 등 전주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 현저히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현재는 한 학년 당 2개 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료 : 국토해양부 외 2처.

〈그림 4〉 조사지역 내 학교들

젊은 세대 수의 영향을 덜 받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비교적 학생 수가 많은 편이다. 2002년 인후중학교로 개교한 신일중학교와 전주의 명문 고등학교인 전주 고등학교에는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

학생 수의 감소와 학군의 쇠퇴는 학교 근처의 경관에 영향을 미쳤다. 예전 학교 근처 문구점, 오락실, 학원 등 관련 상권이 발달하고 학생들로 북적북적대던 모습은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현재는 각 학교 근처에 1~2개의 문구점만 남아 있는 상태고, 학원은 대규모 학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아중리 학원 상권에 밀려 이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예전에는 이 지역에 학생들의 하숙과 자취 수요가 많았다고 한다. 이는 지역 가구의 주요 소득원으로 작용했으며, 현재도 일부 하숙집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는 원룸과 고시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또한 전주고등학교에 큰 규모의 기숙사가 들어선 것도 하숙 및 자취를 내 주는 가구의 소득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많은 학교들이 위치해 있어 많은 학생들로 북적거리던 당시 근린 상가도 활성화되고 가구에 실질적 소득을 가져다주던 상황은 이제 옛 일이 되었다.

오로지 노인들을 위한 공간인 경로당은 조사 지역에서 낮 시간대 가장 활성화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화투 놀이, 장기·바둑 두기, 담소 나누기, 함께 식사하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노년 인구들의 여가 시간 활용 공간이다.

조사 지역에는 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각각은 수영 경로당, 삼원 경로당, 송월 경로당이다. 삼원 경로당은 여성 전용, 수영 경로당은 남성 전용, 송월 경로당은 남녀 공용이다. 물론, 남녀 공용이라 해도 여성의 이용비율이 훨씬 높고,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구분되어 있다. 조사 결과, 경로당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없었으며, 대부분 TV

를 보거나 장거나 바둑 두기, 화투 놀이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인구가 노년 인구임을 감안할 때,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자료 : 국토해양부 외 2처.

〈그림 5〉 TB 지역 내 경로당 분포도: H는 수영 경로당(남성전용),
I는 삼원 경로당(여성전용), J는 송월 경로당(남녀공용)

2. 시간에 따른 공간구성

도시 공간은 시간에 따라 경관과 활동 주체들의 이동 경로가 변화한다. 조사지역인 노송동 TB 지역은 비교적 단순한 시간지리학적 층위를 구성하고 있는 곳으로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 활성화되는 공간과 활동 주체들이 확연히 구분되는 곳이다. 이는 남북로를 경계로 선미촌과 노인주거지역이 구분되므로 쉽게 예측 가능하다.

중소도시의 구도심답게 비교적 단순한 시간지리학적 층위를 구성하고 있지만 조사지역의 시간에 따른 공간 구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이 지역의 공간 분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장에서는 시간대별·요일별 경관변화와 주요 활동주체들의 성격을 밝힘으로써 각 공간의 특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먼저 시간대에 따른 공간구성을 살펴보자. 전술하였듯이 조사지역은 밤과 낮의 공간이 확연히 구분된다. 낮에 활성화되는 공간은 노인주거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경로당이 가장 활성화된다. 노인들의 모임장소이자 쉼터인 경로당은 해가 뜨고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 이후에 하나 둘씩 모여드는 노인들로 채워진다. 이후 해가 질 무렵 그

들은 하나 둘씩 귀가한다. 밤의 경로당은 낮과 달리 쓸쓸한 공간이 된다.

남북로를 경계로 노인주거지역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선미촌 일대는 해가 지는 시간대에 이르러서야 하나 둘씩 불이 켜진다. 이때부터 이 공간은 성매매 여성들이 유리방 안에서 한껏 치장을 하느라 분주해진다. 동시에 선미촌 성매매 여성들을 주요 고객으로 장사를 하는 미용실, 네일아트샵, 의상실 등은 한가해진다. 이 가게들은 선미촌이 활성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선미촌의 야간 활동인구에 그 일대를 내준다.

이처럼 선미촌은 밤과 낮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공간이다. 해 질 무렵부터 해 뜰 무렵까지 이 일대는 성매매 여성과 성을 소비하려는 남성들로 채워진다. 해가 뜰 무렵에는 이 인구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청소나 빨래 일을 하는 동네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이 대체한다. 출근 시간 이후부터 퇴근 시간대에 이르기까지 선미촌 일대는 주차장으로 변모한다.

이처럼 조사지역은 남북로를 경계로 노인주거지역과 선미촌 일대가 시간대별로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활성화되는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고, 활동주체들도 성격을 달리하는 등 시간지리학적 층위에 따라 공간 분할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3〉 낮과 밤의 활동주체와 활성화 공간

시간	낮	밤
활성화 공간	노인주거지역 (경로당, 학교, 선술집 등)	선미촌 일대 (성매매 업소, ATM 기계가 설치된 편의점 등)
활동주체	경로당 : 노인 학교 : 학생 선술집 : 4·50대 남성	성매매 여성, 성 소비 남성



자료 : 노컷뉴스 2011년 8월 22일.

〈그림 6〉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밤의 선미촌



〈그림 7〉 주차장 같은 낮의 선미촌

시간대별 공간 분화와 함께 요일에 따라 특정 종교인들이 조사지역 내 혹은 근처에 들어오기도 한다. 이 일대에 3개의 거대 교회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 각각은 노송교회, 동부교회, 미담교회(구 시온성교회)이다. 많은 성도 수를 자랑하는 이 교회들로 인해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리고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지역 활동 인구가 증가한다. 교회의 예배시간과 맞물려 활동 인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회에 오는 인구들이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들은 교회에서 예배나 교회 활동을 할뿐 이 일대에서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 교인들이 이 일대에서 찾는 곳은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뿐이다. 이는 기독교적 윤리관과 부합되지 않는 선미촌이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이 일대의 유동 인구만 증가할 뿐 교인들의 지역 유입이 이 일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IV. 나오며

지금까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 지역인 전주시 노송동의 공간 구성과 공간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와 같이, 무분별한 재개발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의 공간 구성과 공간적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결국 제대로 된 도시재생을 위해서이다. 한 지역의 공간성과 지역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생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전술하였듯이 전주시 도시재생 TB 지역은 거대한 도시계획에 따라 구획된 공간이 아니라, 시대적 충위를 형성하며 조금씩 조금씩 덧대어가며 지어져 있는 여러 가옥들이 하나의 군을 이루며 나름의 역사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그 안에는 이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터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으며, 결국 이들이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도 이 공간에서 일상을 영위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적 특성의 고려와 함께 지역민의 요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때, 그래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때 도시재생의 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실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청회를 개최해 일부 말하기 좋아하거나 말할 수 있는 위치

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공식적·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실제로 듣고 잘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점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놀라운 점은 그들이 요구가 정말 단순한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많은 답변이 노년 인구가 많은 지역에 변변한 목욕탕 하나 없으니 목욕탕 하나 지어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도시재생 관련 기관에서 제시하는 장밋빛 청사진보다, 사소하지만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지역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의 대부분의 인구가 노년 인구임을 감안할 때 노인들을 위한 시설 건설과 더불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

결국 사람이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바꾸는 것이 관건이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노력과 더불어 지역민들의 공동체성을 회복·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다. ‘천사축제’와 같은 지역의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 축제가 그 일례인데, 중요한 점은 지역민들이 그 축제의 취지와 내용에 수궁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도시 공동체성의 회복·강화는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귀결될 것이며, 살기 좋은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회복에도 일조할 것이다. 자연스레 젊은 세대와 조용한 동네를 선호하는 중산층의 입주도 증가할 것이다. 이는 노송동 TB 지역 내 주민들의 계층과 연령 구성의 다양성을 가져오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토해양부 · 도시재생사업단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2011), 『전주 테스트베드 기법적용 연구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 김현숙(2004) “지도로 통해 본 전주의 근현대 공간구조 변화”,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신아출판사.
- 김규남 · 이길재(2001), 『지명으로 보는 전주 100년』, 신아출판사.
- 도시재생사업단(2012),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 : 세계의 역사 · 문화 도시재생 사례』, 도서출판 한울.
- 변은주(2012),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도시조직과 도시근린에 관한 분석: 제인 제이콥스가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논문.
-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 앤디 메리필드, 남청수 · 김성희 · 최남도 옮김(2005), 『매혹의 도시, 맑스주의를 만나다』, 도서출판 시울.
- 이푸 투안, 구동희 · 심승희 옮김(2011),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 제임스 C. 스콧, 전상인 옮김(2010), 『국가처럼 보기(Seeing Like a State)』, 에코리브르.
- 홍성택 외(2009), 『국역 전주부사』, 전주시.
- 홍성철(2007),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 Jane Jacobs(1992),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Vintage Books.
- <http://jeonju.kourc.or.kr>

지역문화콘텐츠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에 관한 사례연구 - 창작판소리 ‘왜망실던’을 중심으로 -

김현갑*

- I. 서론
- II. 문화콘텐츠 형성의 마을공동체적 기반
- III.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문화콘텐츠의 개발
- IV. 문화콘텐츠의 성과와 마을공동체의 변화
- V. 결론

I. 서론

최근 도시 지역에서도 주민들 스스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협동을 강화하여 지역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움직임에 지자체가 해체된 지역공동체의 회복, 침체된 경제의 회복, 도시재생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마을공동체나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체를 통한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인천시도 지난 7월 「인천시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면서 마을공동체 확산과 마을만들기에 강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전주시도 마을만들기를 중요한

* 인후문화의집 관장

정책으로 채택하여 도시 내의 공동체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심으로 공동체를 꾸려갈 때 삶의 질이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마을만들기나 공동체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공동체만들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동체만들기나 마을만들기의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구 65만명의 중도시인 전주시의 왜망실(倭亡室) 마을(이하 왜망실)을 대상으로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동체의 회복 노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마을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인 창작판소리 '왜망실뉘'가 마을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현대적 상황에서의 문화자원을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 과정과 의미를 고찰해보자 한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사람 육성과 마을공동체 지원정책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천시도 도시근교 농어촌마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옹진군과 강화군의 농어촌지역도 포괄하고 있어 전주시의 근교농촌 공동체 회복과정 연구는 인천시의 마을공동체 운동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왜망실은 행정구역상 전주시이지만 도시변두리에 있어 농촌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마을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동체회복 운동이 나타났다. 이 때 활용된 문화콘텐츠는 왜망실의 이야기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창작판소리이다. 공동체가 점차 와해되었다가 과거의 이야기를 함께 재현하는 방식으로 문화활동을 강화하여 공동체를 회복하고 부활하는 과정은 도시화 속에서 약화되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문화콘텐츠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데 좋은 사례가 된다.

왜망실을 소재로 한 창작판소리 '왜망실뉘'의 제작과정과 마을잔치에서 주민들은 공동체 삶의 근간인 공동체적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마다 마을잔치를 여는데 합의하였다. 민주주의 원칙과 회가 거듭할수록 갈등은 봉합되었고 새로운 성격의 공동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신들의 마을을 배경으로 한 창작판소리가 발표되었고 마을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부활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마을 구성원으로서 무엇 때문에 갈등하였고 어떻게 화합하면서 살아가는지, 또 그들의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회복되었는지 보여줄 것이다.

공동체와 관련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있었고 2000년 이후 공동체를 근간으로 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촌 공간의 공동체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과거와 현재의 촌락공동체, 새마을운동 과정과 이후의 마을공동체, 민속을 통한 공동체, 귀농을 통한 공동체 재생과 관련한 연구들이 있다.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연구는 2000년 이후 정보산업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증가하였다. 하지만 문화콘텐츠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연구는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콘텐츠는 합성어로 콘텐츠의 사전적 의미는 ‘내용물’인데 풀이하면 어떤 형식에 내용물이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즉, 문화콘텐츠는 문화적 내용물 또는 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이라 할 수 있다(이송이, 2011). 문화콘텐츠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창작판소리는 대면(실연) 문화콘텐츠로 분류된다. 제한된 시간 안에 직접적인 교감을 이루는 형태의 연극, 뮤지컬, 창극, 공연예술, 이벤트 등의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이 마을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문화콘텐츠를 매개로 한 공동체회복 과정이 이루어졌다.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학계 연구는 인류학, 사회학, 민속학, 사학, 농업경제학, 지리학, 도시학 등이고 문화콘텐츠를 토대로 한 공동체 연구는 사회학, 문화콘텐츠학, 언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학문 분야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 안에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연대감과 애착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공동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라는 생활양식은 생활풍습을 비롯한 전통, 문화체계 등 지역과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김광익(1998)은 공동체란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며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동일한 역사적 과정을 겪었다고 믿고 앞으로도 공동운명체일 것임을 예상하게 하는 소위 역사적 공동체 인식과 나아가서 감정, 생활양식, 가치관, 윤리, 풍속, 관습, 미적 감각 등에 있어서도 동질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문화적 공동체 인식이 바탕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공동체란 현실이라기보다는 구성원들이 그렇다고 믿거나 당위적인 것으로 상상하는 것으로서 상상의 경험이며(Cohen, 1987; 김광익, 1998) 상징의 구성을 통하여 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종수(2008)는 공동체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주민의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관계망으로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사이에 심리적 유대감과 사회정치적 호혜관계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하였다. 채혜원·홍형욱(2002)은 공동체는 물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공동체라고 생각한 그 지역과 관련된 정체성을 가지는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정빛나(2010)는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개인과 이웃의 삶, 사회에 대한 발언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문제점과 공동의 관심사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은희(2008)는 성미산 공동체를 사례로 들며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극장, 공동체라디오, 마을만들기 등 대안적 자조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반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커뮤니케이션은 왜곡과 억압에 존재하지 않으며 학습적 효과가 높고 비공식적 부문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개방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성찰적으로 표현하였다. 임세정(2011)은 콘텐츠 활용 모델을 용인시 갈월마을의 농촌자원 활용 과정에 적용시켰다. 농촌의 문화경제적 가치가 크게 신장하면서 농촌에 산재한 정미소, 체험학습장, 농가레스토랑, 돌담길 등 고유의 농촌 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보호, 활용하려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원주민도 중요하지만 외부인과 협력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유대감과 관계망(이종수, 2008)을 공동체로 보고 한 도시 근교마을에서 이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와해되었으며 어떻게 기억되고 있었는지, 주민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관심이 어떠한 문화콘텐츠와 활동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외부의 문화활동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이전의 공동체와 그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해보겠다.

본 논문과 관련된 주요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마을의 역사적인 설명은 기존 문헌들을 통해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마을에 대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자료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현지조사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현장조사, 참여관찰,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심층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왜망실에 40년 이상 거주하였고 마을의 공식적인 직책을 맡았거나 의례와 세시 등 마을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60세 이상의 원주민 10명을 선정하여 반복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마을 유래, 설화, 공동상징, 공동재산, 공동활동, 놀이, 마을조직, 갈등 및 화합과 관련하여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관련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채록과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모든 심층면담은 주민들이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동의를 얻어 모두 녹취하였다.

II. 문화콘텐츠 형성의 마을공동체적 기반

1. 마을공동체의 와해

왜망실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 아중저수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상류 방향 동쪽의 골짜기에 소재하는 마을이다. 왜망실에는 재전(在田), 용계(龍溪), 아하(牙下), 아중(牙中) 등 4개의 부락이 있으며 가구는 96세대, 인구는 277명이 거주¹⁾하고 있다. 원주민과 이주민으로 나누어 보면 원주민 70세대 196명, 이주민 26세대 81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원주민들은 대부분 7,80대 고령의 노인들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많으며 이주민들은 5,60대의 부부가 대부분이다. 원주민들은 경제활동으로 벼농사와 밭농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철쭉, 화살나무와 같은 관리가 편한 화훼재배를 하고 있어 그에 따른 소득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주민들은 대부분 자녀 양육이 끝난 이들이 많으며 시내로 나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건설업, 도장업(塗裝業), 요식업, 중장비업, 미용업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야와 전답을 소유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이주민들은 저렴할 때 매입한 임야를 소유하여 새로 이주해 들어오려는 도시민들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망실은 본래 골짜기 안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재전, 용계, 아하, 아중이라는 순서로 네 개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졌다. 왜망실은 정유재란 때 왜구들이 마근대미재에 세워놓은 허수아비를 보고 그 옆 골짜기를 넘어 오다가 매복한 우리 병사에 의해 모두 죽었다 하여 부르게 되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왜막실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는데 진묵대사의 유적고(遺蹟攷)에 정유재란 때 패잔한 왜구들이 이 마을의 깊은 골짜기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 하여 왜막촌(倭幕村), 왜막곡(倭幕谷)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왜막실이라는 지명을 꺼려해 지명을 변경하려고 전주시에 건의하였고 전주시는 지명위원회를 통해 왜망실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왜망실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졌던 비육우 사업과 과실 재배, 양잠 사업 등으로 한국전쟁 이후에 비해 비교적 경제적인 안정을 찾게 되었다. 경제적인 안정을 찾았다고는 하지만 보통교육조차 받기 힘들 정도였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이 지속되었다. 도시와 문화적 차이가 분명했고

1) 2010년 현재, 우아2동 주민센터 인구통계자료.

지금도 문맹자가 있을 정도로 문화적 소양을 쌓고 살아가기에는 척박한 마을이었다. 지리적 조건에서 도시로부터 여전히 소외를 받았으며 주민들끼리 경로당에 모여 장구를 치거나 가끔 옷놀이를 하는 정도가 문화 향유의 전부였고 의식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부족했다. 여유도 없었지만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려는 노력 역시 부족했다.

당시 정부와 행정기관에서는 잘사는 마을을 만들려는 구실아래 읍·면·동에 새마을 지도자회, 새마을 부녀회, 청년회, 4-H 등을 조직하면서 마을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왜망실 역시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들을 진정한 마을리더로 생각하여 펼친 정책은 부재하였고 행정기관은 이들을 일관되게 부차적인 문제로 삼으며 정책을 펼쳤고 주민들을 관제동원을 위한 방편으로 삼았기에 주민들과 항상 갈등이 야기되었다. 결국 주민들의 인식에는 행정기관의 지나친 개입으로 새마을 운동이라는 탈을 쓴 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

수해가 나도 피해 조사는 통장의 몫이었다. 교통과 통신수단이 열악했던 시대, 동사무소에서는 통장들을 죄다 불러다 모아 지시를 했다. 가장 곤혹스런 일 중의 하나는 관이 주관하는 대중 집회에 참석자들을 모으는 일이었다.

“말하자면 데모지 뭐. 그거 사람 몇 십 명만 여그서 뭐 모이라 하든 그거 내가 선발해 줘야 혀. 빠진거 어디, 어디…….”

“아, 안나오냐고 하면 안 나온다고 한게 어쩔 수 없이 그냥 갔다 오는 거지. 그러나 그때는 호랭이 잡아먹던 시절이 뭐였는 고는, 그것이 뭐 선거 한 번 하든은 뭇을 갖고 땀기면서 안 찍었다고 하던 땀디, 무슨, 뭐.”

(송○○, 남, 79세)

이 외진 곳의 마을 주민들이 정치나 집회에 큰 관심을 돌리는 만무했다.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 대중 집회나 썰기대회라니, 마을 주민들에게는 언감생심이었다. 그러나 선거 때도 선거인명부를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투표여부를 확인할 정도로 통제와 감시가 심했던 시절이라 마을 사람들이 싫다고 해서 마냥 그렇다고 할 수도 없었다. 이처럼 주민들의 생활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행사와 대회에 행정이 개입하면서 공동체가 약화되는 길을 걷게 되었다. 조직화된 단체들의 공동체는 강화 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주민들의 생활과 거리가 먼 대회나 행사에 동원되고 행정기관의 지시적인 태도가 늘면서 결국 주민들의 내부적인 원성이 높아지면서 자율성이 훼손되어 공동체가 와해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도시민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숙식만 할 뿐 마을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려는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주민이 증가하였다. 이들은 주간에 경제활동을 하고 야간에는 휴식을 취하는 전형적인 도시민의 삶의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의 분주하고 피폐한 삶의 해방구를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전원의 삶을 살고자 이주하였기에 담을 세우고 문을 닫고 살며 심지어 무인경비 시스템까지 갖추고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곳으로 이사 온 젊은 사람들은 다 시내로 나가서 돈을 벌어요. 여기 노인들 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지요. 아침새벽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해 떨어지면 들어와 쉬느라 마을 일에는 관심도 없어요. 시내로 출퇴근하는 게 반복되고 주말에는 누가 일 할라고 해요? 다들 쉴라고 하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인들 하고는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니까 거리감이 생기게 마련이죠.”

(정○○, 남, 80세)

이주민들은 마을의 공식적인 조직부터 비공식적인 조직까지 참여가 저조한 상황을 봤을 때 표면적인 이유는 이주민들이 외부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 부족, 마을 공동체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왜망실의 마을 공동체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공동체 회복에 대한 주민욕구와 문화활동가 결합

인후문화의집 문화활동가들의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주민들은 무관심했다. 문화활동가들은 노인회장을 만나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설득을 하였고 마침내 노인회장은 주민들을 마을회관에 모아놓고 다들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7~8월은 농사가 한창일 시기이기에 생계와 직결된 농사일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노인들은 마을과 관련한 모든 기억과 경험을 구술하여 도왔고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 사항은 노인들을 마을회관에 불러놓고 대담형식의 구술이 진행되었다. 이외에 왜망실과 관련한 문헌을 소개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 사진자료 등을 제보하면서 노인회의 마을에 대한 애착과 노력으로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인후문화의집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활동가들은 주민들이 이웃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문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계획하면서 왜망실의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구술 조사하여 창작판소리로 만드는 사업²⁾을 진행하였다. 이는 사라져가는 마을문화를 기록하여 판소리로 만드는 사업으로서 창작판소리 발표 이후 주민들과 함께 마을잔치를 여는 것이 목적이었다. 왜망실은 평소 왜막실이라는 지명으로 혼용되면서 사람들이 혼동을 느끼거나 불편이 초래되었다. 지명에 관한 유래에 임진왜란 이후 왜놈들이 막사를 짓고 살았다하여 왜막실로 불리워졌는데 이는 진묵대사의 유적고에 잘 나타나 있다.

활동가들이 두 달 동안 왜망실 주민들을 만나 마을사와 생애사를 조사했고 조사된 자료는 구술록으로 정리하였다. 구술록을 바탕으로 사설을 쓰고 소리꾼 이용순이 작창과 소리를 하였으며 조사된 자료와 창작판소리 사설은 자료집 형식의 책자로 발간되었다.

“에이 그 구절털털한 인생, 뿔허게 판소리로 맨들라고 혀, 우리가 외롭게 사는디 그런거 뿔허려 판소리로 맨든다고 혀, 차라리 마이클잭슨을 맨들어, 마이클잭슨은 얼마나 맹랑한 사람이여, 참말로 이 세상 신나게 놀고 활발히 살다 갔응게. (중략) 그럼 좋아, 잘 맨들어야혀. 이왕지사 맨드는 거, 아무렇게나 맨들지 말고 지대로 맨들어, 알았지.” (김○○, 남, 76)

구술조사 초기에는 노인들의 해묵은 이야기를 어디에 쓰려고 책과 판소리를 만들려고 하냐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중반에 접어들자 구술자들이 살아온 이야기와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경험에 대해 친근감을 표시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얻었고 노인회의 도움과 라포형성으로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로 바뀌게 되었다.

2) 창작판소리 ‘왜망실년’은 지난 2008년 전주 최명희 문학관에서 전북대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가 개최한 생애사 토크쇼 ‘넋두리 신세타령’과 구술생애사를 활용한 ‘창작판소리 시연회’를 벤치마킹하여 왜망실에 접목, 판소리 창작을 시도하였다. 김계 광활면을 비롯한 전북도내 어르신들의 생애사를 토대로 한 창작판소리 사업을 이끈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함한희 교수의 자문을 받아 창작판소리 ‘왜망실년’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창작판소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세는 왜망실에서 1950~60년대 행해진 마당극 형식의 「며느리 설움」³⁾ 때문으로 추정된다. 농경사회를 살아온 원주민들의 농경문화와 관련된 향수의 기억이 재생되면서 나타나는 문화적 경험의 연결 고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당 넓은 집에서 행해진 연극이라는 놀이문화의 발달로 촌락공동체가 더불어 발전했으며 이렇게 한 바탕 노는 것 자체가 놀이이자 마을문화였던 것이다.

TV나 여타의 여흥거리가 없는 환경에서 명절 때 마을을 찾아오는 친척과 이웃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가 담긴 끼리를 찾던 중 당시 유행하던 신파극을 모방한 마을 연극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것의 시작은 마을을 떠났다가 다시 귀향한 지식인 주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장경훈이 제안을 헌것이어. 그 양반이 여그서 살다가 공부헌다고 서울로 갔다가 어른들이 여기 있음게 들어온거지. 여그서 시내로 직장을 땡겼어. 근디 이 동네가 보다시피 뭐가 있었간디. 그 사람은 배운 사람이었고 보고 들은 것이 많은게. 명절날 사람들이 오면 한달씩도 있다가고 그랬거든. 근게 머 시라도 허자고 글더라고.” (정○○, 남, 76)

당시 주민 몇 명이 모여서 장경훈이 각색한 「며느리 설움」대본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대본은 선택한 이유는 당시 고부간의 갈등이 많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여성 역할을 남성들이 여성 분장을 하고 공연한 어려움과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처럼 왜망실에서 유독 마당극 형식의 극을 시도하고 또한 그것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왜망실의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은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었다.

첫째, 마을의 사회적, 지리적 환경이다. 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제비형국의 지형으로서 산세가 험해서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도시와 떨어져 있어 이웃과 매일 같이 얼굴을 보고 함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외부의 문화 보급이 충분하지 못해

3) 「며느리 설움」은 대중연극을 마을주민들이 각색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연극이다. 본 연극에 배우로 참여했던 주민 정○○는 신파극으로 표현하였지만 장르의 구분이 모호하고 무대 없이 마당이 넓은 집에서 주민들끼리 행해진 극(劇)으로서 마당극 형식으로 표현한다.

그 영향을 덜 받았다.

둘째, 마을 구성원들의 특질이다. 지리적 환경에 기인한 이들은 매일같이 이웃과 가족같이 지냈기 때문에 놀기도 잘 놀고 쾌활한 사람들이 많았다. 타지에 살다가 귀향한 지식인에게 마을사람들은 인심을 베풀고 마을사람들과 놀이문화를 함께하면서 일체감이 형성 되었다.

셋째, 왜망실만의 문화적 특성이다. 독립적 지형과 문화적 기질이 있었던 마을사람들의 성향, 그리고 지식인의 영향으로 인해 당시 유행하던 신파극을 모방한 마당극 형식의 「며느리 설움」을 마을공동체의 여흥거리로 채택하게 되었고 또한 마을공동체에 안착할 수 있었다. 물론 TV나 기타 여흥거리가 없었던 시대 상황이나 지리적 고립성으로 영화나 공연 등 외지의 문화를 향유 할 수 없었던 외부적 요인도 있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마을 구성원들의 특질과 고유한 상황이 보다 더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이유라 하겠다.

이러한 놀이문화라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창작판소리 왜망실편을 만들기 위한 현지조사에서 주민들의 반응이 자연스럽고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도시화로 인해 소외받는 지역이 되면서 외부의 자극이긴 하지만 원주민들의 기억과 사라졌던 마을잔치라는 놀이 문화가 재생되면서 공동체가 더욱 굳건해 졌다.

이렇게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힘들었던 이야기, 뿌듯하고 즐거웠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마을공동체가 번성했던 과거의 기억과 추억을 떠올리게 되었다. 노인들끼리 마을공동체가 번성했던 과거의 장면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마을공동체가 약화된 배경에 대해서도 회자되었고 문화활동가들이 구술조사를 하는 이유를 서서히 깨달으면서 판소리 ‘왜망실편’이 언제쯤 완성되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노인네들 이야기가 판소리로 만들어지는게 뭐 소린지 몰랐지, 뜨거운 여름 날 젊은이들이 할 일 없이 온 것은 아닐테고, 뭐 판소리 맨든다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혀 줬지.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사정은 몰라도 젊은이들 애 쓴게 이런저런 얘기 다 해줬다고 글터라고. 이 마을 얘거나 내 얘기가 판소리로 맨든다는디, 안 해줄 것도 없지 뭐, 그러고 그냥 판소리만 맨드는 것이 아니고 잔치를 열어준다고 했어. 노인네들은 그런거 좋아하잖여, 그러서 기분 좋게 응해줬지 뭐.” (최○○, 남, 70세)

힘든 농경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면 모두가 힘들었지만 당시의 삶이 그림기는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고 하였다. 왜망실은 여전히 농경문화를 간직하고 있지만 사회 발달로 인해 과거와는 분명 다른 농경문화로 변화 하였다. 연구자에게 더욱 자세한 구술을 위해 기억을 가다듬으면서 더 많은 추억을 떠올리려고 노력했고 창작판소리에 대해 어떻게 만들어지며 언제쯤 완성되는지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마을공동체가 지속되어 마을의 공동사업이 잘 이루어졌던 과거를 회상하는 정서적 반응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마을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Ⅲ.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문화콘텐츠의 개발

1. 지역문화자원 조사와 분석

왜망실은 해방 이전까지 250여 가구가 살던 곳이었지만 살기 힘든 지리적 조건때문에 외부로 이사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주민들이 유입하면서 100가구 정도의 작은 마을이다. 구한말부터 행정구역 구분이 시작되어 1914년 전주군 용진면 아중리, 재전리, 용계리, 아하리로 구분되었던 것이 1935년 완주군 용진면 아중리로 통폐합되었고 1957년 전주시 우아동 1가로 편입되었다. 1989년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구청이 신설되어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로 편입되었다.

왜망실은 아중저수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원수네미에서 재전마을에 이르는 지역으로 과거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제비형국의 지형으로서 산세가 험했기 때문이다. 북쪽으로 소양면, 남쪽으로는 관촌면으로 임야가 대부분인 완주군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골짜기에 위치하여 외부와 불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시내 사람들이 들어와 집 짓고 살 정도로 자연환경이 뛰어나 공기 좋고 조용하여 전원생활의 최적지가 되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졌다.

김해 김씨 족보에서 발견한 왜망실의 본래 지명은 봉광리(鳳廣理)이고 정태식의 집 앞에는 용계부락의 당산나무인 느티나무가 있었다. 골짜기 마을이라 난을 피하기 적합했으며 이러한 난을 겪지 않은 탓인지 텃세가 없고 이웃끼리 따뜻하게 지냈다. 또한 가까운 친족과 양씨의 씨족이 모여 살기도 했고 공기와 토지가 좋아 김칫거리를 시내에

다 내다 팔기도 했고 농한기에는 나무를 해서 시내에 내다 팔았다.

아하부락에는 디딜방아가 있었는데 여성들이 김현철에게 소고를 쳐보라고 하면 기꺼이 쳤고 명절은 물론이고 모내기나 술땀이 굶을 칠 때면 사흘에서 닷새까지 즐기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풍물은 마을의 모정을 건립할 때 최적의 모금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길을 넓히기 위해 초가집 지붕의 처마를 쳐내야 했으나 새마을 운동으로 어지럽혀진 민심을 비육우 사업으로 달래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를 안겨다 주었다. 이렇듯 개개인들의 삶이 모여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자원이 산재한 왜망실에서 왜 창작판소리가 공동체 회복의 정서적 토대가 되었는지 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때는 머느리 설움 그거 따라했어, 궁게 그것을 고쳐서 대본을 썼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말여. 우리네 인생사가 들어 간 것이지. 슬프긴 허도 재밌드만. 노래는 민요풍으로 했어. 뽕짝 이런저 보담 민요풍으로 험게 아무려도 깊이 있게 들리드만.” (정○○, 남, 76)

신파극을 모방했던 당시의 왜망실 마당극 형식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글이고, 둘째는 음악이다. 첫째, 글은 대본을 말하는데 대본을 각색하면서 그 자신들의 인생이 반영되고 그러한 자신만의 이야기가 반영되는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했을 것이며 그것이 마을 구성원들의 공통의 추억으로 구전되어 정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음악적 특성을 보면 민요풍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행 하던 트로트나 창가의 특색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트로트와 5~60년대의 트로트의 음악적 특색이 똑같다고 볼 수 없는데 그것은 그 이전시기에 유행해 왔던 창가풍의 음악적 성향의 반영도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마을 연극에 녹아있던 음악적 요소는 보다 고풍스러운 형태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것은 민요와 같은 토속적인 특성으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 노래는 말여, 이런 식이었지. 한마디로 민요풍이여, 뽕짝도 있긴 헌디 우리 부르는 민요나 창 있잖여? 그것에 가까웠지. 일 허다가도 부르고 말여.” (정○○, 남, 76)

이와 같이 왜망실의 마당극 형식의 「며느리 설움」에 담겨 있는 글과 음악의 특성은 현대에 와서 창작판소리라는 문화콘텐츠를 접하게 되었다. 창작판소리 역시 글과 음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글이라는 것은 창작 판소리의 가사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정해진 가사가 아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창작 가사였다. 마을 구성원들 자신의 이야기가 반영되었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재미는 과거 마을 연극의 대본을 각색했던 공통의 추억과 정서를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작 판소리의 음악적 특징 역시 전통적 요소를 가짐으로써 과거 마당극 형식이 민요풍의 음악적 특성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판소리의 음악적 특질은 첫째, 전통적이고 우리 것이라는 친숙함의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둘째, 해학성을 통해서 가볍고 즐겁게 표현을 하며 셋째, 성음의 애원성을 가지고 있어서 도시 속 농촌 마을에 사는 이들의 인생과 노고를 반영하여 위로하는 장점을 가졌다. 따라서 창작 판소리를 제작하는 과정은 마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당극 형식의 「며느리 설움」에 대한 공통의 추억과 정서에 연계되었고, 마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서와 성향은 창작 판소리를 성공적으로 제작하고 그것이 마을 구성원들의 것으로 정주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2. 창작판소리 ‘왜망실면’ 제작과정

그러면 이러한 마을 구성원들의 미적 토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창작판소리의 제작과정을 살펴보겠다. 2009년 7, 8월 두 달 간의 조사에서 활동가들이 마을과 접하면서 마당극 형식의 「며느리 설움」과 같은 콘텐츠 제작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면서 문화적 토양에 주목하고 왜망실의 문화적 콘텐츠 발굴과 제작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창작판소리를 착안하게 되었고 활동가들은 마을사람들에게 의향을 타진하여 구술을 받는 작업을 했다. 한편으로는 판소리 창작 작업을 함께할 판소리 하는 젊은 소리꾼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시집을 와서 본게 저 산 꼭대기애다가 풀을 뜯어 갖고 넣어 놓으면 말리, 말르
 문 그 놈을 태워, 태워갖고 거기다 지(김치)꺼리 씨를 던지문 그렇게 이쁘고 맛
 있고 깨끗해. 아주, 그래갖고 지꼈이를 여그서 저 산꼭대기 애기 업고 가서 그
 냥 뽑아서 다듬어서 이렇게 묶어서 내려와, 식구들 밥 해놓고 이고지고 막 가
 는거여, 시내로, 그래갖고 낮에 내다 팔고 또 걸어서 와갖고 또 가, 여그 칠팔십

먹은 사람들은 다 그랬어.” (생애사 구술록 중에서, 정○○, 여, 72)

한 달 간의 사설 작업을 준비한 창작판소리는 2009년 10월 16일 왜망실 용계부락 모정 앞마당에서 ‘왜망실로 떠나는 가을소풍’이라는 마을 축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창작판소리 ‘왜망실뎐’이 발표되었다.

저어기 저 산날망에 푸른기운 그득한데,
 땔나무 쓸어갔나 나무들은 가히 없고,
 푸릇푸릇 배추열무 오종종종 커있겠다.
 이것들이 어여쁘고 깨끗하고 맛난다는 왜망실 지켜리라.
 (창작판소리 왜망실뎐 중에서)

위와 같이 구술내용이 창작판소리의 가사로 자리잡아가게 되었다. 이 밖에도 구술자들이 무대에 나와 당시 구술했던 내용을 다시 주민들 앞에서 토크쇼 형식의 이야기 마당을 펼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내용 전달과 상상이 아닌 과거를 현실적으로 회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김현철의 소고 개인놀이와 짚풀공예 전시를 펼쳐 당시의 왜망실 민속을 재현하여 농경문화의 모습을 주민뿐 만 아니라 왜망실을 찾는 외부인들에게도 알릴 수 있고 마을공동체가 재생될 수 있는 좋은 기제로 작용하였다.

프로그램은 먼저 두 명의 주민이 무대에 나와 마을사와 생애사 조사 당시 구술했던 내용을 그대로 주민들에게 말하는 형식의 토크쇼가 먼저 열렸다. 송태형은 마을 이름이 왜망실이라고 불러져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김해 김씨 족보에서 본 봉광리라는 지명에 얽힌 이야기, 35년간 통장 일을 하면서 겪었던 보람과 아쉬움, 일출암과 새마을 사업 당시의 이야기로 당시의 생생했던 역사적 상황을 풀어냈다. 김현철은 연로하여 불편한 몸이었지만 왜망실의 유일한 풍물패 생존자로서 활동했던 당시의 이야기, 왜망실의 세시풍속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김현철은 이야기가 끝난 후 당시 활동했던 소고재비의 개인 소고놀이를 재현하였다.

이렇게 두 명의 구술자가 주민들 앞에서 서서 당시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창작판소리 왜망실뎐을 소리꾼 이용순과 최재균이 소리를 하였다. 판소리 중간 중간에 나오는 주민들의 생애사 부분에서는 직접 이름을 부르며 주인공 곁으로 가서 소리를 하여 한층 재미를 더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 그 동안 힘겹고 어렵게 살아온 시절의 이야기를 소리꾼에 의해 창작판소리로 직접 들으니 재미와 감동이 전해졌고 ‘좋다’라는 반응이 계속되었다. 향수의 기억이 되살아난 주민들은 감동을 받아 웃음과 박수로 소리꾼들에게 보답하였고 창작판소리로 탄생한 주민들의 이야기에 긍정적인 의견과 기대감을 가진 반응을 나타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회상으로 당시의 기억을 재생하였기에 판소리의 창작이 가능했지만 과정 초기에는 무슨 의미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지 의심하고 질문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 창작판소리 발표 이후 지역일간지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 KBS 전주방송국의 TV 프로그램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라디오 프로그램 ‘전북은 지금’ 등에 소개되는 등 도시에 묻혀있던 왜망실이 언론에 소개되었다.

“여그 저그서 다들 물어보더만, 그 판소리가 어떡해서 땡글어 졌냐고? 맨날 심청가나 춘향가만 들었지 왜망실 사람들 이야기가 어떻게 판소리가 됐는가 신기하고, 들은게 재밌더라고. 나도 내 얼굴이 그냥 TV에 나와서도 좋았지만 왜놈들에 얹힌 왜망실 이야기를 말하고 난게 속이 시원하더라고. 이번을 계기로 왜망실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송○○, 남, 79세)

KBS TV 프로그램 생방송 ‘투데이 전북’은 왜망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출향민과 지역에 흩어져 사는 자식들, 친인척들, 지인들이 보게 된 것이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좋았지만 판소리로 창작되어진 결과에 대한 기쁨이 더 컸다. 도내 일간지에도 대대적으로 기사가 실려 지역 주민은 물론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왜망실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말이지, 왜막실과 왜망실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할 지 항상 헷갈렸습니다. 오늘에서야 왜망실로 불러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망실의 어려웠던 시절 주민들끼리 화합하고 함께 이겨내 온 삶에 감동했습니다. 평소에 주민들을 겪어본 바로 성품이 좋으십니다. 그러나 전주시 외곽에 위치한 관계로 늘 행정의 관심 밖이었죠. 창작판소리 역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극적으로 만들어 유익했습니다. 주민들이 오늘을 계기로 늘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 44세, 시의원)

공무원의 순환근무 특성상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주민센터 직원들은 자신들의 활동 지역에 대한 학습을 통해 과거의 왜망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한층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창작판소리 '왜망실뎐'의 소통기제가 축적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은 공동의 기억과 향수를 불러 일으켰고 재미와 감동으로 주민들이 교감하게 되는 성과와 대중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언론 보도와 방송 전파는 주민들로 하여금 자부심이 생기고 정서적 소통이 깊어지면서 공동체적 분위기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소원했던 관계가 서서히 풀리면서 작은 일에도 서로 연대하기 시작했으며 소통의 존속을 위한 기제를 스스로 모색하면서 연례적인 마을잔치를 치르자는 제안이 나오게 되었다.

“그 날 행사 보고 어르신들이 해마다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다고, 보기도 좋고 화합도 되고 말여. 그서 마을회의부터 추진했지요.”(김○○, 남, 60세)

그동안 마을회의가 없었던 왜망실에 연례적인 마을잔치 개최라는 안건으로 마을회의가 개최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 2010년부터 7월 초복날이면 마을잔치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마을잔치가 1980년대 후반까지 성행하다가 유아무야 사라졌지만 주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충분한 자극제 역할을 해왔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단합된 공동의 활동은 향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회 구성, 사라졌던 마을회의 추진, 마을잔치가 개최되면서 주민들이 화합하는 마을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 이와 같이 마을 고유의 미적 기반이 반영된 창작판소리라는 문화콘텐츠의 제작은 마을의 공동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고 더 나아가 주민들 스스로 소통기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결과로 발전하였다.

3. 마을잔치의 부활

창작판소리 발표의 장인 왜망실로 떠나는 가을소풍 이전에는 원주민을 중심으로 대부분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여성들은 음식을 해먹거나 남성들은 장기를 두는 장이

화합의 전부였다. 그러나 왜망실 이야기를 판소리로 창작한 왜망실녀가 세상으로 나오면서 주민들은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야기가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판소리로 제작된 것에 대해 놀라움과 함께 자부심이 생기게 되었다. 농경문화가 가득한 왜망실에서 새마을운동 이전까지 벌어진 잔치와 마을축제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나 노인들을 주축으로 마을잔치의 명맥을 이어가자는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왜망실로 떠나는 가을소풍’이라는 마을축제는 창작판소리 왜망실녀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왜망실을 바탕으로 창작되었기에 왜망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은 의미를 내포하였지만 주민들은 마을잔치가 일회성으로 끝나리라 예상했다. 창작판소리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초반에만 해도 원주민 몇 명만 관심을 보일뿐 이주민들은 관심 밖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주민들 대부분이 무관심했고 왜망실 주민들 역시 관심 밖이었다. 그러나 원주민인 노인들을 중심으로 과거 향수에 의한 마을잔치의 부활이라는 결론은 누가 보더라도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거 하자고 한게, 뭐 몇 분만 관심을 보였지. 처음에는, 아, 누가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모여서 이런거 할 줄 알았간디. 꿈에도 몰랐으께. 뭐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지. 근디 애기 꺼낸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날도 텅고 어르신들 식사 대접도 하고 주민들 한간디 모여서 애기도 하고 음식도 노나먹고, 여그 사람들 그려도 인자 다들 밥 먹고 산께. 이런 날도 있으믄 좋겠다. 그렇게들 생각허셨는 갠더라고. 그서 초복날 허기로 한겨여. 경로당서 주민들 모여갖고 결정된거여.” (김○○, 남, 60세)

이에 통반장모임에서 주민들을 모아 경로당에서 시작한 마을회의는 마을잔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해마다 마을잔치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4월부터 원주민과 이주민 구분 없이 마을잔치 추진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잔치는 초복날에 열자는 의견을 모았고 마을잔치 자문위원회 회장으로 정규호를 추대하였고 통장을 총무로 위촉하여 잔치를 준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작년에 본께 우리 스스로 한 번 해 보면 할 수 있을 거 같더라고, 우선 어르신들한테 의사를 물어봤지요, 경로당으로 모이시라고 하고, 각 모임단체 회장들하고 모여서 의견을 모은 거죠. 자금도 노인 회장님이 부락별로, 모임별로 가능한 만큼 내자고 하시면서 어르신이 먼저 얼마 내놓겠다고 하시드만요. 금

게 다들 동참헌거죠.” (김○○, 남, 60세)

2010년에는 초복 잔치를 준비하면서 마을의 모든 모임에서 자금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을 때 노인회 주관으로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모임별, 부락별 자금 마련안을 통과 시키는 결론을 내렸다. 주민들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동참했고 초복잔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

“주민들이 한 날 한 시에 한마음으로 모여서 뭘 헌다는거 자체가 뜻있고 좋은 거지요.” (정○○, 남, 80세)

축제는 의미를 변화시키고 의식이나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반복된다(장 뒤비노, 1998). 왜망실 주민들은 2010년 자발적으로 진행했던 초복잔치를 2011년부터는 주민들이 하나 되어 화합하는 날로 의미를 부여하고 공동체 의식이 확대되기를 소망하면서 ‘왜망실의 날’을 초복날 치르기로 하였다. ‘왜망실의 날’은 매년 초복날 열어 마을 사람들 뿐 아니라 출향민과 시내에 거주하는 지인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놀며 왜망실을 보여주고 알리자는 취지에서 결정되었다. 이는 2011년 4월 중순 초복잔치 자문위원회가 마을회관에 모여 결정하였고 이후 부녀회장 집에서 노인회장 겸 자문위원회 회장 정규호, 통장 김종칠, 부녀회장 서민경 등이 모여 2009년 열린 ‘왜망실로 떠나는 가을소풍’을 제1회로 삼고 2010년이 제2회, 2011년이 제3회가 되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남성들은 홍보, 장소, 재료준비, 운반을 담당하였고 여성들은 주로 음식 장만과 설거지를 담당하였다. 십시일반 자금을 마련하여 수건을 주민들과 시내에서 온 손님들에게 선물하였다. 공식적인 조직과 비공식적인 조직 모두 경제적인 후원을 하였고 홍보도 하였다. 또한 이주민과 원주민이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왜망실 주민 뿐 아니라 출향민들까지 포용하는 주민 잔치로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활동하여 진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렇게 창작판소리 ‘왜망실뉘’를 계기로 왜망실 마을잔치가 연례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바탕에는 마당극 형식 「며느리 설움」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마당극 형식에 내재한 문화적 가치와 창작판소리 ‘왜망실뉘’이라는 문화콘텐츠의 상호 연관성을 토대로 전통적 정서를 다분히 계승하고 있다(양승국, 1999)고 보는 것이다.

IV. 문화콘텐츠의 성과와 마을공동체의 변화

1. 창작판소리와 마을잔치의 영향

산으로 둘러싸여 길이 없고 소로만 있던 왜망실은 새마을운동과 함께 길을 내면서 외부와 소통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길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삶 자체였던 길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외부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의 산업화에 따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전라선 복선화 사업은 왜망실 주민들의 삶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주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정황은 환경 파괴에 대한 후속대책이 주민들의 공동 대응 이후 '울며 겨자 먹기' 식의 미흡한 대책에서 알 수 있다. 이렇듯 해당 관청의 미흡한 대책과 주민들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증명되었고 결과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기에 충분했다.

해당 관청의 이러한 태도와 더욱 파괴되는 환경 앞에 주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지켜내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의 성장을 매개로 한 공동 상징이 작동된 것이었다. 피켓시위는 물론이고 해당 관청에 청원을 넣어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마을 지키기에 나서게 되었다. 이는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주장하고 파괴된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공동체성 움직임이었다.

2. 마을공동체의 변화

왜망실의 공동체는 농경문화에서 나타난 공동부역, 공동노동, 세시풍속, 일상의례, 공동조직 등 촌락공동체가 중요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부터는 마을잔치로 인해 마을의 공동상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었고 문화적 공동체와 도시적 환경보전운동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공동상징을 통한 문화적 공동체가 작용하게 된 배경에는 농경사회의 문화적 특징이 자리하고 있다. 먼저 운명공동체의 공동 활동으로서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마당극 형식의 「며느리 설움」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당시 유행하던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의 내용과는 다르게 암울하고 보수적이었던 왜망실의 시대적 상황과 비슷한 내용의 극이었다. 「며느리 설움」을 준비한 주민들과 관객으로 만난 주민들 간의 유대관계는 물론 흥

미유발과 공감대가 쌓였고 주민들이 모두 모여 즐기고 격려하는 등의 공동체성을 나타내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주민들끼리 준비하여 상연까지의 간단치 않은 준비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연극이 가지는 특성 중의 하나인 연습기간이라는 과정 안에서 주민들이 서로 정들고 화합 하는 계기가 되었다. 왜망실이라는 공간에서만 행해졌고 여성들의 시집살이와 관련한 현실적인 내용에서 주민들은 배우들의 연기를 따라하는 등의 상징들이 유포되면서 이웃 간 정을 나누고 함께 하려는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외에도 다양한 놀이를 즐기므로써 놀이를 통한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있었다.

농경사회 이후 급격한 도시의 산업화로 인하여 사라졌던 놀이문화와 촌락공동체는 문화활동가들의 자극에 의해 주민들 스스로 마을잔치를 펼치면서 문화적 공동체로 재생되었다. 주민들은 왜망실의 날을 제정하여 해마다 초복잔치를 치르기로 하였고, 마을을 찾는 이들에게는 마을의 문화를 보여주고 주민들 간에는 화합을 주도하는 자리로 이어가는데 합의하였다.

또 전주 - 광양간 고속도로와 전라선 복선화 사업에 의한 마을의 환경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주민들은 공동대응을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당위성을 관철시키면서 파괴되었던 환경이 회복되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는 구성원들의 삶터인 왜망실의 환경 보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의 염원이 담겨 있고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을 구성원들이 마을에 당면한 문제에 공동체를 통해 자발적 참여로 이끌어 내고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형식의 공동체는 이전의 농촌공동체와 분명 다르다. 경제 구조의 변화로 기존의 농촌 공동체는 품앗이, 계 등 상부상조를 위한 경제 공동체가 중요했다면 현재는 상부상조 하던 노동교환은 사라지고 임금노동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경제 공동체가 약화되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도했던 문화활동가들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경제 공동체 보다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주민들의 자부심을 증대할 수 있는 문화 중심의 공동체가 더욱 강화되었다.

V. 결론

왜망실의 사례는 도시근교의 마을이 문화콘텐츠를 통해 어떻게 공동체성 회복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방의원이 선출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권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하향식 권력구조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주민들의 협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적인 해결방향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인 한파가 오면서 품앗이 등 노동교환도 그 성격이 변하면서 품팔이라는 임금노동으로 변화되었다. 즉, 내부적 순환관계가 사라지고 내외부의 구분 없는 임금노동으로 전환되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공동체성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를 염려하고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다. 그러한 활동의 하나로 문화활동가들이 주민들의 삶과 마을이야기를 판소리로 창작하는 노력이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을이 이슈가 되자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증가하였고 주민들은 또한 마을잔치를 열어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였다. 원주민들의 향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 후 생애사와 마을사를 조사하여 문화콘텐츠 창작판소리 ‘왜망실뎐’을 만들었다. 마을잔치를 준비하여 재미와 감동을 주어 서로 교감하게 되었고 문화콘텐츠 개발로 대중성이 확보되었다. 마을의 역사화 주민들의 삶이 극적이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주민센터, 시의원, 조합장, 언론 등 외지인들이 왜망실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문화적 상징과 주민들의 자부심이 증대되었다. 이를 계기로 주민들이 화합하여 마을잔치를 연례적으로 열기를 바라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사라졌던 마을회의가 부활하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왜망실 주민들만의 마당극 형식의 「며느리 설움」이 놀이 문화로 선행되어진 효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회복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화콘텐츠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먼저 마을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과정과 원인은 지속 - 약화 - 회복이라는 과정도 문화콘텐츠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 공동체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혼인제와 상여제가 존재하여 의례를 치를 수 있었고 공동놀이를 즐겼는데 무엇보다 마당극 형식의 「며느리 설움」으로 인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빈곤한 농촌마을의 삶 안에서 공동노동, 공동부역, 규범, 의례, 세시 등 농경문화를 유지하고 공동운명체를 느끼며

살아온 과정과 연계되어 있다. 공동체가 약화된 과정은 새마을 운동 당시 국가의 개입으로 통제와 관제조직이 증가 되면서 주민들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면서 약화되었고 사조직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문화활동가와 주민들에 의해 창작판소리 '왜망실뎐' 이 만들어지고 마을잔치를 치르게 되었다. 그 이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해마다 마을잔치를 치르는데 합의하면서 주민들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라졌던 마을회의에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 동참하여 개최하는 과정을 겪었다. 자문위원회 의장을 선출하여 참여주민 모집, 자금 마련, 음식장만, 진행 등 도시의 여느 축제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면서 마을의 주민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은 마을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통해 자발적 참여로 이끌어 내고 마을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이 마을잔치를 통해 서로가 한 마을에 사는 구성원임을 확인하여 공감대와 유대감이 증대되었고 매년 초복 때마다 '왜망실의 날' 이라는 마을축제를 통하여 마을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을 축제는 원주민과 이주민,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봉합되고 소통의 기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등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을공동체성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협력하여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최승호, 2009).

새로운 마을공동체의 특징은 이전의 공동부역, 공동노동, 공동조직, 공동이익, 의례, 세시 등이 행해졌던 전통적 촌락공동체와 달리 창작판소리, 마을잔치, 잔치 공간, 초복이라는 세시풍속 등 공동상징이 발현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주민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다' 라는 의식의 성장을 매개로 한 공동 상징이 갈수록 작동되는 것이다. 다양한 집단이 섞이는 근교마을이 문화적 상징과 자부심이 발현되면서 평등한 공동체로서 상징화되고 수용되었다. 이주민의 역사가 짧아 사회적 지위가 낮기 마련이지만 마을잔치를 함께 준비함으로써 원주민들이 이주민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렇게 변화하는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과거에 공동체의 성격이 경제, 의례, 친족 등이 얹힌 종합적인 공동체였다면 이러한 공동체의 부활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이 문화적 상징과 문화운동으로 공동체를 상상적으로 재현하면서 공동체 활동이 증가하고 문화적 공동체로 재생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공동체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으며, 문화콘텐츠가 새로운 공동체 형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 공동의 문화자원, 외부와 대립되는 정체성, 평등한 관계 유지가 마을

공동체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적 상징과 자부심이 담긴 문화공동체적 성격이 강화되었고 상징적으로 문화를 매개로 외부와 차별적인 독립적 공동체로 상상하게 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광익(1998), “현대중국 농촌에서 공동체 이념의 기반”, 『농촌사회』제8집, 한국농촌사회학회, pp.130-160.
- 김현갑(2011), “도시 속 농촌 마을공동체 변화에 관한 연구: 전주시 왜망실(倭亡室) 마을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승국(1999), “1910년대 신파극과 전통연희의 관련 양상”, 『한국극예술연구』Vol.9, 한국극예술학회, pp.47-68.
- 이은희(2008), “후기 근대 지역공동체의 성찰적 동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수(2008), 『한국사회와 공동체』, 다산출판사.
- 이해준(1998),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자원의 연계방안 : 은산별신제와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백제문화』Vol.27,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pp.139-152.
- 임세정(2011), “농촌자원의 콘텐츠 활용 모델 연구: 경기도 용인시 갈월마을의 농촌자원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 뒤비노 지음 · 류정아 옮김, 1998, 『축제와 문명』, 한길사.
- 정빛나(2010),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성 구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혜원 · 홍형욱(2002),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의 접근방법과 쟁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Vol.20, 한국가정관리학회, pp.33-44.
- 최승호(2009),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발전 방안 모색”, 『한독사회과학논총』Vol.19, 한독사회과학회, pp.237-268.
- 함한희(1996), “한국사회구조의 원리를 찾아서-구미인류학자들의 한국문화연구”, 『인문연구논집』23집,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pp.187-236.

서평

서구도시에서 배우는 우리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 마쓰나가 야쓰미쓰, 『도시계획의 신조류』(한울아카데미, 2009)

진영환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원장

김석철, 『건축과 도시의 인문학』(돌베개, 2011)

이종현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테오도르 폴 김, 『사고와 진리에서 태어나는 도시』
(시대의 창, 2010)

박진한 |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서구도시에서 배우는 우리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 마쓰나가 야쓰미쓰, 『도시계획의 신조류』(한울아카데미, 2009)

진영환*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현주소와 시대적 요구

최근 들어 도시 곳곳의 뉴타운사업들이 좌초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의 도시모습을 급변시켰던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사회적 갈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많은 사업들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 반세기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던 개발시대의 우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찬찬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연 도시계획의 목표와 실천방법이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진화되어 왔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난 50년을 돌이켜 보면, 그동안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짧은 기간에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우리 도시의 외연적인 모습 또한 놀랄만큼 바뀌었다. 서구에서 2세기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진 산업화와 도시화를 반세기에 걸쳐 압축적으로 경험하였다. 1960년에 900만 명이었던 도시인구가 2011년에는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원장

4,60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도시화율도 39%에서 91%로 꺾어졌다. 지난 50년간 증가한 도시인구 3,700만 명, 1년에 80만 명 가까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여 왔다. 이는 40만 명 규모의 분당신도시 2개씩을 매년 건설해 왔음을 뜻한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건강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교통시설, 상하수도, 전력통신, 그리고 주거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골고루 갖추어야 하며, 60, 70년대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80, 90년대에는 신도시사업, 그리고 2000년대에는 기존 도시 내 뉴타운사업 등을 통해서 도시공간을 대량으로 공급해왔다.

효율성에 기반을 둔 대량 공급 중심의 도시개발정책은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상당히 성공적이었으며, 그 결과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물리적인 공급정책에 치중한 결과,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도시, 대규모 아파트 중심의 개성 없는 회색 콘크리트 도시, 기존 도시공동체의 해체와 자동차 위주의 비인간적인 도시, 부동산시장의 과열에 의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대도시 외곽지역의 신도시 중심 개발에서 기존도시 내의 재개발사업으로 무게가 옮겨가면서 과거의 획일적인 사업기법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공급위주의 도시정책은 19세기 후반, 산업화시대에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등의 서구도시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20세기 초에 대량생산이라는 기능주의에 기반을 둔 근대 도시계획으로 발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전후복구를 위해서 지속되었던 기능 중심의 포디즘(Fordism)¹⁾적인 도시정책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종 부작용으로 인하여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된다. 가장 커다란 차이는 기능적이고 물리적인 도시건설보다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가에 도시계획의 관심이 두어졌다.

우리의 도시계획도 그동안 도시 녹지공간의 확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도시경관의 다양화와 같이 부분적으로 서구의 새로운 도시계획 기법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아파트의 대량 공급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시민들의 도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빛을 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속도가 떨어지고 부동산시장도 안정되어 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능 중심에서

1) 20세기 초 포드자동차에서 조립라인을 도입하여 자동차의 대량생산을 가능케 한 생산방식으로 20세기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를 일컫는다. 반면에 포스트 포디즘(Post Fordism)은 노동의 단조로움과 비인간화에 대한 반성에서 다품종 소량생산과 같은 생산의 유연성과 노동의 인간화를 강조한다.

인간 중심의 도시계획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명실공히 개발도상국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근대도시계획의 발전과 새로운 시도

근대 도시계획은 19세기 산업혁명시대에 도시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 유럽과 미국의 자본가들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내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도시환경은 악화되고 노동자의 작업과 주거여건은 몹시 취약하였다. 주택임대업자들은 도시로 밀려드는 노동자들에게 허름한 셋집을 비싼 값에 공급하면서 높은 이득을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 도시계획은 도시의 급속한 과밀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즉 위생, 공중보건, 주택, 오픈 스페이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영국에서는 1848년에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을 제정하여 상하수도의 정비, 주거환경의 개선에 노력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서 하워드의 전원도시운동이 확산되면서 런던 도심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피해서 교외지역에 중산층을 위한 주택들이 대량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서서 세계적인 건축가인 르 꼬르비제가 근대 도시계획의 발전을 주도하게 된다. 그는 기능적 합리주의를 토대로 주택을 사람이 거주하는 기계(living machine)로 간주하고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그가 1922년에 제안한 인구 300만의 현대도시’는 공업도시의 음산하고 비위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고층 건물과 광대한 녹지, 그리고 자동차시대에 대비하여 넓은 도로망을 갖추었다. 꼬르비제의 제자인 루시오 코스타가 1950년대 말에 계획한 브라질의 신행정수도 브라질리아는 이러한 개념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자동차 중심의 블록구조와 교통체계, 그리고 도심부에 광활한 공공녹지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리아는 이상적인 도시계획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기에는 결코 편하지 않고 활기가 없는 ‘박물관도시’ 같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²⁾

이와 같이, 20세기 초반에 진행된 근대 도시계획은 기능 위주의 접근으로 인해서 비인간적인 도시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즉,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급증하는 도시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기능적인 도시를 대량으로 공

급함으로써 양적인 공급부족 문제 해결에는 성공적이었으나, 도시의 획일성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의 제인 제이콥스는 기능 중심의 현대도시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녀는 대표적인 저서 ‘미국 대도시의 생과 사(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961)’를 통해서 도시 구성에 있어서 인간적인 척도의 중요성과 다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³⁾

서구사회의 후기 근대주의(Post Modernism) 흐름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에 시작된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운동은 대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 도시 내 오픈스페이스의 훼손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제안들을 활발하게 제시하였다. 뉴어바니즘의 특성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보다는 도시 내에서 주거, 상업, 업무기능을 복합적으로 공급하는 ‘직주근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건축을 강조하고 도시와 근린공동체의 결합을 중요시 하고 있다. 한편, 자가용 의존적인 도시에서 탈피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지향하는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는 효율적인 도시토지이용을 위해 철도역세권이나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상업, 업무, 주거기능을 입체적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도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기존도시의 리모델링을 통한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념도 도입되었다. 이는 로스엔젤레스와 같이 평면확산형 대도시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기존도시의 개발밀도를 높임으로써 에너지 효율적인 콤팩트한 도시를 건설하자는 제안이다.

2) 브라질리아는 신호등 없는 자동차 도로체계로 유명하지만 보행자에게는 불편하기 그지 없으며, 중심부의 대규모 녹지축 공간도 사람의 도보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속에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철저한 토지이용 규제로 브라질리아는 쾌적한 수준의 계획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외곽의 위성도시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수백만의 저소득층 인구가 살고 있다.

3) Jane Jacobs는 전문적인 도시계획가가 아닌 시민활동가로서 도시계획에 관여하였지만 도시계획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뉴욕시 맨하탄 섬을 관통하는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주도하면서, 그녀는 도시계획은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뉴욕시 정부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그 이후 그녀의 생각은 후기 근대주의(Post Modernism) 도시계획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저서 ‘미국 대도시의 생과 사’는 20세기 100대 저서에도 이름이 올라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공적인 전후 복구사업과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1960년대에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이 전개되었다. 급속한 산업화에 의한 환경피해로 1960년대 초부터 공해반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⁴⁾ 이에 일본정부는 복지 없는 성장은 무의미함을 인정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민운동은 점차 생산적인 참여형 주민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일본의 특징을 살린 도시계획운동이 전개되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생적 도시만들기 운동인 ‘마치즈쿠리(마을만들기)’로서, 일본 특유의 시민참여제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이 유기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서구도시 현지에서 살펴본 ‘도시계획의 신조류’

이 책은 일본의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가고시마대학 건축학과 도시디자인연구실 교수인 마쓰나가 야스미쓰 씨가 3년간에 걸친 미국과 유럽도시 탐방여행을 끝내고 그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저자의 첫 번째 소감은 “도시계획의 조류는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책은 서구도시에 대한 일본 도시계획 전문가의 생생한 현장보고서로서 21세기 서구 도시계획의 새로운 조류를 현장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불량지역의 재개발과 관련한 현장지식을 관련사진과 세부적인 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고,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전문적인 해석을 달고 있다.

제1장에서는 20세기 도시계획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건설된 대규모 주택단지로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프루티고, 영국 맨체스터의 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벨마미아 사례를 살펴본 후 저자는 근대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 공급을 위한 고층화와 획일적인 건축설계, 기능주의에 근거한 과도한 용도 분리로 주거, 업무, 여가기능 간의 접근성 저하, 자동차 중심의 단지 설계와 보행자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이다. 근대 도시계획 이론가들은 일종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다

4) 이당시 산업폐기물인 납중독으로 인한 ‘이파이이파이병’이 크게 사회문제화 되어 공해반대운동의 불을 지폈다.

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적 여건상 주택 부족문제라는 현안문제에 시급하게 대처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보다는 대량 공급에 치중하였던 것을 실패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개념으로 '컴팩트시티'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뉴어바니즘'과 영국의 어반빌리지를 예로 들고 있다. 20세기 도시계획이 너무 확대 발전 지향적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관점에서 컴팩트한 도시가 도시교통비용을 줄이고 더 활기찬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엡시시티'⁵⁾에서 뉴어바니즘으로, 그리고 영국은 전원도시에서 어반빌리지로의 전환과정을 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의 유럽도시들은 역사적으로 중세도시의 컴팩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스트라스부르와 같이 LRT(Light Rail Transit)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망의 성공적인 확충이 기존시가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뉴어바니즘을 실천한 미국도시 탐방결과를 담고 있다. 플로리다주 해변에 위치한 소규모 리조트도시인 시사이드는 중앙에 위치한 상점, 슈퍼마켓, 교회, 우체국을 중심으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도시구조를 갖고 있다. 시사이드 도시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양한 시설이 공존하고, 주요시설에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고, 지역의 개성과 다양성을 도시에 담고 있다. 이 도시에 적용되었던 '전통적 근린개발(TND,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기법은 타 도시에 도 발전적으로 적용되면서 미국 도시계획의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인근에 새로이 건설된 래그너웨스트는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과 TND의 좋은 실천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도시는 새크라멘토 도심과 연결되는 버스정류장 주변에 타운홀, 유치원, 오피스파크, 교회 등이 위치한 다운타운을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보권 바깥으로 미국의 전통적인 스타일의 정원을 가진 단독주택을 배치하였다.

제4장에서는 영국 찰스 황태자가 주장하는 어반빌리지(Urban Village)의 개념을

5) '엡시시티'라는 용어는 대도시 근교에 위치한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주거를 비롯한 각종 도시기능이 집적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대도시의 스프롤현상은 대부분의 미국 도시에서 일어났으나, 교통비용의 증가로 인한 에너지의 낭비와 도시중심지역 공동화현상의 원인으로 비판받고 있다.

적용한 파운드베리 사례를 담고 있다. 어반빌리지란 그 이름대로 도시에 마을과 같은 스케일감과 친밀감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모든 볼일을 볼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커뮤니티의 형성을 중요시 한다. 찰스 황태자는 미국의 뉴어바니즘을 처음으로 적용한 도시인 시사이드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 파운드베리는 100년 후의 완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며, 용도혼합, 주민혼재, 인간적 스케일, 직주근접, 범죄예방 등의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제5장에서는 EU 도시들 탐방결과를 신고 있다. 프라이베르크, 칼스루에, 스트라스부르 등의 유럽도시들은 역사적으로 컴팩트한 공간구조를 갖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옛 도시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심지역에 LRT 등의 대중교통시설을 도입하여 승용차의 진입을 최소화하면서 보행자 위주로 도심지역 재생에 성공하였다. 프라이베르크는 도시경관의 다양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종래의 ‘슈퍼블럭형’이 아닌 가로에 붙여 건물을 짓는 ‘가로형’으로 주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건물높이 또한 고층이 아닌 4층 정도로 설계하였다. 또한, 자동차 사용을 대폭 줄이기 위해 ‘자동차 함께 타기(car sharing)’와 ‘차 없는 생활(carless life)’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다.

제6장에서는 앞의 사례도시 분석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도입된 새로운 도시계획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도보권 중심의 지구계획, 용도와 기능의 혼합, 오픈스페이스의 적절한 활용,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형성, 에너지 절감, 공공공간의 중시, 다핵적인 도시 형성 등이다. 특히 근대 도시계획에서 유행하였던 획일적 고층화와 슈퍼블럭화를 비판하면서, 보행자의 안전과 시각적 침투성⁶⁾을 높이기 위해서 단지조성과 건물배치의 개방적인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일본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례로서 저자가 직접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책은 일본의 도시계획 전문가가 미국과 유럽의 도시들을 발로 뛰면서 체득한 소중한 현장경험들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도시계획, 도시설계의 기술적

6) 침투성에는 물리적인 측면과 시각적인 측면이 있다. 물리적으로는 필지를 가능한 소규모로 세분하여 보행자의 경로 선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시각적으로는 건물 내외에서 시선이 닿기 쉽게 가로를 설계함으로써 노상 범죄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린주구이론에 의해 장려되어 왔던 보도와 차도의 분리는 시각적 침투성의 저하문제로 보행자의 안전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

인 특성상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곳곳에 사진을 첨부하여 독자의 이해를 높이려 노력하였다. 또한, 근대 도시계획에서 시도되었던 다양한 이론과 실천수단들을 시공간을 넘어서 입체적으로 비교, 설명함으로써 역사적인 맥락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도시계획, 도시설계, 단지계획과 관련분야의 실무자 및 대학생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실무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왜냐하면 선진도시들이 앞서서 겪었던 산업발전과 도시화에 따른 시대적인 도시문제들을 우리도시들도 그대로 겪고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시민이 훌륭한 도시를 만든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정책은 대량 생산 중심의 기능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친밀감과 문화적 다양성을 도시계획의 가장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서구의 ‘뉴어바니즘’이나 ‘어반빌리지’ 운동과 같은 선상에 있으며,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도 과거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개발시대를 지배했던 ‘성장최고주의’ 가치관이 점차 바뀌고 있다.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구조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도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공급 속도와 양적 규모보다는 실질적 내용과 질적 수준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수립과 결정도 공급자에게 맡기기 보다는 수요자인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속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은 크게 보면 공익을 목표로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익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공과 사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전제될 때 시민참여를 통해 좋은 도시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서구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탄탄한 시민정신을 토대로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결국 훌륭한 시민이 훌륭한 도시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재길 외(2005),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 뉴 어바니즘, 안건혁 · 온영태 옮김(2003), 『뉴 어바니즘 현장』, 한울아카데미.
- 진영환(2006), “살고 싶은 국토만들기의 개념과 의의”, 『살고 싶은 삶터 함께 만들기, 새국토연구협의회』.
- 진영환 외 옮김(2008),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 : 사례편, 전략편』, 한울아카데미.
- 최병선 · 이원섭(2006), “도시 변동론과 도시의 질적 발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제이프러스에드.
- Hall Peter(2005), *Cities of Tomorrow: An Intellectual History of Urban Planning in the Twentieth Century*, 한울아카데미.
- Jacobson Jane(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Inc.

김석철, 『건축과 도시의 인문학』 (돌베개, 2011)

이종현*

1. 김석철의 저서 『건축과 도시의 인문학』은 작가가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로서의 일생을 통하여 지녀왔던 인문학적 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작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중심내용은 아마도 건축과 도시 분야에서는 역사속의 위인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인문학적 관점에서 설계를 하여야 시대를 초월하는 훌륭한 작품이 탄생한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작가가 경험하였던 많은 작품과정의 회상과 함께, 지금의 4대강이라든지 100층을 넘는 고층 랜드마크빌딩의 비인문성, 남북관계 및 에너지 절약 등 미래에 대한 인문학적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건축 및 도시와 관련된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일련의 인문학적 소양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보여준다.

2. 작가는 21세기의 건축과 도시의 틀은 고대문명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통일신라와 중세의 고려, 서양 고대도시와 중세의 종교 변화를 설명하면서, 고대와 중세의 도시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 공자의 도시인 취푸의 신도시설계를 직접 휘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하면서, 대부분의 이슬람인이 메카를 가보고 싶어하듯이 중국인이라면 취푸를 가고 싶어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에 공을 들였던 경험을 말하고 있다.

3. 공자의 묘인 공묘는 춘추전국시대 공자의 사상이 반영된 도시로서, 유사한 모양의 많은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지만 모두가 다른 시대의 건축물로서 동일한 건축원리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다. 즉 동양건축은 시대가 바뀌어도 같은 양식을 반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시대의 건축양식을 부정하는 서양건축과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뉴바쿠의 도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작가가 청춘시기에 겪었던 죽음의 의미에 대한 고민과 자라투스트라에 스며져 있는 페르시아의 특징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경험에 대하여 말하면서, 인문학이 어떻게 자신의 도시설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한다.

4. 그리스의 도시는 신전과 극장과 같은 공공공간의 강조에 특징이 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와 현대유럽도시의 모델이 되었던 알렉산드리아에서의 도서관 현상설계 경험에서 하늘에서 바라다보는 관점에서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기준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전사들이 이룩한 도시인 로마의 공화정이 기초인 로마의 도시구조와 도로망, 판테온이 주는 인간적 스케일에 대한 소개와 해석을 하고 있다.

5. 유럽중세도시는 최소의 에너지 소비를 통하여 최고의 삶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서, 중세도시의 코드그린은 오늘의 인류가 추구해야할 신도시이다. 우리나라의 불교도시 경주와 최고의 신도시인 서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중세도시의 차이는 주로 특별한 종교에 기반하며, 이슬람문명과 인도의 불교, 중국의 유학이 혼합하여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석하고 있다.

6. 작가는 베니스대학에 강의하면서 대부분의 유럽중세도시를 4~5년간에 걸쳐서 답사하면서 유럽 중세도시의 특징과 세계를 주도하게 된 이유를 파악하였던 것 같다. 주로 농업혁명에 의한 혁신적인 부의 창출로 발전한 중세도시와 그렇지 않았던 동양의 도시와의 차이, 도시건설의 원초적 토대를 작가는 설명하면서, 베니스처럼 한없이 걸어 다니는 도시가 되어야 사람들이 도시를 잘 알 수 있으며, 대중교통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도 이러한 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개방적인 이슬람문명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시인 예멘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중동의 석유를 정제하여 수출하는 아덴신도시계획을 제안하였던 경험을 통하여 이슬람도시의 입장에서 이슬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불교는 집단보다 개인의 형이상학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는 공동체를 중시하며, 유학에서는 개인의 깨달음과 공동체의 깨달음의 공존을 말한다. 이러한 유학정신이 토대가 되어 수문제가 직접 설계한 도시인 시안은 유학도시의 기본 틀이 되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주의 모델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8. 천년동안 잊고 있던 고대문명의 위대함을 발견함으로써 시작된 르네상스는 자연과학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고 산업혁명을 이끌어내는 기초가 되었다는 언급과 함께, 작가는 르네상스로 인하여 가능하였던 산업혁명의 건축과 도시에 대하여 이야기를 풀고 있다.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하여 문명의 혜택을 받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9. 르네상스는 몇 명의 위인들이 만든 문명이다. 작가가 가장 감동하는 위인으로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요하네스 구텐베르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 등이다.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돔을 건축하고, 로렌초 기베르티가 설계한 천국의 문이 위치하는 피렌체의 두오모 대성당은 로마의 판테온 이후의 1400년 만에 만들어진 걸작으로 기술적으로 미학적으로 위대한 인문학적 작품으로 설명한다. 특히 유럽의 중세도시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재료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며, 서울은 잡색의 도시로 비평하고 있다. 그 외의 르네상스 건축물로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피사의 사탑, 빌라 로툰다 등을 열거하면서, 특히 건축가 필라디오는 건축철학이 아닌 건축기술을 충실하게 저술하였던『건축사서』에 대하여 작가가 감동받았던 경험을 말하면서, 건축기술만을 가르치려고 했던 팔라디오야말로 위대한 인문학자였음을 강조한다.

10. 산업혁명은 자연과학이 이룬 문명으로서 증기기관을 만든 제임스 와트, 전기를 발명한 알렉산드로 볼타, 철강산업을 일으킨 빌헬름 지멘스와 헨리 베서머의 4인이 산업혁명이후의 건축 및 도시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철강산업 이후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건축물로는 크리스탈 팰리스, 에펠탑, 그랑팔레, 오르세역과 런던의 더몰, 파리의 샹젤리제, 산업혁명의 도시인 에센의 크루프공장도시, 런던의 타워브릿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으며,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금까지의 단일건물중 가장 큰 건축

물이지만 철강의 힘으로 겨우 4개월만에 완성을 한 건축물이며, 파리의 랜드마크인 에펠탑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11. 지식산업사회의 인문학은 20세기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다.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이 세계화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된 시기이나, 세계대전과 식민통치, 인종차별과 빈부격차가 존재한 시기라는 것이다. 20세기는 다섯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르네상스, 로코코, 바로크 시대와는 다르게 역사와는 단절된 새로운 건축형식과 미술이 탄생한 것이 1단계이고, 2단계는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다. 3단계는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까지이고, 4단계는 우주경쟁과 생명공학의 시기, 5단계는 탈냉전의 시대로 작가는 나누고 있다.

12. 20세기의 문을 연 건축물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으로 가우디의 작품이다. 또 다른 작품인 카사밀라는 기존의 건축물과 소재와 형태가 판이하게 다른 건축물이다. 철골을 이용하여 곡선을 추구하였으며, 특이한 형태였지만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의 모습과 잘 일치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13. 세계대전과 대공황이후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과 크라이슬러 빌딩의 예술성과 인문학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작가는 기본적으로 랜드마크빌딩은 록펠러센터와 같이 여러 개의 건축물군이 모여서 사람들의 삶의 구역으로 만들어나가야 하고 단일의 랜드마크 건축물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14. 2차 세계대전에서 암호기 컴퓨터를 만든 앨런튜링이 자살하기 위하여 한입 베어 먹은 독사과는 지금 애플의 로고가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르 꼬르브지예가 20세기 건축과 도시설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20세기 건축계의 세 천재인 르 꼬르브지예와 미스 반 데어 로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물에 대하여 말하면서,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광장을 도시문명의 정수로 언급하는 대신, 서울의 압구정을 만날만한 사람이 없는 그저 도시마을로 비판하고 있다.

15. 우주공학과 유전공학의 시대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있는 르 꼬르브지예가 건축한 조그마한 통상교회의 우수성에 대하여 논하면서, 비행기 모양을 참고하여 설계된 브라질리아에 대해서는 21세기의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나 몇몇 기념비적

인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20세기 신도시다운 도시형상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탈냉전의 기대에 들어와서는 로버트벤츄리의 바나 벤츄리하우스와 루이스 칸의 김벨 미술관을 소개하면서,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베를린의 포츠다머 플라츠가 실패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16. 현대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에너지 절약도시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작가가 설계한 취푸신도시가 가지는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한반도 인문학으로 남북공동도시 회랑으로 서울과 개성과 인천을 환상으로 연결하는 한반도 수도권 회랑 구상을 제안하면서, 인천대교, 영종~강화간도로~개성~파주~서울~판교~수원~시화~송도로 이어지는 축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논하고 있다. 남북공동도시회랑과 함께, 4대강과 관련된 작가의 경험을 한강마스터플랜, 낙동강과 서낙동강 운하도시 연합, 금강 새만금 세종시, 영산강 다도해 섬진강 바다도시의 제목으로 소개하고 작가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하고 있다.

17. 건축 및 도시에 대한 작가의 인문학적 경험은, 건축이나 도시설계분야의 종사자 및 학생들에게 유의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완전히 단절된 분야로 느끼지 쉬운 인문학과 도시설계가 아니라, 훌륭한 건축가 및 도시설계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끊임없이 쌓으면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작가의 생각이 저서에 잘 스며들어 있다. 그와 함께, 역사 속에서의 도시발전과정을 인문학적 기준에서 설명함으로써 건축과 도시가 발전하게 된 과정과 왜 그러한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독자가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건축과 도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미술의 발전과정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고, 작가의 지난 작품과정에서 인문학적 경험이 설계안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가 상상을 하여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기 쉬운 건축가와 도시설계, 도시계획가에 있어서는 한 번쯤 가볍게 읽어보고, 인문학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테오도르 폴 김, 『사고와 진리에서 태어나는 도시』 (시대의 창, 2010)

박진한*

1. 인문학의 함정에 빠진 도시비평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도시’는 중요한 화두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 동북아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송도국제도시 같은 신도시 건설 사업을 비롯해 도시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전국의 도시는 ‘공사’ 중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가 중단된 상태다.

부동산경기침체로 100층 이상 초고층빌딩 건설 계획을 추진했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는 이미 취소되었고 2014년 완공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기공식까지 개최했던 인천타워 역시 151층에서 102층으로 계획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공사는 지지부진하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를 끼고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같은 주거시설을 개발해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로 도로나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방식은 앞으로 상당기간 불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도시개

*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발사업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주민의 삶, 도시의 역사·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경제적 동기에서 시작해 위기적 상황을 맞이한 작금의 도시개발사업은 우리로 하여금 새삼스레 도시를 문제적 대상으로 바라보게끔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일까 최근 들어 경제적, 기계적, 공학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적, 인문학적 관점에서 도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프랑스의 정부건축사이자 도시계획가, 사회도시학자로 활동 중인 테오도르 폴 김의 <사고와 진리에서 태어나는 도시>는 바로 이러한 목소리에 부응하려는 실천적 목적에서 비롯된 서적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오늘날 한국의 도시문제를 손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교항으로 유럽의 도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도시가 탄생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였던 고대 그리스, 고대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지식, 즉 철학 미학 사회학 언어학 사회심리학 민속학 인류학” 등의 지식과 이론을 인용하면서 전체 4장에 걸쳐 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사고를 풀어내고자 시도했다. 악티알리자시옹, 아비투스처럼 다소 어려운 미학 용어와 저명한 건축가들의 이론을 자주 인용하면서 논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이 책의 핵심은 비교적 간단하다.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곳이며 따라서 도시공간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성을 중시해 주민의 삶이 존중되는 곳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저자의 주장에 대해 필자 역시 백퍼센트 동의한다. 아니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찌 보면 그다지 신선하지도 흥미롭지도 않을 정도다.

그런데 오히려 도식적으로까지 반복되고 있는 저자의 비판이야말로 오히려 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사고를 탈각하고 있는지 않는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도시개발정책을 비판한 부분에서 “한국의 경우 그동안의 정치권력들이 추진하려 했던 수도권 이전, 혁신도시, 간척사업 등의 거창한 건설정책들은 도시계획의 원리와 개념이 망각되어 국가 위기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317쪽)는 주장은 그 즉시 4대강사업을 떠올리게 만들 만큼 시사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시와 건축의 역사성 내지 공공성을 중시하는 저자가 한국의 역대 정치권력들이 추진한 여러 건설 사업을 도식적으로 하나로 묶어 “국가 위기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짓는 것은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60-70년대 식량 자급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한 간척사업과 90년대 국토개발이란 미명아래 엄청난 환경파괴를 초래한 새만금사업의 역사적 의의와 평가는 분명 다를 것이다. 또한 70년대

후반 북한과의 대결 속에서 한강 이남으로의 인구분산을 위해 추진된 강남개발사업과 2000년대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경제 집중과 지방으로의 인구 분산을 꾀하기 위해 추진한 수도권 이전과 혁신도시사업이 동시에 언급될 만큼 동질적인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이처럼 각각의 사업이 가진 역사성을 무시한 채 유럽의 경험과 도시를 절대 기준으로 설정하고 “한국의 경우”로 통칭해 도시개발사업을 일반화시키는 설명 방식은 필자가 전달하려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오히려 배치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싶다.

이 책은 어느 인터넷 블로그의 서평대로 ‘인문학’이라는 함정에 빠져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를 놓치는 과오를 범했다. 이런 점에서 유럽의 도시는 물론이고 서구의 역사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필자가 제시한 전거와 이론이 과연 얼마만큼 실감 있게 이해되었을지 의문이다.

2. 도시재개발사업과 민간사업자

저자는 “한국의 건축은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엔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도시와 주택개발이 공공성을 상실한 채 특권층과 기업이익을 위해 시행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도시가 “더불어 사는 공공의 장소이며 공동체 생활의 영역”임을 환기하면서, “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주거장소, 삶의 영역이 되는 땅과 건물은 돈으로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도시문제를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보다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면 독자들에게 저자의 주장이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다. 굳이 저자가 용산참사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재 재개발정책의 문제점이 도시주민 또는 도시공동체의 공공성이나 지속성보다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건설사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한국과 유럽의 도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기보다 한국의 도시재개발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저자 나름의 대안이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더라면 어땠을까. 저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프랑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한국의 도시 내지 도시개발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지

적했더라면 더욱 설득력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한국의 도시재개발사업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한 『도시개발 길을 잃다』(김정민, 시공사, 2011)는 견해의 옳고 그름을 떠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시사적이다. 현재의 도시재개발방식은 공공조직이나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민간 시공사가 실질적인 개발자, 즉 디벨로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시공사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거주권을 보장하기보다 초고층화를 통해 외관의 화려함과 거주공간의 차별성을 강조해 분양자를 모아 단기간에 투자 수익을 환수하려는 전략을 펴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분양방식은 입주자가 막대한 입주금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경기 부침에 따라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실패하게 된다. 『도시개발 길을 잃다』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조직과 민간 사업자,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PPD(Public Private Development) 사업방식을 추천한다.

여기서 잠깐 도시개발의 모범사례로 제시한 일본 롯본기 힐즈(Roppongi Hills)의 경우를 살펴보자. 1986년 텔레비 아사히(TV asahi) 본사의 이전을 계기로 권리변경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된 모리빌딩(森ビル株式会社)이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대규모 복합시설을 갖춘 도시재개발사업을 구상하면서 시작되었다. 1993년 지역노후화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모리빌딩의 의견을 수용한 도쿄도(東京都)의 개입 하에 민간사업자, 공공조직,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오랜 협의와 설득 끝에 1998년 ‘롯데(六本木) 로쿠초메(六丁目)지구 재개발준비조합’이 설립되어 2000년 사업을 착공해 2003년 완공에 이른다. 롯본기 힐즈 사업의 성공은 한마디로 책임 있는 민간 개발업자의 참여와 공공조직의 개입,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감시가 잘 어우러진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도시문제와 도시공동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은 민간의 효율성과 지지체의 공공성,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가 잘 어우러져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저자 역시 1970년대 프랑스에서 추진한 주택환경개선사업을 소개하면서 도시개발사업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예컨대 프랑스의 시민

공동주택은 이혼가정, 신체장애자,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게 입주우선권이 주어지고 임대료의 70% 이상을 정부가 지불해주어 기업들 역시 장기적인 임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376쪽). 하지만 청개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가든 파이프 사업이 엄청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 서울시의 주관 하에 무리하게 추진되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를 새삼스레 여기서 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조직과 지역공동체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한 대목은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민간사업자의 책임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는 더욱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도시를 인간 삶의 정주공간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낡은 주택을 대신해 새로운 주거지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주거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의 삶에 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저자가 제시한 대로 “집은 가족이 함께 사는 추억과 기억의 집합장소로서 기억이 살아 있는 집이 되기 위해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바로 지역 주민”이다(429쪽). 이처럼 도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역주민 내지 도시공동체의 중요성은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서구에서는 오랫동안 시민들의 투쟁과 참여를 통해 도시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식과 근대도시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단기간에 국가 주도의 계획과 주도 하에 말 그대로 새로이 도시를 ‘건설’ 해온 한국에서는 도시 내에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도 시간도 없었다. 아니 지역공동체는 용산참사나 여타 재개발사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듯이 아직까지도 기업 활동에 저해되면 언제나 해체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현재 한국의 도시에서 지역공동체란 예전서부터 무언가 근거를 가진 존재라서 복원해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 오히려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어내야 하는 구성물로 이해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 그렇다면 굳이 왜 도시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하는가?

19세기 후반 이후 새롭게 등장한 근대 산업도시는 인간의 생활방식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전의 농촌공동체를 떠나 도시에 모여 살게 된 이주민들은 자유로운 계약에 의거하여 근대적인 노동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공동체를 벗어난 도시에서 개인의 삶은 극도로 파편화되어 마치 “껍데기를 잃어버린 달팽이”와 같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혼자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집단과 사회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론적 이유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도시공동체의 부재는 오늘날 현대 도시인에게 우울증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저자는 영국 정신분석학자 랭의 연구성과를 인용해 파편화되고 단절적인 도시인의 삶이 정신적 불안증세의 주된 요인임을 언급하였다(417-418쪽). 이처럼 일차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공동체는 기업의 사욕과 정치가의 무지에 대항해 우리가 사는 도시 공간에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주체이다.

현재 인천에서는 스페이스빔을 중심으로 배다리골 일대의 도시공동체 재생운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조금씩이나마 인천문화재단을 비롯해 인천시 등의 공공조직에서 이같은 도시공동체 재생운동을 후원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도시공동체들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능동적으로 활동해 도시재개발문제를 비롯해 도시문제의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몫일 것이다.

학술지 원고 투고 안내

지역연구(지유공모) 원고모집 공고문

[인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인천연구] 논문 투고 신청서

[인천연구] 논문심사규정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 학술지 [인천연구] 연구윤리규정

학술지편집위원회 회칙

지역연구(자유공모) 원고모집 공고문

● 「인천연구」의 성격과 구성

「인천연구」는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로서, 창의적인 연구결과 및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동향·전망을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라 출간하는 논문집입니다.

「인천연구」의 구성은 <기획논단>과 <일반연구>, <서평>의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기획논단>과 <서평>은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주제와 필진을 선정하여 집필의뢰가 이루어지며, <일반연구>는 자유투고 논문을 선별하여 게재하게 됩니다.

● 모집원고 종류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타 도시, 국가 등 지역발전에 관련된 논문
타 학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이미 기고된 논문은 다시 기고할 수 없습니다.

● 원고 작성 방법

원고는 필히 「인천연구」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원고 제출 시 인천연구 투고신청서도 함께 작성해 보내야 합니다.

● 원고 분량

200자 원고지 100장이내(B5 15 ~ 20장)

● 원고접수

상시접수

논문과 투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정식접수가 됩니다.

제출된 논문이 본지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의 구성항목을 모두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필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수정 보완된 논문을 다시 제출했을 때 정식접수가 됩니다.

접수된 논문은 심사자5인 위촉 → 심사 → 논문수정 → 재심 또는 2차 심사 → 논문수정 → 논문 수정확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원고제출방법

원고는 이메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메일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원고가 든 CD와 원고 출력본 4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처

우편접수 우)404-190 인천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발전연구원 도시인문학센터 「인천연구」담당자 앞

전화 : 032-260-2775 / 팩스 : 032-260-2679

이메일접수 E-mail : k9839@idi.re.kr

※ 게재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인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2007년 3월 12일 제정
2008년 4월 25일 개정
2008년 8월 20일 개정
2011년 5월 6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I. [인천연구]의 성격과 구성

1. [인천연구]는 인천발전연구원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로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은 창의적인 연구결과 및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동향·전망을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을 말한다.
2.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문헌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II. 논문투고 및 게재절차

1. 원고는 상시접수하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본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심사용 논문출력본 4부(그림, 표, 사진 등이 포함된 원고)와 논문이 수록된 CD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메일(E-mail)을 통해 원고를 제출한 투고자는 원고출력본과 원고가 수록된 CD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투고자는 본지의 투고신청서에 논문제목, 목차, 주저자의 이름, 소속 및 직급/직위,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와 함께, 원고의 주요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 뒤에는 참고문헌과 국문초록 및 영문 초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4.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이름, 교신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한다.
5. 접수된 원고 중 본지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방법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투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접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III. 논문의 기본요건

1.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한글·영문), 필자명(한글·영문), 소속기관과 직위, 주소(주택 및 직장), 전화 및 팩스번호(E-메일 주소 포함),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2. 논문의 내용은 제목(한글 및 영문), 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3. 주제어는 5개 이내로 한정한다.
4. 논문의 본문 원고분량은 글, 그림 및 표, 사진을 포함해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로 한정한다.(단, B5용지1매는 (81Columns × 27Lines 기준) 원고지 4매에 해당)
5. 원고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초록은 B5용지 15행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며, 논문명, 저자명, 초록 및 주제어는 모두 국문과 외국어(영어)로 표기해야 한다.
7. 모든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의 편집체제를 따라 작성해야 한다.

편집 용지	- 용지 B5, 단면, 좁게 - 여백 : 상/하 15, 좌/우 20 -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문단 모양	- 여백 : 좌/우 0, 상/하 0 - 줄간격 : 160 - 들여쓰기 : 2 - 양쪽 혼합, 낱말간격 0	
글자 모양	큰 제목	- 글꼴 : 신명조 (또는 휴먼명조), 진하게 - 크기 : 18 point - 장평 : 100, 자간 : 0
	중간 제목	- 글꼴 : 신명조 (또는 휴먼명조), 진하게 - 크기 : 14.5 point - 장평 : 100, 자간 : 0
	본문	- 글꼴 : 신명조 (또는 휴먼명조) - 크기 : 10 point - 장평 : 100, 자간 : 0
	기타	- 각주크기 : 9 point - 목차크기 : 10 point - 이 름 : 14 point

IV. 본문 및 참고문헌 작성요령

- 내용목차의 번호는(I. 1. 1) (1) ①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 표와 그림에는<표 1>, <그림 1> 등과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표 제목은 해당표의 상단 중앙에 맞추기로, 그림제목은 해당그림 하단에 중앙 맞추기로 표기해야 한다.
- 본문 주는 내용 주와 참고문헌의 주로 구분된다.
 - 내용 주(content notes)는 본문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체에 걸쳐서 일련번호를 매기고 본문 하단에 각주로 처리해야 한다.
 - 참고문헌 주(references)는 인용 또는 참고한 자료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본문 중에는 괄호 안에 저자의 이름, 출간연도, 인용한 쪽을 제시하며 그 자료에 대한 완전한 문헌정보는 논문의 말미에 첨부해야 한다.
- 참고문헌의 작성양식
 -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으로 구분하며, 저자의 성에 따라 한글 및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해야 한다.
 - 참고문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저자, 출판연도, 제목, 권, 호, 쪽, 출판 장소와 출판사명 등이다.
 - 서명은 한글 및 동양문헌은 「」로 묶고, 서양문헌은 이탤릭체(기울림체)로 표기한다. 논문(학위논문, 기사포함)은 출판 연도 다음에 해당 논문 명을 “”로 묶어 표기해야 한다.

(4) 참고문헌 속의 모든 외국 저널은 약어대신 풀어서 써야한다.

V. 기타사항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땐 풀어쓰고 그 다음 번부터는 약어를 사용하여도 된다.
2. 필자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을 지칭할 때 '졸고'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필자의 이름을 적어 밝혀야 한다.
3. 국문원고의 경우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와 외국어는 괄호 안에 표기해야한다.

VI. 발간

1. 원고교정
 - (1) 편집위원회는 오타자, 비문(非文), 논리 전개의 오류 등을 교정하거나,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원고의 게재순서
 - (1) 원고의 게재순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 확정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료 지급
 - (1) 채택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단, 원고료는 실제 게재된 후에 지급하고, 게재 당시의 연구원 일반 예산-학술지 발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행 횟수와 시기
 - (1) 본지는 1년에 두 번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5. 발행 부수
 - (1) 본지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6. 발행일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발행한다.

[인천연구] 논문 투고 신청서

- ▷ 투고자는 아래 투고신청서를 작성해서 논문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은 본지의 원고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원고작성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www.idi.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 개요

논문제출일자	년 월 일
논문 구분	국문논문 () 영문논문 () *해당란에 표시함
논문 제목	(국문)
논문 제목	(영문)
논문 요약 (국문)	

● 주저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영문)
소속 및 직급/직위	(소속)	(직급 또는 직위)
학 력		
학 위		
전 공		
경 력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		
연락처	(사무실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지택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원고료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 교신저자 인적사항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함)

*저자를 대신해 원고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성명		
소속 및 직급(직위)		
학 력		
학 위		
전 공		
경 력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		
연락처	(사무실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택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저자를 대신해 원고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성명		
소속 및 직급(직위)		
학 력		
학 위		
전 공		
경 력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		
연락처	(사무실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택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기타 사항

(원고제출 및 원고내용에 관해 특별히 언급할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연구] 논문심사규정

2008년 9월 10일 제정

2011년 5월 6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1. 심사대상

- (1) 인천연구에 게재하려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심사절차

- (1) 심사 :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 (2) 재심사 :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가 필요할 경우,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 중 1인이 저자의 원고 수정 후 재심사를 한다.

3. 심사위원 선정

- (1) 편집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공자 중에서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4. 논문심사 기준

- (1)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되 본지의 논문심사의 견서의 양식에 맞춰 다음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본지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방법의 준수 여부
 - 주제의 독창성
 -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타도시, 국가의 연구
 - 논문 및 체제의 일관성
 - 선행연구의 검토
 - 논문의 학술적 또는 정책적 기여도

5. 심사위원의 익명성

-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외부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할 수 있다.

※ 논문심사 판정기준표

	심사결과			비 고
게재가	○	○	○	게재확정
	○	○	△	게재확정
	○	○	×	게재확정
재심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이상이 '게재가' 면 게재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가' 면 게재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이상 '게재가' 면 게재
게재 불가	×	×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6. 논문심사 평가 기준

- (1)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5가지 정도로 항목을 나눠서 항목별로 A, B, C, D로 판정한 후 '게재가' (A: 4점), '수정 후 게재' (B: 3점), '수정 후 재심' (C: 2점), '게재불가' (D: 1점) 네 가지 등급 중 하나로 최종판정.
- (2) 심사위원 3인중 2인 이상이 '게재가' (A)로 판정한 논문을 최우선으로 게재하고, 심사위원 3인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C) 혹은 '게재불가' (D)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3) 항목별로 A, B, C, D를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값이 3.0미만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게재한다.
- (4) 심사결과 및 판정에 대해 필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의를 검토하여 이의 사유가 인정될 만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을 의뢰한다

	심사결과			총점	평균	비 고
게재가	A	A	A	12	4.0	게재 확정
	A	A	B	11	3.7	
	A	A	C	10	3.3	
	A	B	B	10	3.3	
수정후 게재가	A	A	D	9	3.0	수정 후 게재
	A	B	C	9	3.0	
	B	B	B	9	3.0	
수정후 재심	A	B	D	8	2.7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 '게재가' 면 게재
	A	C	C	8	2.7	
	B	B	C	8	2.7	
	A	C	D	7	2.3	재심을 의뢰하여 2인 이상 '게재가' 면 게재
	B	B	D	7	2.3	
	B	C	C	7	2.3	
	A	D	D	6	2.0	
	B	C	D	6	2.0	
	C	C	C	6	2.0	
게재 불가	B	D	D	5	1.7	게재 불가
	C	C	D	5	1.7	
	C	D	D	4	1.3	
	D	D	D	3	1.0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 학술지 [인천연구] 연구윤리규정

2009년 4월 15일 제정

제1장 연구윤리규정 제정 배경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광역시가 능동적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술지「인천연구」를 발간한다. 「인천연구」의 발간은 도시정책 관련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함으로써 지역 아카데미즘의 기초를 마련하고 인천시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

또한 「인천연구」연구윤리규정의 제정은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하여 「인천연구」의 편집위원은 물론 연구논문의 저자와 평가자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수준을 명백히 밝혀줌으로써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함이다.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으로 지켜져 오고 있는 규정들을 정리한 것이지만, 모든 관련자에게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편집에 대하여 연구원이 추구하는 윤리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2장 연구논문 윤리규정

제1조(사회적 책임)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 활동을 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의 복원, 창출, 보호 관리 등의 연구활동이 사회 공익적 책임을 수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 연구윤리)

연구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활동 수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3조(보편성의 원칙)

연구자는 어떠한 이유론든 차별받을 수 없으며,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조(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제5조(법령의 준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명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조(연구대상의 존중)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자연환경의 복원, 창출, 보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7조(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

연구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8조(저자 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 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 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

제9조(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10조(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연구 및 지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연구의 독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자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

제11조(연구환경 조성)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 자유, 공정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적극 참여한다.

제12조(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 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저자 윤리규정

제13조(표절, 위조, 변조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연구 업적의 명기)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 논문의 순서는 저자의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하며 단순히 특정 직책 또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15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

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제16조(인용 및 참고 표시)

-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주석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장 논문심사자 윤리규정

제17조(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8조(저자의 독립성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되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중복심사)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또는 중복심사 중인 경우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0조(심사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심사자는 심사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전에 심사논문의 내용을 타 연구에 인용해서는 안 된다.

- 부 칙 -

이 지침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술지편집위원회 회칙

1.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보좌하기 위해 별도의 편집 간사를 둘 수 있다.
- (2) 약간 명의의 지역 의원과 해외의원 등을 둘 수 있다.

2. 임무

-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편집, 발간 등 「인천연구」의 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2) 또한 「인천연구」의 편집 및 발간 규정, 편집위원회 회칙 등 「인천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제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3.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선출기준

- (1) 편집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 편집위원은 인천발전연구원 각 연구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 및 위원, 간사의 역할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모집, 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발간 등 「인천연구」의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자 추천 및 의뢰,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중재,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원고수정의뢰 및 원고 수정보완 여부 확인, 최종게재논문의 선정, 게재순서의 결정, 본지의 발행부수의 결정, 원고 게재료 및 심사료 수준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 (3) 간사는 위원장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며, 편집위원회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투고원고 접수, 심사결과 통보, 「인천연구」의 출간·배포, 원고 게재료 및 심사료 지급서류 작성 등 「인천연구」발간에 따른 제반 회계 및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 (4)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5.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1)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고, 편집위원의 유고시에는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보선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 회의

- (1) 편집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의 결석시에는 출석위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진행한다.
- (3)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위임 포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7. 회의비 지급

- (1) 편집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인천발전연구원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